


정책분석 11-01

주요국 예산안 2011

2011. 2

 재정 분석 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은경 연구위원

<u>공동연구원</u>	임현정	(미 국)
	김윤지	(캐나다)
	최영은	(일 본)
	송 영	(프랑스)
	이수연	(독 일)
	권나현	(영 국)
	김은정	(호 주)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총 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2. 세계 재정전망	7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9
7개국 종합	19
1. 미국 (FY 2012: 2011. 10~2012. 9)	22
2. 캐나다 (FY 2011: 2011. 4~2012. 3)	25
3. 일본 (FY 2011: 2011. 4~2012. 3)	27
4. 프랑스 (FY 2011: 2011. 1~2011. 12)	29
5. 독일 (FY 2011: 2011. 1~2011. 12)	31
6. 영국 (FY 2011-12: 2011. 4~2012. 3)	33
7. 호주 (FY 2010-11: 2010. 4~2011. 3)	35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국	39
1. 경제 및 재정전망	42
가. 경제전망	42
나. 재정전망	43
2. 예산기조	48
3. 예산안 내용	49
가. 세입	49
나. 분야별 예산	51
4. 주요 재정정책	57
가. 국가경쟁력 제고	57
나. 재정건전화	58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62
II. 캐나다	64
1. 경제 및 재정전망	68
가. 경제전망	68
나. 재정전망	69
2. 예산기조(Budget 2010)	70
3. 예산안 내용	72
가. 세입	72
나. 세출	74

4. 주요 재정정책	76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76
나. 재정건전화	78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81
Ⅲ. 일본 (FY2011: 2011. 4~2012. 3)	84
1. 경제 및 재정전망	88
가. 경제전망	88
나. 재정전망	90
2. 예산기조	91
3. 예산안 내용	92
가. 세입	92
나. 세출	94
4. 주요 재정정책	95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95
나. 재정건전화	97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98
Ⅳ. 프랑스	103
1. 경제 및 재정전망	106
가. 경제전망	106
나. 재정전망	107
2. 예산기조	109

3. 예산안 내용(LF 2011)	110
가. 세입내역	110
나. 세출내역	110
4. 주요 재정정책	113
가. 재정건전화	113
나. 복지지출 관리 정책	115
V. 독일	120
1. 경제 및 재정전망	123
가. 경제전망	123
나. 재정전망	124
2. 예산기준	126
3. 예산안 내용	127
가. 세입내역	127
나. 세출내역	128
4. 주요 재정정책	131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경제성장 정책	131
나. 재정건전화	132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34
VI. 영국	135
1. 경제 및 재정전망	139
가. 경제전망	139

나. 재정전망	140
2. 예산기조	143
3. 예산안 내용	145
가. 세입	145
나. 세출	147
4. 주요 재정정책	152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52
나. 재정건전화	153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55
VII. 호주	159
1. 경제 및 재정전망	162
가. 경제전망	162
나. 재정전망	163
2. 예산기조	167
3. 예산안 내용	171
가. 세입내역	171
나. 세출내역	173
4. 주요 재정정책	177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77
나. 재정건전화	178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79

표목차

<총 론>

<표 I-1> 세계 경제전망	4
<표 I-2>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8
<표 I-3>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	13
<표 II-1> 각 국 예산안 일정	19
<표 II-2> 2011년 재정전망	20
<표 II-3>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23
<표 II-4> 캐나다 경제전망(2010. 10)	25
<표 II-5> 캐나다 재정전망(2010. 10)	25
<표 II-6> 프랑스 2009-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	29
<표 II-7>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31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FY2012 예산안 경제전망	43
<표 I-2> FY2012 예산안 재정전망	45
<표 I-3> 분야별 세입전망	50
<표 I-4>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51

<표 I-5> 분야별 지출전망	54
<표 I-6>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55
<표 I-7> 비안보 재량지출 5년간 동결(FY2015까지) 효과 ...	58
<표 I-8> 향후 5년간 국방지출 삭감 내역	59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0년 10월 현재)	69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0년 10월 현재)	70
<표 II-3> 세입전망	73
<표 II-4> 프로그램지출 전망	75
<표 II-5>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78
<표 II-6> 캐나다 재정건전화 주요내용 정리(2009~2010년) ...	80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89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90
<표 III-3> FY201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92
<표 III-4> FY2010 조세 및 인지도입	93
<표 III-5> FY2011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94
<표 III-6> 연도별 후생노동성 예산	99
<표 III-7> 연도별 사회보장비 관련 예산	100
<표 III-8> 민주당의 복지 관련 정책 시행 여부	102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106

<표 IV-2> 프랑스 2009-2010년 재정 전망	108
<표 IV-3> 프랑스 2009-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	108
<표 IV-4> 프랑스 2009-2014년 부채비율 전망	109
<표 IV-5> 2010-2011 미션별 세출 내역	112
<표 IV-6>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117
<표 IV-7> 연금개혁법안 주요내용	119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123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10~2014년)	124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125
<표 V-4>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IMF/EU 전망)	126
<표 V-5> 독일정부의 향후 적자감축계획	127
<표 V-6> 연방정부 2011년도 예산	128
<표 V-7> 2011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129
<표 V-8> 재정건전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133
<표 VI-1> 영국 경제전망	140
<표 VI-2>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42
<표 VI-3> 경상세입	146
<표 VI-4> June Budget, Spending Review, OBR Autumn forecast 지출전망 차이	149
<표 VI-5> 총관리지출	150

<표 VI-6> 부처별지출한도(DEL)	151
<표 VI-7> Spending Review 2010의 복지급여 삭감 내용 ..	158
<표 VII-1>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162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164
<표 VII-3> 향후 4년간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166
<표 VII-4> FY2008-09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인 소득세 변화 추이	168
<표 VII-5> FY2010-11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172
<표 VII-6>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172
<표 VII-7> FY2010-11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전망 비교	174
<표 VII-8>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75

그림목차

<총론>

[그림 I-1] 세계 경제성장률	3
[그림 I-2] 세계 교역량	6
[그림 I-3] GDP 대비 부채 및 재정수지(2012년)	9
[그림 I-4] GDP 대비 부채비율 변화(2008~2011년)	12
[그림 I-5]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15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FY2012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39
[그림 II-1] 정부 재정수지 전망	79
[그림 II-2] 캐나다 전체정부 재정수지 및 GDP 대비 부채비율	80
[그림 II-3] 캐나다 고용보험료율 추이	83
[그림 IV-1] 재정 지출 추이	114
[그림 IV-2] 2010-2011 복지 재정 지출과 수입 추이	116
[그림 IV-3]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와 전망	118
[그림 V-1] 독일 연방정부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131

[그림 VII-1] FY2019-20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65
[그림 VII-2] 예산수지 전망(좌) 및 재정건전화 조치로 인한 예산수지 개선효과(우)	167
[그림 VII-3]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 내역	173
[그림 VII-4] FY2010-11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재원 배분	176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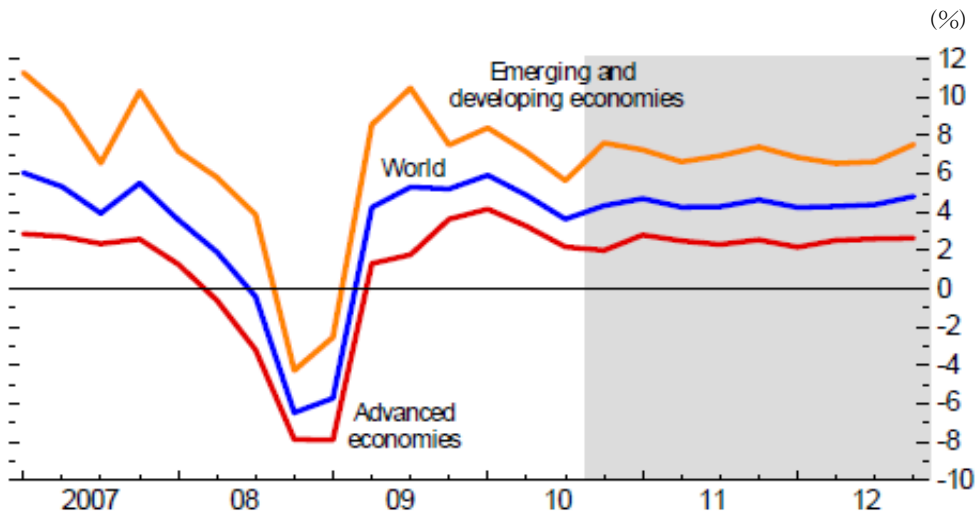
-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I. 세계 재정정책 흐름¹⁾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2011년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정상화 될 전망이지만 금융부문 부실 및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회복속도는 느릴 전망
 - (선진국) 2011-12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 이는 2010년 10월 전망보다 0.25%p 개선된 수치
 - 이는 2010년 말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경기부양책,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독일의 국내수요 진작에 기인
 - (개도국) 2011-12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6.5%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개도국 및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성장세(5.5%)가 두드러질 전망

[그림 1-1] 세계 경제성장률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1.1)

1) 본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0.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1. 1), IMF Fiscal Monitor(2010. 11), OECD Economic Outlook No. 88(2010. 11)을 발췌한 것임

- (미국) 2010년 말까지 침체상태에 있던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여 2011-12년에도 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상당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치지 않을 것
 -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기업투자와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어 민간소비도 회복될 전망
- (유럽) 통화정책 운용, 기업수익 향상, 금융시장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서서히 회복될 전망
 - 회복세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한 주변국보다 유럽 주요국에서 더 견고함
- (일본) 2011년 1사분기까지는 지난 가을 새롭게 발표된 경기부양책 및 제한적인 세제혜택 등으로 경기가 반등세
 - 그러나 2011년 중반부터는 공공지출 감소할 전망
- (기타 선진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
 - 호주는 민간소비와 주택가격 상승,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대 등 경기회복세 강화

<표 1-1> 세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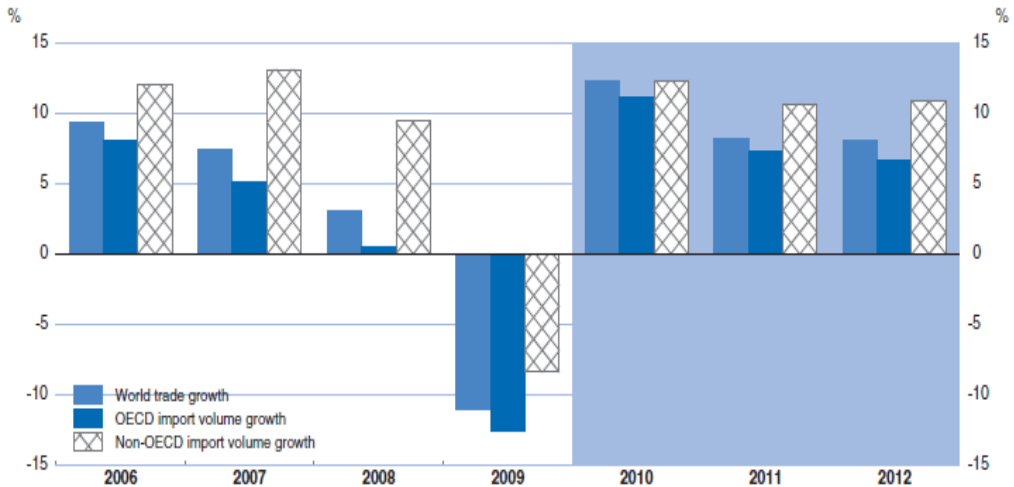
	(전년대비 %)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미국	-2.6	2.8	3.0	2.7	-2.6	2.7	2.2	3.1
유로지역	-4.1	1.8	1.5	1.7	-4.1	1.7	1.7	2.0
일본	-6.3	4.3	1.6	1.8	-5.2	3.7	1.7	1.3
캐나다	-2.5	2.9	2.3	2.7	N.A.	N.A.	N.A.	N.A.
중국	9.2	10.3	9.6	9.5	N.A.	N.A.	N.A.	N.A.
인도	5.7	9.7	8.4	8.0	N.A.	N.A.	N.A.	N.A.
중남미	-1.8	5.9	4.3	4.1	N.A.	N.A.	N.A.	N.A.
세계	-0.6	5.0	4.4	4.5	-1.0	4.6	4.2	4.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1. 1

OECD, Economic Outlook No. 88, 2010. 11

- (중국) 민간소비 증가를 통해 2011-12년 성장률은 9.6%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인도) 소비와 투자 증가로 2011년 중반까지 8.4%의 높은 성장률에 이를 전망
 - (기타 아시아) 성장률은 둔화되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중
 - 세계 교역량의 견조한 성장세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
 - (중남미) 상품수출과 차입을 통해 국내수요 진작, 향후 유리한 교역조건, 중국과의 교역강화, 지역간 공조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속할 전망
 - 브라질은 국내수요 진작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교역증가세는 약간 주춤한 상태
- 세계교역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012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OECD 국가들의 고정투자 증가로 교역량 증가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투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향후 혁신 및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음
 - 차입여건 개선, 보호무역주의 경계, 과도한 환율변동 방지 등을 통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

[그림 1-2] 세계 교역량



Note: The import volume figures include intra-region trade. Based on a trade in goods and services volume matrix in 2005, just over a half of global trade is within OECD countries, about a third between OECD and non-OECD countries and the rest between non-OECD countries.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88 databas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10)

□ 세계 부동산시장 회복세는 주춤한 상태이며, 특히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

- 미국은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 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실업과 더딘 경기회복세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영국은 2010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왔으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
-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2011년에도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 비유가 품목으로는 기후 등 자연요인으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할 전망

- 2011년 1월 업데이트된 IMF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유가는 배럴당 \$90로 전망하며

이는 작년 10월 전망치인 \$79보다 상당히 인상된 수치

- 2010년 말 기후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2011년 곡물가격이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물가상승률이 1.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도국은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과열 현상이 우려됨

2. 세계 재정전망

□ 2009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이나,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

- OECD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 대비 7.6%에서 2011년 6.1%로 감소할 전망이고 2012년에는 4.7%로 더욱 감소할 전망
 - 이는 각 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경기순환적 요소에 기인
- 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는 2011년 GDP 대비 100%를 초과할 것이고 계속 증가할 전망
- IMF에 따르면 G20국가의 2010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8%, 2011년에는 5.6%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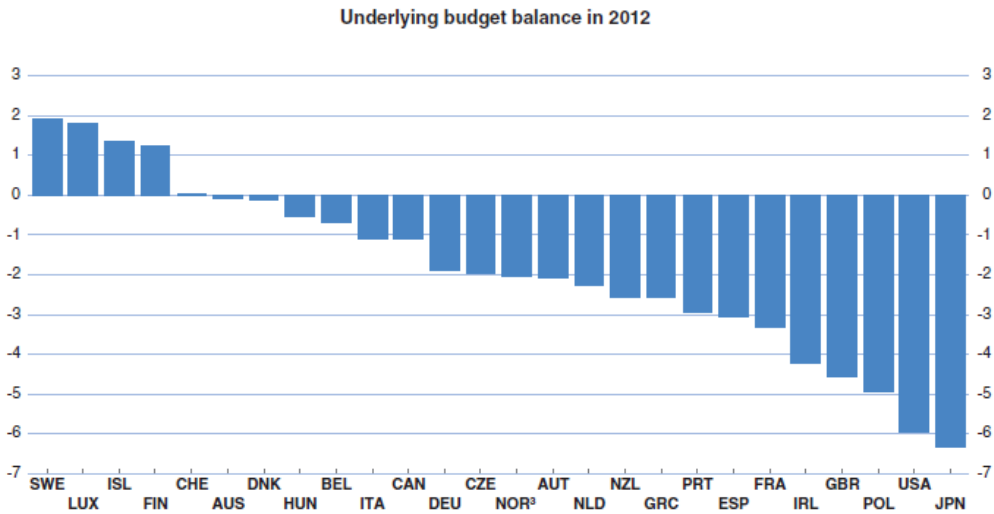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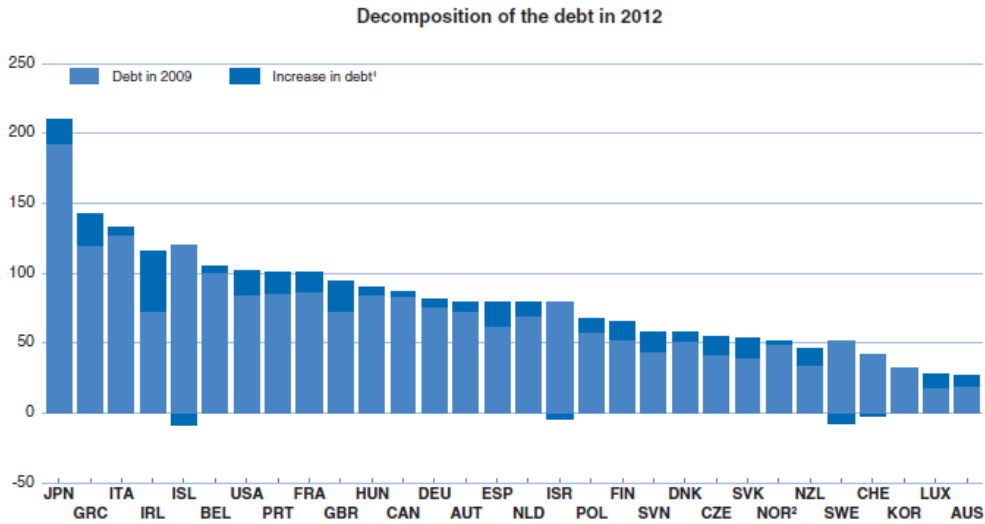
<표 1-2>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수지					
미국	-6.3	-11.3	-10.5	-8.8	-6.8
일본	-2.1	-7.1	-7.7	-7.5	-7.3
유로지역	-2.0	-6.2	-6.3	-4.6	-3.5
OECD 국가	-3.3	-7.9	-7.6	-6.1	-4.7
국가채무					
미국	71.1	84.4	92.8	98.5	101.4
일본	173.9	192.8	198.4	204.2	210.2
유로지역	76.0	86.3	91.6	94.8	96.3
OECD 국가	79.1	90.6	96.9	100.7	102.8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88, 2010. 11

[그림 1-3] GDP 대비 부채 및 재정수지(2012년)



1. This includes cumulated deficit for 2010-12, debt-increasing equity participations in companies and the impact of GDP growth.
2. Cumulated deficits correspond to mainland only.
3. As a percentage of mainland potential GDP.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10. 11)

□ OECD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우, 향후 재정정책의 효과성 및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부채 비율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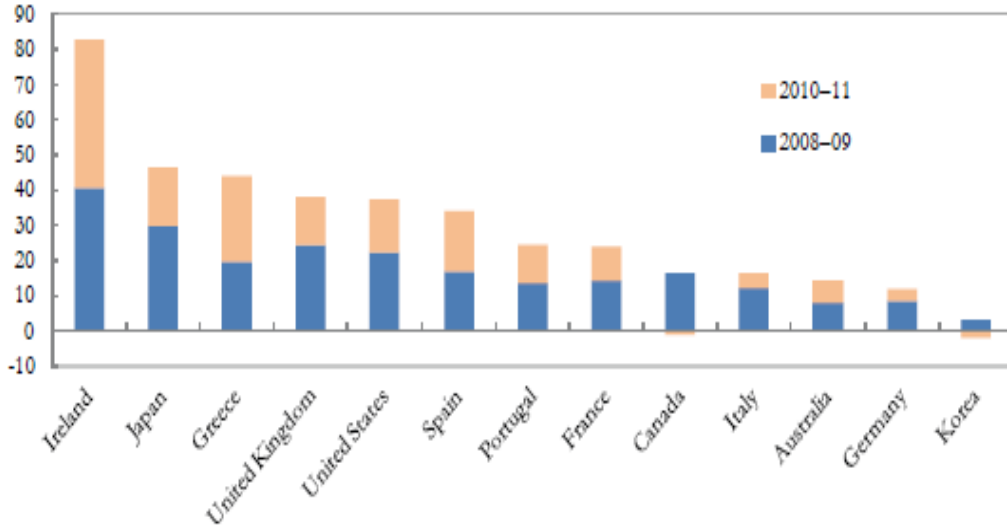
- 유럽의 경우, 재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화 실행
 - 안정과 성장 조약(SGP)에서 명시한 규율을 지키고 재정정책의 공조 및 감시 체제 강화
 - 각 국가의 예산을 사전에 'European semester'에 맞추고 ECOFIN에서 제시하는 국가별 권고지침을 예산에 반영할 것
 - SGP의 조기경보 기제 강화: SGP에서 명시한 재정목표를 지키지 않을시,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SGP 시행시 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GDP 대비 부채비율 60% 초과시, 부채 감축 목표 및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최소한의 퀄리티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가별 재정제도 강화: 재정목표의 법률화, 다년간 예산안 수립, 재정전망 시스템 개선 등

□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는 이미 계획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행해 옹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재정건전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 속도는 1) 재정여건, 2) 공공부채에 대한 재원조달의 용이성, 3) 경기회복 속도, 4)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감소 및 수입증대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미국) 2015년까지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 2015년 이후에는 부채비율 감축과 같은 목표를 도입해야 할 듯
 - (일본)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반으로 감축,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고령화 등 기타 재정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금 인상 등 수입증대 정책이 필요
 - (독일)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축을 목표로 하여 주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각 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에서 재정적자 감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 2010년부터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른 개도국(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재정적자 감소세가 빠름
 - 선진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지속하는 기조를 유지하는데, 유럽국가들의 경우 재정 출구전략을 시작하였음
 -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11년에도 경기부양책을 지속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었거나(한국),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그리스, 포르투갈) 재정출구전략을 시작한 국가들도 있음
 - 개도국의 경우,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는 경기부양책의 중단과 경기회복, 수출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아시아 개도국(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 경기회복과 재정건전화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적자 감소폭이 매우 작을 전망
 -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재정적자가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2011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할 국가로는 캐나다,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한국, 스웨덴, 스위스가 있음
 - 나머지 선진국은 2009~2011년 사이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미국, 일본은 그 증가폭이 클 전망
 - 개도국 중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채무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나 유럽국가(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들은 채무비율이 증가할 전망

[그림 1-4] GDP 대비 부채비율 변화(2008~2011년)



자료: IMF Fiscal Monitor(2010. 11)

- 위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2013년 혹은 2015년까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경제적 충격에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되 재정건전화 노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단년 및 다년도 예산안에 중장기적 지출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발표하고, 매년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량 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타임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가하는 부채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감축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2011년 재정적자 감축을 크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감축량이 감소(frontloading)하는 방식을 따름
 - 미국은 2012년 재정적자를 크게 감소시키고, 독일은 매년 일정량을 감축, 일본은 2011년 GDP 대비 0.5%p를 감축하고 차기년도에는 거의 감축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시행 예정

- 재정건전화 방식으로는 주로 지출 감소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지출감소 정책으로는 주로 임금삭감(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공무원 정원감축, 사회이전지출 감소(독일), 국방비 감축(독일, 미국, 영국)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중국 등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식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 증가가 50%를 차지하고 VAT와 소비세 증가가 25%를 차지
 - 환경세(독일, 아일랜드, 한국, 남아프리카), 수출입물품세(러시아) 등을 부과하여 세입 증대를 꾀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 노동시장에 왜곡을 줄이고자 함

<표 1-3>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

재정적자 (2009)	지출감축 위주	혼합 (지출감축과 세입증대)	세입증대 위주
High (GDP 대비 10% 이상)	아일랜드, 일본, 스페인, 영국	그리스, 인도, 미국	
Medium (GDP 대비 5~10%)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러시아	
Low (GDP 대비 5% 이하)	호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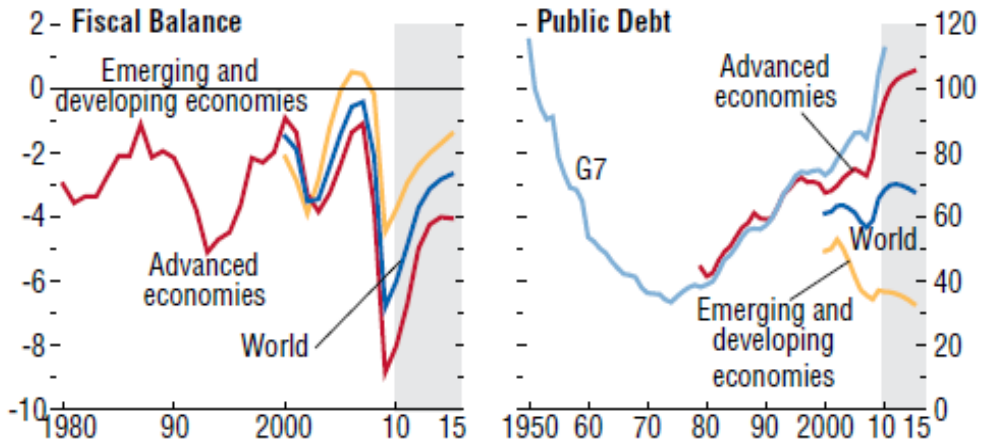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2010. 11)

-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시행되며 국가부채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인 부채총량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채감축 단계의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entitlement program) 관련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재정제도를 강화해야 함

- 연금개혁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거나 시행예정되어 있는데 반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의료개혁은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제도 강화 노력이 시행되고 있음
 - 독일: 금융위기 이전부터 헌법에 균형재정 목표 도입을 고려하였고 2009년 6월부터 시행
 - 영국: 2010년 5월, 재정책임위원회(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상설화하려는 법안 제출(2011년 7월 국왕의 재가를 받을 계획), 5년 중기재정 단위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법(fiscal mandate)을 확립하고 2015/16까지 GDP 대비 순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도 목표로 설정
 - 일본: 2010년 증반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PAYGO, 국채발행액 억제, 재정적자 감축 등 예산 수립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2011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을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출을 삭감하여 총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등 PAYGO 원칙을 따르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임)
 - 미국: PAYGO 도입,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인 재정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를 설립하여 2015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방안 구상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기능 상실

[그림 1-5]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10

- EU: 회원국의 재정상황 감독기능 강화, 구조조정,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국가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EFSF) 설립,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도입 준비, 재정규율 도입(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그러나 재정보고 및 전망, 위험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
 - 1~2개의 재정총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 예산 수립과 승인과정에서 타당한 방식을 적용

<참고 1> EU 차원의 재정건전화 노력

□ EU는 2010년 초반 그리스 재정위기를 겪으며 EU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2010년 5월부터 다양한 재정안정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

- (2010년 5월) EU 유럽이사회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정지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안 마련
 - EU 회원국들은 기존 SGP 재정준칙인 재정적자 GDP 대비 3%, 부채비율 GDP 대비 60% 규정을 엄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제재 메커니즘을 가동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내인 경우, 예방적 제재가 가동되어 회원국들은 재정수지 균형 혹은 흑자를 운영해야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인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초과하는 경우, 교정적 제재가 가동되어 기존보다 신속한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벌금부과, EU 보조금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재 메커니즘은 회원국 다수가 반대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역 다수결 방식(reverse majority rule) 채택
 - 지난 유럽위기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었던 일부 EU국가들의 경쟁력 하락 부분은 명목/실질단위로 측정된 노동비용 등의 선별된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 될 것이며, 이 또한 제재가 가능함

- (2010년 6월)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회원국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에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
 - EFSF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으로 독일 부채관리기구(DMO)의 도움을 받아 채권 및 다른 금융상품을 발행하며, 회원국들의 지급보증을 받아 4400억유로까지 자원조달이 가능
 - EFSM(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및 IMF와 함께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동 기구는 2013년 6월까지 향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 2010년 11월 28일,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에 EFSF는 2011-2012년에 걸쳐 177억유로 공급 합의

□ (2010년 9월) SGP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간 예산정책상 긴밀한 공조를 위해 2011년부터 European semester 제도 시행을 승인

- 동 제도는 각 회원국들의 주요 예산 및 구조적 정책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정하도록 하여, 경제정책 공조, 예산규율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매년 3월, EU에서는 직면한 주요 경제적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들에 대해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같은 해 4월, 각 회원국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국의 중기 예산 전략을 검토하고, 고용 및 사회통합 같은 분야에서 취할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 6월과 7월에 걸쳐 EC에서는 제출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다음해 회원국들의 예산 확정 전에 반영하도록 함

□ (2010년 10월) EFSF가 만료되는 2013년 중반부터 재정위험에 빠진 회원국들에게 구제금융 제공을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창설에 합의

- 현재 리스본조약하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할 수 없기 때문에 ESM을 출범하려면 조약 개정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EU 및 각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조성된 EFSF는 리스본조약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기구 형태
- EFSF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립되는 상설기구인 ESM은 재정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에는 EC, ECB, IMF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동성 제공

-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민간채권단과 IMF 규율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계획안을 협상해야 하며, 이후 ESM은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음
- 2013년 중반부터 유로지역에서 발행되는 모든 국채에 집단적 조항(CACs, Collective Action Clauses)을 삽입하여, 한 회원국이 발행한 모든 국채는 협상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채권자들은 다수결을 통해 지불조건 등에 대한 합법적 수정이 가능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7개국 종합

- <각국 예산안 분석>에서는 주요 7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의 2011년 혹은 2011-12년 예산안을 분석하였으나, 예산주기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 영국, 호주는 2010년 봄에 발표한 FY2010-11 예산안을 분석하였음
 - 따라서 캐나다, 영국, 호주의 경우, 2011년 1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정부의 입장이 FY2010-11 예산안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 반면, 미국은 가장 빨리 FY2012 예산안을 발표하므로, 향후 경제 및 재정전망 등 다른 국가들의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는 변수들을 살펴 볼 수 있음

<표 II-1> 각 국 예산안 일정

국가	예산안	회계년도	예산안 발표 시기
미국	FY2012	2011. 10 - 2012. 9	2011. 2. 14
캐나다*	FY2010-11	2010. 4 - 2011. 3	2010. 3. 4
일본	FY2011/12	2011. 4 - 2012. 3	2011. 1. 24 (국회심의 개시)
프랑스	FY2011	2011. 1 - 2011. 12	2010. 12. 20
독일	FY2011	2011. 1 - 2011. 12	2010. 11. 26
영국*	FY2010-11	2010. 4 - 2011. 3	2010. 6. 22
호주*	FY2010-11	2010. 7 - 2011. 6	2010. 5. 11

주: *는 2010년 봄에 발표한 FY2010-11 예산안을 분석하였음

- IMF Fiscal Monitor(2010년 10월)에 발표된 2011년 재정전망(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에 따르면, 주요 7개국은 2011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국가부채는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에서는 계속 증가할 전망

<표 11-2> 2011년 재정전망

국가	GDP 대비 재정수지(%)		GDP 대비 국가부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미국	-11.1	-9.7	92.7	99.3
캐나다	-4.9	-2.9	81.7	80.5
일본	-9.6	-8.9	225.8	234.1
프랑스	-8.0	-6.0	84.2	87.6
독일	-4.5	-3.7	75.3	76.5
영국	-10.2	-8.1	76.7	81.9
호주	-2.8	-0.8	21.9	23.7

□ 미국,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한 호주 및 유럽 3개국(독일, 프랑스, 영국)은 2011년 본격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 및 대응방식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먼저 미국은 2012년 예산안에서 미래 경제동력에의 투자와 더불어 향후 10년간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재정건전화 목표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음

-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분야(교육, 인프라, R&D)에 대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

- 2021년까지 재정적자를 3.1%로 낮추겠다는 목표(2010년 현재 11%)는 실현가능한 것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정으로 하여 설정

- 베이붐세대가 은퇴하고 연금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 일본은 2011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 초반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고용과 성장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을 취함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고용을 제외한 복지지출을 대폭

늘렸는데 반해 총지출 증가율은 0.1%에 그침

- 즉, 복지지출을 증가시킨 대신 다른 지출항목들(특히 공공사업, 지방교부금, 경제 긴급대응 예비비 등)을 대대적으로 삭감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양호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2개년 경기부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세출이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15-16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실업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중
- 호주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양호하고, 경기부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캐나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건전화를 꾀하고 있음
 - 2009년 초, 경기부양책을 수립할 때도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주력하는 정책을 세우면서도, 경제가 회복되면 바로 지출증가율을 통제하도록 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재정전략을 수행
 - 따라서 2009년 경기부양책 이후, 2010년부터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통제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FY2012-13에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 전망
-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하 유럽 3개국은 2011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약간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감소 등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
 -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 7.7%였던 재정적자(프랑스 정부 통계)를 2011년 4.3%까지 대폭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대대적인 정부지출 감소 및 복지지출 감소 정책을 시행할 예정
 - 각종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키고,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0.6%로 설정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증가율 3%로 통제, 연금개혁 등을 통해 의무지출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지출 축소를 피함

- 독일은 2011년 예산이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예산임을 분명히 하고, 거의 모든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특히 복지지출 관련 예산삭감이 가장 큰 것이 눈에 띈
 - 노동 및 사회복지 예산을 2010년 대비 8.3%나 삭감(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지급하던 연금보험 삭감, 실업수당 축소, 양육보조금 폐지 등)하였고, 보건 및 가족지원, 재무부 및 교통건설부 예산도 삭감하였음
 - 이러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예산은 7.2%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증가할 유일한 항목
- 영국은 복지지출 감소 등 지출을 삭감하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복지혜택은 증가하였고, 법인세 인하, 인프라 구축,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성장을 위한 지출은 증가 허용
 - 수령연령 인상, 아동급여 동결, 사회보장급여 한도 제한 등을 시행

1. 미국 (FY 2012: 2011. 10~2012. 9)

<input type="checkbox"/> 교육, R&D 투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2011년과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재정전망)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FY2012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조 1,010억달러 전망

<표 II-3>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¹⁾	2011	2012	2013	2014
실질 GDP 성장률	2.7	3.6	4.4	4.3
CPI	1.3	1.8	1.9	2.0
실업률	9.3	8.6	7.5	6.6
재정전망 ¹⁾ (GDP 대비)	2011	2012	2013	2014
재정수입	14.4	16.6	17.9	18.7
재정지출	25.3	23.6	22.5	22.4
재정적자	10.9	7.0	4.6	3.6

주 1) 경제전망: 1월 1일~12월 31일, 재정전망: 10월 1일~9월 30일(회계연도)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예산기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

- 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② 재정건전화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FY2012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교육, 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주요 재정정책

- 국가경쟁력 제고
 - 교육,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
- 재정건전화

- 비안보 재량지출 및 공무원 임금 동결, 재정사업 통폐합, 국방지출 삭감과 함께 세제개혁,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2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 개혁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다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등을 삭감

2. 캐나다 (FY 2011: 2011. 4~2012.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0년 10월 현재, 2011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 실업률은 7.7%, 물가는 2.2%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1 재정적자는 298억캐나다달러(GDP대비 1.8%)로 전망하며 정부 부채는 35.3%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FY2015에는 30.8%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표 II-4> 캐나다 경제전망(2010. 1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위 : %) 2010 ~2014
실질GDP 성장률	3.0	2.5	2.8	2.9	2.6	2.5	2.8
실업률	8.0	7.7	7.4	7.0	6.8	6.6	7.4
소비자물가	1.7	2.2	2.1	2.1	2.0	2.0	2.0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표 II-5> 캐나다 재정전망(2010. 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총세입	2,325	2,463	2,612	2,777	2,932	3,059
총지출	2,778	2,761	2,825	2,892	2,950	3,033
재정수지	-454	-298	-212	-115	-17	26
부채	5,645	5,942	6,155	6,270	6,287	6,261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0 총세입은 2,32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 FY2011에는 2,463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6%)로 증가하며 차후 연평균 5.6%씩 상승할 전망
- (세출) FY2010 프로그램지출은 2,46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3%)이며 경기부양책이 종결되면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FY2015에는 GDP 대비 13.0%로 하락할 전망
 - 이전지출비용, 자본상각 및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된 직접 프로그램지출(direct program expenses)은 FY2011에 전년대비 56억캐나다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경기부양책 종료시점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차츰 감소하고 기계·장비 구입으로 동 기간 자본 상각비용은 소폭 증가
 - 기타 직접 프로그램지출로 근로자연금 및 혜택, 캐나다 국방부의 임금 외 지출, 약성부채 공제액 등이 포함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정부는 변경된 캐나다 연금계획(CPP)에 대한 최종 승인(royal assent)을 받아 2011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 연금 납부액을 증가시킬 전망
- 정부는 지난 2년 간 소득 100달러 당 1.73달러로 동결시켰던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를 2011년에는 소득 100달러 당 5센트, 2012부터는 연간 10센트씩 인상하기로 함

3. 일본 (FY 2011: 2011. 4~2012. 3)

□ 경제 및 재정전망

-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왔던 일본 경제는 2011년도에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재정 악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 불안요소들이 존재
- 더불어, 세계경제가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2011년도에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여, 1%대의 낮은 성장률로 예측
 - 일본 중앙은행 1.8%, 국제통화기금(IMF)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 도쿄미쓰비시은행 1.0%, 미즈호은행 1.3%, 노무라증권 1.2%
- 계속되는 위기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2011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1%를 기록할 전망
- 2011년도 채권잔액은 2010년 대비 약 26조엔 증가할 전망 (GDP 대비 138%)

□ 예산기준: 2011년 예산은 정권 교체 후 최초의 본격적인 편성으로 지난 6월에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구성의 네 가지 기준 및 틀을 발표

- i. 각 부처는 디플레이션 극복하고 경제성장 촉진 사업, 고용확대 사업, 인재육성 및 국민생활 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해야 함
- ii. 낭비를 근절하도록 총예산 편성
- iii. 2010년 6월에 발표한 「재정운영전략」에 따라 세출대상 경비는 약 71조엔, 국채발행액은 약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iv. 각 부처 간의 예산요구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예산편성 전반의 투명성 강화

□ 예산안 내용

- FY2011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124억엔(0.1%) 증가한 92조 4,116억엔 수준으로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동일

- FY2011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약 71조는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 조치

- 1단계: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 (2010. 9. 9)
 - 급속한 엔고 및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고용 대책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에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2단계: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 (2010. 10. 8)
 - 2011년도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 경계”를 위한 시책사업을 1) 고용 인재 육성, 2) 신성장 전략의 추진 가속, 3) 육아·의료·개호·복지 강화, 4) 지역활성화·사회자본 정비·중소기업 대책, 5)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5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추진
- 3단계: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2010. 12. 16)
 - 법인세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 5%p 인하
 - 중소기업 경감세율을 3%p 할인

○ 재정건전화

- 재원확보 원칙(PAYGO 원칙), 재정적자 감축 원칙 등 5가지 기본원칙을 따르는 「중기재정운영전략」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음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복지감축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위기 후에도 일본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 관련 비용 중 특히, 자녀수당 확대를 중점으로 복지부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6,693억엔(13.2%) 정도 크게 증가

4. 프랑스 (FY 2011: 2011. 1 ~ 2011. 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0년 2사분기부터 0.7%의 성장률(1사분기 성장률 0.2%)을 기록하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
 - 2010년과 2011년, 프랑스의 경제는 각각 1.5%와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할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 2010년 7.7%이던 재정적자가 2011년 4.3%로 크게 감소하고, 2014년 1.8%까지 개선될 전망

<표 II-6> 프랑스 2009-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유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대비 세출	21.4	24.6	20.4	19.8	19.4	18.9
GDP 대비 세입	15.1	16.9	16.1	16.5	17	17.1
GDP대비 재정수지	-6.2	-7.7	-4.3	-3.4	-2.4	-1.8
재정수지	-117.6	-150	-86.4	-70.7	-52.3	-42.3
GDP 대비 국가부채 ¹⁾	78.1	82.9	86.2	87.4	86.8	85.3

주: 1)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자료: LPPF 2011-2014

- 그러나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2010년 GDP 대비 82.9%에서 2011년 86.2%로 증가할 전망

□ 예산 기초

- 2011년 예산법안(LF 2011)은 2% 성장률과 1.5% 물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지출 안정화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GDP 대비 6%(916억유로)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1년 순세입은 201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으로 인한 5.6%의 순세입 증가와 세제혜택 축소 정책으로 인해 17억유로 세입 증가
- (세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목표로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거의 유사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채무와 연금 관련 비용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로 연평균 0.6%의 지출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되는 100억유로에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 (2011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80억유로의 새로운 자원마련과 지출 통제(의료비 지출 통제, 연금개혁) 등으로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자 함
 - 의료 관련: 의료비 지출증가율의 통제 강화(의료보험의 효율성의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 등을 통해 2011년 의료비 지출증가율 3% 목표)
 - 연금 관련: 201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연금개혁법은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도 65세에서 최저 67세로 늦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5. 독일 (FY 2011: 2011. 1~2011. 12)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6.7%로 전년대비 0.6%p 하락, 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망) 2011년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3,058억유로로 추정되며,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574억유로,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39.7%나 감소

<표 II-7>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경제전망: 전년대비%, 재정전망: 10억유로, 재정수지: %)

경제전망	2009	2010	2011
실질GDP성장률	-4.7	3.7	2.2
실업률	7.5	7.3	6.7
CPI	0.2	1.1	1.8
재정전망	2009	2010	2011
재정지출	292.3	319.5	305.8
재정수입 중 신규차입	34.1	80.2	48.4
재정수지	-3.0	-3.5	-2.3

경제전망 : EU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0. 11

재정전망 : 독일 재무부, 2010. 12

재정수지 : IFO(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Economic Forecast, 2010. 12

□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긴축예산과 재정건전화계획 실시하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차입 규모를 줄여 2016년까지 재정목표(GDP의 0.35% 이하)를 달성할 계획
-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1년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
- (세출) 세출예산은 3,058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규모이며, 특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절감분(8.3%)이 가장 큼

□ 주요정책

-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 2010년도 독일경제는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2011년도부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정책을 실시
- (재정건전화)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Zukunftspaket)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를 통해 연방 및 주 정부의 현 재정상황과 재정운용 계획을 파악하고, 예산 모니터링 실시
- (복지관리정책) 독일정부의 2011년 긴축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복지관리정책 실시

6. 영국 (FY 2011-12: 2011. 4~2012. 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1970~1990년대 경기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
 - 2010년 GDP 성장률은 2010년 6월 전망치보다 0.6%p 높은 1.8%로 전망하고, 2011년은 6월 전망치보다 0.2%p 감소한 2.1%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0년 3.2%에서 2012년 1.9%로 감소하고, 고용시장 개선으로 실업률은 2011년 8%에서 2015년 6%로 하락할 전망
- 전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FY2009-10 공공부문순차입 GDP 비중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GDP 비중은 FY2011-12에 60.8%로 예측하고 FY2013-14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은 책임, 자유, 공정성을 기조로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
 - FY2011-12에 지출삭감 150억파운드, 세금인상 62억파운드 계획
 - 현행 28%의 법인세율을 FY2011-12부터 4년간 매년 1%씩 인하
 - 2011년 4월부터 국가기초연금은 소득, 가격, 2.5% 중 최대치에 연동
- 2010년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2010)에서는 정책기조를 성장, 공정성, 개혁, 국방 및 안보로 설정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수출, 투자, 기업 지원
 -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지원을 위해 FY2014-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원 배정 등
 -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 자율성 강화, 중앙정부 행정예산 34% 삭감 등
 - 해외원조 지출 중 국제적 갈등 완화를 위한 지출비중을 30%로 확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4년간 총 6억 5천만파운드 신규 배정

□ 세입 및 지출

- 2010년 예산안, FY2010-11 경상세입 약 5,477억파운드(GDP의 37.2%)로 예측
 - 예산책임청(OBR)은 가을 경제·재정전망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2010년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증가한 5,497억파운드(GDP의 37.1%)로 전망
- 2010년 예산안, FY2010-11 총관리지출(TME)은 3월 예산안보다 약 72억파운드 감소한 6,968억파운드(GDP의 47.1%)
 -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FY2011-12부터 4년간 지출계획을 6월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상향조정
 - 복지지출 삭감 등 연간관리지출(AME) 억제 정책으로 FY2015-16 연간관리지출이 6월 예산안보다 약 106억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총 2,000억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 지방정부 차입 권한 확대(Tax Increment)
 - 예산안 2011에서 법인세 기본세율을 24% 인하 방침을 확정할 계획
- 재정건전화
 - 약 62억파운드의 FY2010-11 지출삭감(saving package) 계획 발표
 - 복지예산 연간 70억파운드 추가 삭감(Spending Review 2010)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의료) 국가의료서비스(NHS) 지출의 실질인상 보장하고 효율화 프로그램 및 의료제도개혁으로 지출 감축 노력
 - (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 기준 변경
 - (기타 복지)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액의 상한 설정 및 다양한 복지급여의 단일화(Universal Credit) 추진 등

7. 호주 (FY 2010-11: 2010. 4~2011. 3)

□ 경제 및 재정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추세를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실질지출증가율 제한 조치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FY2012-13에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FY2010-11 예산안은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예산 흑자로의 빠른 전환 (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다음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 자원세(Resource Tax) 도입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경제성장 가속화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 개혁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인 3,218억호주달러 (GDP 대비 22.9%)로 전망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준인 3,546억호주달러 (GDP 대비 25.2%)로 전망
 - FY2008-09 및 FY2009-10에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종료로 향후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 호주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 FY2010-11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발표하지 않고 이전에 수행했던 정책 중 교육,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교통·통신분야 등 크게 3분야에만 금번 예산에 영향을 미침

○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자원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 재정건전화

-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연금 관련)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2009년 5월에 발표

각국 예산안 분석

- I. 미 국
- II. 캐나다
- III. 일 본
- IV. 프랑스
- V. 독 일
- VI. 영 국
- VII. 호 주

I. 미 국

□ FY2012 : 2011. 10~2012. 9

□ 출처 : Fiscal Year 201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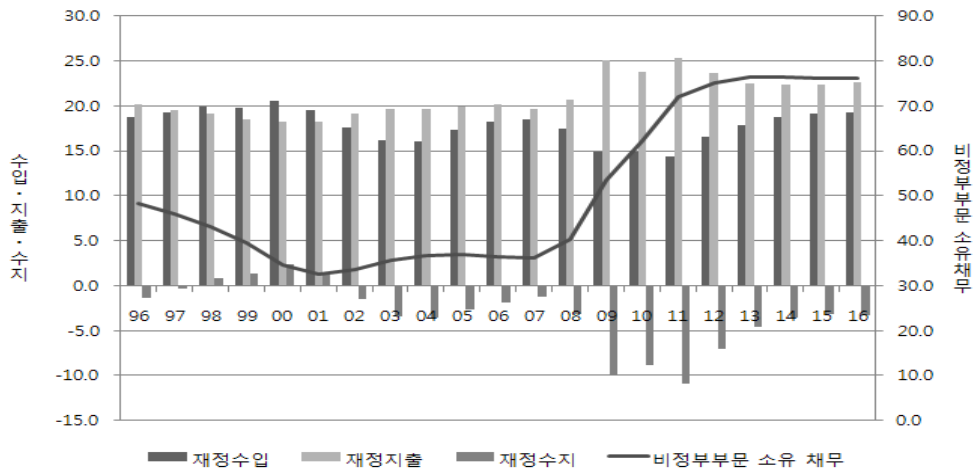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BO, 2011. 1

□ 환율(2010년 평균) : 1USD = 1,156.26원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14조 439억달러(우리나라의 10.6배)

[그림 1-1] FY2012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수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회계연도 기준

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3) 1996~2010년: 실적치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2011년과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재정전망)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FY2012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33.1% 감소한 1조 1,010억달러 전망

◇ 예산기준: 교육, R&D 투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 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② 재정건전화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FY2012 예산안은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교육, 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주요 재정정책

- 국가경쟁력 제고
 - 교육,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
- 재정건전화
 - 비안보 재량지출 및 공무원 임금 동결, 재정사업 통폐합, 국방지출 삭감과 함께 세제개혁, 신속재원폐지 등 예산제도 개혁을 제안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2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 개혁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다만,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등을 삭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2월	경기부양법(ARRA) 발효	재정동향 1호
2009. 2월	FY2010 예산안 발표	
2009. 5월	FY2010 예산안 업데이트 발표	
2009. 10월	FY2009 결산 발표	
2010. 2월	FY2011 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2월	재정위원회 설립	
2010. 2월	PAYGO법 발효	
2010. 3월	의료보험 개혁법 발효	재정동향 3호
2010. 6월	의회예산처(C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0. 10월	FY2010 결산 발표	재정동향 4호
2010. 11월	연준(Fed)의 6천억달러 양적완화 조치 발표	
2010. 12월	재정위원회 보고서 발표	재정동향 5호
2010. 12월	2010 감세연장법 발효	
2011. 1월	의회예산처(CBO) 경제 및 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1. 2월	FY2012 예산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²⁾

- (경제성장)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은 2011년과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
 - 최근 있었던 일시적인 사회보장세 인하와 실업급여 연장,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 등은 2011년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2~2014년에는 노동시장과 투자가 회복 되면서 평균 4.1%의 GDP 성장률을 보일 전망

-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며, 안정적인 물가와 예년보다 낮은 금리 예상
 - (실업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겠으나, 2015년 이후에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물가) 높은 실업률로 인해 물가수준은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
 - (금리)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섬에 따라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

2) 미국의 경제전망 부분에서 표시된 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표 1-1> FY2012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¹⁾	2.7	2.7	3.6	4.4	4.3	3.8	3.3	2.9	2.6	2.5	2.5	2.5
CPI(CPI-U) ¹⁾	1.6	1.3	1.8	1.9	2.0	2.0	2.1	2.1	2.1	2.1	2.1	2.1
실업률 ²⁾	9.6	9.3	8.6	7.5	6.6	5.9	5.5	5.3	5.3	5.3	5.3	5.3
금리												
국채 91일물 ³⁾	0.1	0.2	1.0	2.6	3.7	4.0	4.1	4.1	4.1	4.1	4.1	4.1
국채 10년물	3.2	3.0	3.6	4.2	4.6	5.0	5.2	5.3	5.3	5.3	5.3	5.3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 증가로 재정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FY2011 재정수입은 지난 12월 제정된 감세연장법³⁾으로 인해 FY2010보다 0.5% 증가한 2조 1,737억달러(GDP의 14.4%)에 그칠 전망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이후 FY2013~FY2021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향후 10년간 약 1조 1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이번 예산안 제안의 2/3를 지출삭감으로 달성

* 해외전비 등 안보지출 절감분을 제외한 금액

- 현재 진행중인 FY2011에는 안보 및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290억달러)와 법정지출 증가(180억달러) 등 전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8,190억달러 전망

3)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 FY2012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3조 7,290억달러 전망
 - 경기부양 및 실업급여 지출의 대폭 감소와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으로 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FY2013~FY2021 기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2조 1,82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

- 이번 예산안에서 제안한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등 재정건전화 방침으로 향후 10년간 1조1,110억달러(안보지출 절감분 제외)의 적자 감소 예상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전비를 포함한 안보지출 절감분(1조 900억달러)을 포함하면 FY2012~FY2021의 재정적자 절감분은 총 2조 1,820억달러에 달할 전망

□ **(국가채무)** 향후 재정적자가 감소할 전망을 기반으로 적자보전을 위한 채원조달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나, 국가채무는 증가할 전망

- FY2011의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10조 8,560억달러로 GDP 대비 72.0%, FY2012에는 11조 8,810억달러로 GDP의 75.1%에 이를 전망
- FY2013~FY2021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참고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표 1-2> FY2012 예산안 재정전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174	2,627	3,003	3,333	3,583	3,819	4,042	4,257	4,473	4,686	4,923
지출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재정적자	1,645	1,101	768	645	607	649	627	619	681	735	77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0,856	11,881	12,784	13,562	14,301	15,064	15,795	16,513	17,284	18,103	18,967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4.4	16.6	17.9	18.7	19.1	19.3	19.5	19.6	19.8	19.9	20.0
지출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재정적자	10.9	7.0	4.6	3.6	3.2	3.3	3.0	2.9	3.0	3.1	3.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72.0	75.1	76.3	76.3	76.1	76.1	76.1	76.2	76.4	76.7	77.0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참고 2> CBO 경제 및 재정전망(2011년 1월)

□ (경제전망)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당분간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최근 수년간의 잠재수준을 밑돌 전망

- 기업투자 및 순수출 증가와 함께 소비자 지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감세조치 연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투자지출의 증가에 힘입어 실질 GDP가 증가하여 아웃풋 갭(output gap)은 2016년 전반기에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2017~2021년에는 잠재GDP 성장률과 동일한 비율로 실질 GDP 성장

경제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2016 평균	2017-2021 평균
실질 GDP ¹⁾	2.5	3.1	2.8	3.4	2.4
CPI-U ¹⁾	1.2 ⁴⁾	1.3	1.3	2.0	2.3
실업률 ²⁾	9.6 ⁴⁾	9.2	8.2	5.3 ⁵⁾	5.2 ⁶⁾
금리 ³⁾					
국채 91일물	0.1 ⁴⁾	0.3	1.1	3.6	4.4
국채 10년물	3.2 ⁴⁾	3.4	3.8	4.7	5.4

주: 1) 전년 4/4분기 대비 변화율

2) 4/4분기

3) 연평균

4) 2010년 확정치

5) 2016년 전망치

6) 2021년 전망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BO, 2011. 1

□ (재정전망)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실업급여 연장 등 일몰조항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FY2011 이후 재정적자는 현저히 감소할 전망

- 다만, FY2011에는 작년 12월 감세조치 연장 등이 세입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회복으로 줄어든 세출을 초과하는 지출증가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악화될 전망

재정전망¹⁾

(단위: GDP 대비 %)

	2010 ²⁾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입	14.9	14.8	16.3	18.8	19.9	20.1	20.0	20.3	20.4	20.5	20.7	20.8
재정지출	23.8	24.7	23.3	23.1	23.0	23.1	23.5	23.4	23.3	23.7	23.9	24.0
재정수지	-8.9	-9.8	-7.0	-4.3	-3.1	-3.0	-3.4	-3.1	-2.9	-3.2	-3.2	-3.2

주: 1) 현재의 정책 유지를 가정

2)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BO, 2011. 1

2. 예산기조

※ 예산기조의 자세한 내용은 IV장 주요 재정정책 참조

교육, R&D 투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더불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구

- 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② 재정건전화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

- 교육,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지출 확대
- 재정건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1천억달러(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전비를 포함한 안보지출 절감분 제외)의 재정적자 절감

(국가경쟁력 제고)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분야에는 예산을 확대 배정

- **(교육)**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5,550달러를 지속 유지, 향후 10년간 십만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양성 등 지원
- **(산업)**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개발 일반과 생의학 연구 지원, R&D 세액공제의 단순화, 범위확대, 영구화 등 제안
- **(인프라)** 도로, 교량, 고속철도, 건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재정건전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세출측면)**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20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등
 - **(세입측면)** 지난 12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 기한대로 종료,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자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28%로 제한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조 6,274억달러(GDP의 16.6%)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의 증가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세(payroll tax), 개인소득세, 법인세 증가 전망
 - 다만, 현재 진행중인 FY2011 재정수입은 지난 12월 제정된 감세연장법으로 인해 FY2010보다 0.5% 증가한 2조 1,737억달러(GDP의 14.4%)에 그칠 전망

<표 1-3>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10억달러)

구분	2010 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15	908	884	819	808	818	829	845	863	880	897	914
비안보	491	507	456	423	412	402	408	413	426	434	449	453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6	1,416	1,340	1,243	1,220	1,220	1,237	1,258	1,289	1,314	1,346	1,36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701	742	761	802	846	894	945	1,002	1,062	1,126	1,196	1,269
메디케어	446	488	485	528	557	582	631	650	672	732	785	840
메디케이드	273	276	269	288	352	391	427	457	488	522	557	595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10	-28	13	10	5	4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44	716	612	573	570	596	654	665	671	709	736	771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1,954	2,194	2,140	2,199	2,331	2,467	2,659	2,774	2,892	3,090	3,273	3,475
순이자(Net interest)	196	207	242	321	418	494	562	627	685	741	793	844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¹⁾	2	6	8	8	9	10	10	10	10	10	10
총 재정지출	3,456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GDP 대비 %	23.8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주: 1) 확정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FY2012 주요 세제개편안

- 중산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지난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
-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20만달러(독신)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2년 이후에는 폐지
- 유산세는 일몰종료 후 2009년 수준인 최고세율 45%, 면세한도 350만 달러 회복

<표 1-4>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면세한도	1	1	1.5	1.5	2	2	2	3.5	- ¹⁾	5	5
최고세율	50	49	48	47	46	45	45	45	0	35	35

주: 1) 유산세 폐지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 달러, 독신: 20만 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 조세 체계 단순화,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개혁 제안
- 대형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책임금 부과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금을 부과하여 향후 10년간 약 300억달러 징수

나. 분야별 예산

□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예산안 편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IV장 주요 재정정책 참조

-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시킬 교육, 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투자확대

-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고통분담

- **(교육)** FY2012의 교육부 재량지출 재원이 774억달러로 FY2010 확정치에 비해 20.7% 증가
 - FY2012 교육부 예산 증가의 대부분은 FY2010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Pell Grant 프로그램에 기인
 - 교육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에 9억달러 배정
 - * 연간 교육 예산의 1퍼센트 남짓한 재원으로 40개 주 이상에서 교사와 학생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한 프로그램

- **(R&D)** 이번 예산안에서는 운영 및 시설과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R&D 예산에 1,480억 달러 배정
 - 이와 더불어 민간의 R&D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R&E tax credit)를 확대개편, 단순화, 영구화 할 것을 제안

- **(교통·통신)** 육상교통,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향후 25년 내에 전 국민의 80%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FY2012에 80억달러, 6년간 530억달러를 배정
 -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을 98%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 소방당국 등 공공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 이에 대한 재원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270억달러의 경매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감축) 이번 예산안의 포커스가 재정건전화에 맞추어 지면서 연방기관의 절반 정도가 FY2010 확정 예산보다 예산이 감소하고 국방, 환경 등의 예산도 대폭 삭감
 - 200 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을 통해 FY2012에만 총 330억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FY2012 재량지출 재원은 약 90억달러로 FY2010 확정치보다 12.7% 감소

<표 1-5>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10 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15	908	884	819	808	818	829	845	863	880	897	914
비안보	491	507	456	423	412	402	408	413	426	434	449	453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6	1,416	1,340	1,243	1,220	1,220	1,237	1,258	1,289	1,314	1,346	1,367
법정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701	742	761	802	846	894	945	1,002	1,062	1,126	1,196	1,269
메디케어	446	488	485	528	557	582	631	650	672	732	785	840
메디케이드	273	276	269	288	352	391	427	457	488	522	557	595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10	-28	13	10	5	4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44	716	612	573	570	596	654	665	671	709	736	771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1,954	2,194	2,140	2,199	2,331	2,467	2,659	2,774	2,892	3,090	3,273	3,475
순이자(Net interest)	196	207	242	321	418	494	562	627	685	741	793	844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¹⁾	2	6	8	8	9	10	10	10	10	10	10
총 재정지출	3,456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GDP 대비 %	23.8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 5억달러 이하

주: 1)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에 대한 잠정 배정액. 이와 같은 지원은 재량 지출이나 법정지출, 세금감면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편의상 지출에 포함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표 1-6>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단위: 10억달러)

	2010	2011	2012	Outyears			
	승인	요청	요청	2013	2014	2015	2016
기관별 재량지출 재원:							
안보기관:							
Defenses	530.1	549.1	553.0	570.7	586.4	598.2	610.6
Energy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s	9.9	11.2	11.7	12.0	12.5	13.0	13.3
Homeland Security	39.8	43.6	43.2	43.6	44.1	45.5	46.9
Veterans Affairs	53.1	57.0	58.8	60.7	62.6	64.6	66.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9.8	53.1	52.7	54.3	55.8	57.0	58.1
안보기관 합계	682.8	714.0	719.4	741.3	761.4	778.2	795.6
비안보 기관:							
Agriculture	25.1	23.8	22.0	22.9	22.9	23.0	23.5
Commerce	13.9	9.0	8.8	8.7	8.7	8.9	9.3
<i>Census Bureau</i>	7.2	1.3	1.0	1.2	1.2	1.4	1.6
Education	64.3	72.9	77.4	75.4	75.2	75.5	76.8
Energy (excluding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6.6	17.1	17.8	18.1	18.0	18.1	18.5
Health and Human Services	84.4	83.4	82.2	79.4	79.1	79.6	81.4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2.8	41.6	41.7	41.1	41.4	41.2	41.9
Interior	12.1	12.1	12.1	11.7	11.6	11.7	12.0
Justice	27.6	24.1	20.9	27.3	27.2	27.4	28.0
Labor	13.5	14.0	12.8	12.5	12.4	12.5	12.7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0.1	0.1	0.1	0.1	0.1	0.1	0.1
Transportation	14.7	14.0	13.4	13.6	13.6	13.6	14.0
Treasury	13.4	13.9	14.0	15.0	15.6	16.2	17.1
Corps of Engineers	5.5	4.9	4.6	4.3	4.3	4.3	4.4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0.3	10.0	9.0	8.7	8.7	8.7	8.9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4	0.7	0.6	0.6	0.6	0.6	0.6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8.7	18.9	18.7	18.0	18.0	18.1	18.5
National Science Foundation	6.9	7.4	7.8	7.5	7.5	7.5	7.7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8	1.0	1.0	0.9	0.9	0.9	0.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9.3	10.1	10.2	10.0	10.2	10.4	10.7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	1.4	1.3	1.2	1.2	1.2	1.2
Other Agencies	19.9	20.7	20.3	19.6	19.5	17.0	17.8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권한 합계	401.6	401.2	396.8	396.7	396.6	396.7	406.0

<표 1-6>의 계속

(단위: 10억달러)

	2010 승인	2011 요청	2012 요청	Outyears			
				2013	2014	2015	2016
기타 재량지출 재원: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167.3	164.7	126.5	50.0	50.0	50.0	50.0
Defense	162.3	159.1	117.6
Homeland Security	0.2	0.3	0.3
Justice	0.1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7	5.4	8.7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Outyears	50.0	50.0	50.0	50.0
기타 추정 승인액 / 긴급자금	8.3	...	-*
Agriculture	0.6
Defense	-1.6
Education	-0.1
Health and Human Services	0.2
Homeland Security	5.5
Justice	0.2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2.3
Corps of Engineers	0.2	...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1.0
Other Agencies	0.1
경기부양법(ARRA)	-2.4
Commerce	-0.5
Defense	-0.3
Energy	-1.5
Other Agencies	-0.1
재량지출 예산권한 총합	1,257.6	1,279.9	1,242.7	1,188.0	1,208.0	1,224.9	1,251.6

* 5천만달러 이하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4. 주요 재정정책

□ 총 3조 7,290억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자 감축에 주안점으로 두고 작성

가. 국가경쟁력 제고

- (교육) 미국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인 Pell Grant 장학금 최대 수혜액 5,550달러를 지속 유지
 - 향후 10년간 10만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사 양성, 이 중 만명은 앞으로 2년 동안 모집할 계획
 - 교육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의 경쟁방식을 유아교육, 대학교육 등에 확대

- (산업)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연구개발 지원, 세액공제 개선
 - FY2012 R&D 분야 예산으로 1,480억달러 배정
 - 생의학 연구 등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320억달러 배정
 - 2015년까지 백만대의 전기자동차 생산, 2035년까지 현재 전력 소비량의 두 배를 청정에너지로 충당, 202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목표를 위한 지원
 - 이를 위해 석유, 가스, 석탄회사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폐지하여 향후 10년간 460억달러 조달
 - R&D 세액공제의 단순화, 범위확대, 영구화 제안
 - 20개 경제성장지구(Economic Growth Zone)를 설정하여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에 투자와 고용증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

- (인프라) 도로, 교량, 고속철도, 건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등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는 인프라 개선에 투자
 - 향후 25년 내에 전 국민의 80%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FY2012에 80억달러, 6년간 530억달러를 배정
 -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을 98%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 소방당국 등 공공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
 - 이에 대한 재원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270억달러의 경매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동 수익금으로 공공안전 네트워크에 100억달러, 낙후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50억달러, 기타 사업에 3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적자감축에 사용

나. 재정건전화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을 동결(FY2015까지)하여 향후 10년 동안 4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
 - FY2011 예산안에서 3년간의 실시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예산안에서 5년으로 기한을 늘려 다시 제안한 것으로 기준은 의회 의결된 FY2010 예산

<표 1-7> 비안보 재량지출 5년간 동결(FY2015까지) 효과

(단위: 10억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2-16	12-21
12	-6	-20	-33	-47	-47	-50	-48	-51	-48	-57	-153	-406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공무원 임금 동결)** FY2011와 FY2012의 공무원 임금을 2년간 동결
 - 남은 FY2011 동안 공무원 임금 동결로 20억달러의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280억달러, 향후 10년간 600억달러 이상 절감 예상

- **(재정사업 통폐합)** 20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을 통해 FY2012에만 총 330억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의 예산안에서 매년 200억달러에 이르는 12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방안을 제안
 - 이번 예산안의 재정사업 통폐합 방안으로 연방기관의 절반정도가 FY2010 확정 예산보다 예산 감소

- **(국방지출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달러 삭감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포함하여 FY2012 전반적인 국방지출은 전 회계연도 요청액보다 5.3% 하락

<표 1-8> 향후 5년간 국방지출 삭감 내역

(단위: 10억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3	-11	-11	-18	-24	-78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2, OMB, 2011. 2

- **(세제개편)** 법인세 개혁 및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연장 불가 방침 등으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도모
 - 25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중립적인 법인세 인하를 제안
 - 현행 최대 35%인 법인세율 인하를 제안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음
 - 대신 과거 예산안에서 제안한바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와 조세회피 방지로 FY2012에 77억달러, 향후 10년간 1,292억달러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과 유산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
 - 연소득 25만달러(부부합산)/20만달러(독신)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을 2012년 이후 폐지
 - 유산세는 일몰종료 후 2009년 수준인 최고세율 45%, 면세한도 350만 달러 회복
- 대체최저한세(AMT)를 20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층(부부합산: 25만달러, 독신: 20만달러)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최대 28%로 제한

□ (기타) 신속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 규정, 복지지출 부정수령 및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투자를 제안

- 작년 예산안에 이어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신속 재원폐지(expedited rescission)를 제의
- 국가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해 지난 두 번의 오바마 행정부 예산안에 이어 이번 예산안에서도 다음 4개 분야에 증액 지원
 - 사회보장국(SSA)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Continuing Disability Reviews(지속적인 신체장애상태 재심사)와 SSI(생활보조금)의 재판정에 지원
 - 의료보험 부정수령 및 남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실업급여 부당수령 감소
 - 국세청(IRS)을 통한 세법집행 강화

<참고> 2009~2010년 미국 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출처
2009. 2월	- 「FY2010 예산안」: 복지사업 등의 부정수급 방지, 납세 성실성 제고를 위해 추가재원을 배정하여 예산절감 및 추가세수 창출을 제안	재정동향 1호
2009. 5월	- 「FY2010 예산안」(업데이트): 지출효율화를 위해 비효율적 사업,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종료 또는 삭감하는 방안 발표	
2010. 2월	- 「FY2011 예산안」: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 설립) 예산안 마련 당시 의회의 재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상원 부결이후 2010년 2월 대통령령으로 재정위원회 설립 ·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증가 억제 · (재정사업 운영개선)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등 국가재원의 부당수취를 방지하고 세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해 FY2010 예산안에 이어 제안 · (PAYGO 원칙 적용) 예산안 작성 당시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으나 2010년 2월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효력 발생 · (신속재원폐지 규정 제안)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재원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 · (지출효율화) 비효율적 사업, 목표달성이 부진한 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을 종료 또는 삭감하는 방안을 FY2010 예산안에 이어 FY2011 예산안에서도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5월	- 신속재원폐지 절차 수립 법안 의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1 예산안에서 제시하였던 신속재원폐지 방안에 대해 정부입법안 제출 	재정동향 3호
2010. 7월	- 정부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발표	
2010. 7월	-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발효	재정동향 4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2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의료부문의 메디케어 의료수가 하락 방지 한시법 2년 연장이나 연금개혁 방향은 재정적자 감소 노력과는 다소 거리감 존재

- **(의료)** 메디케어 의료수가 하락을 방지하는 한시법을 향후 2년간 연장
 -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안에서는 예산삭감으로 620억달러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

- **(연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연금급여 삭감과 같은 조치에는 반대하는 입장 표명
 -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강화와 장기 급여 지불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되, 민영화나 미래세대의 급여 삭감, 현 연금수급자의 급여 삭감에는 반대
 - 취약계층의 노후 생활 보장 및 장애인과 유족의 연금급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기타)**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주요 복지지출
 - 저소득층 냉난방비 보조사업 예산을 FY2010 확정치의 절반수준으로 삭감한 25억 7천만달러로 배정
 - 지역개발 포괄보조금⁴⁾에 현 수준에서 7.5% 감소한 37억달러 배정 등

4)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DBG)

<참고 3> 미 정부의 복지지출 개혁 정책(안)

□ (의료) 2010년 3월 발효된 의료보험 개혁법은 최근의 의회예산처(CBO)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2천억달러, 향후 20년 동안은 1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재정위원회 보고서) 2010년 12월 재정위원회의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3%로 줄이고,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

- 재량지출 삭감, 광범위한 조세개혁, 보건의료비용 인상억제, 기타 법정지출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 예산 수립과정 개선의 6개 부문 개혁과제를 제시

※ 이 중 보건·의료제도 개혁, 기타 의무지출 제도 개선,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리

	주요 내용
보건·의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장애자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수가 동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장률(SGR) 체제를 개편하여 비용 감축 ▪ 지역생활보조서비스지원법(the CLASS act)을 개혁하거나 폐지 ▪ 전체 의료보호 지출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증가율을 GDP+1%로 제한
법정지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의료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7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 ▪ 농업보조 프로그램의 순지출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달러 감축하되, 농업재해기금을 확충하고 농업위원회에 관련된 기금의 재조정을 허용 ▪ 연방정부 학자금 용자제도에서 입학시 소득에 기반한 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졸업후 상황에 맞추어 학자금 상환 지원제도를 개선
사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공식을 보다 누진적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90/32/15%의 3개 구간 공식을 2050년까지 90/30/10/5%의 4개 구간 공식으로 변경하여 누진성을 강화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급여수준을 강화하여 빈곤 감축 ▪ 최고령자 및 장기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급여를 강화 ▪ 조기퇴직과 일반 퇴직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2050년까지 최저과세기준을 임금의 90%선으로 인상 ▪ 개인연금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

Ⅱ. 캐나 다

FY2010-11 : 2010. 4~2011. 3

출처

- The Budget 2010(2010. 3. 4)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0. 10)
-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6차보고서, 2010. 9. 27)
-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서비스부(Service Canada)

※ 캐나다의 예산안은 통상 매년 2~3월에 발표되며 FY2011~12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따라서 『주요국 예산안 2011』 중 'Ⅱ. 캐나다'의 내용은 2010년 예산(The Budget 2010) 및 2010년 10월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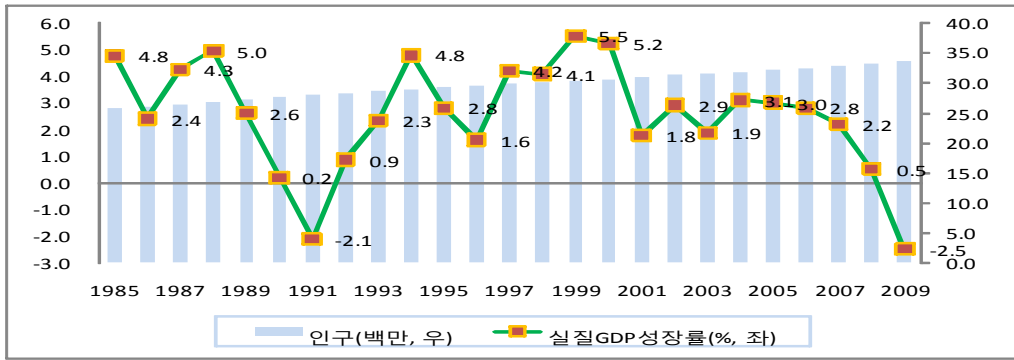
환율 : 1캐나다달러 = 1,122.76원(2010년 평균)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1조 2,756억달러(우리나라와 유사한 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59.1%(우리나라는 95.9%)

인구 : 3,374만명(2009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2010. 10)

- (경제전망) 2011년 실질GDP 성장률은 2.5%로 예측하며 실업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7.7%가 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1 재정적자는 298억캐나다달러(1.8%)로 예측

◇ 예산기조

- Budget 2011이 아직 발표되지 않음(2011년 2~3월 발표 예정)
- Budget 2010의 예산기조는 다음과 같음
 - 고용창출, 기계지원을 위한 2년차 경기부양책 시행
 -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 취약계층, 캐나다 원주민, 군인, 국가유공자, 노인 등 지원
 - 해외원조를 통한 캐나다 국가적 의무 이행
 - 재정수지 회복을 위한 장기적 경제계획

◇ 예산안 내용(2010. 10)

- (세입) FY2010-11 세입은 2,32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가 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 연평균 5.6%씩 상승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0-11 프로그램지출은 2,46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3%),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15-16에는 13.0%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2010년 10월 현재 경기부양책(CEAP) 집행률은 97%, 2년간 총지원금은 621억캐나다달러

- (재정건전화) FY2011-12 재정적자는 298억캐나다달러로 예측, FY2015-16에 이르면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
- (복지지출 관리 정책 1) 개정된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 인구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계획
- (복지지출 관리 정책 2) 지난 2년간 동결시켰던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를 2011년에 소득 100달러 당 5센트, 2012년부터는 연간 10센트씩 인상할 방침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1월	Budget 2009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1월	경기부양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	
2009. 5월	추경(Supplementary Estimates)	
2009. 9월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09. 10월	결산(Annual Financial Report)	
2009. 12월	경기부양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 제4차 보고서	
2010. 3월	Budget 2010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3월	경기부양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 제5차 보고서	재정동향 4호
2010. 9월	경기부양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 제6차 보고서	
2010. 10월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0. 10월	결산(Annual Financial Report)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실질 GDP성장률) 2010년 하반기에 이어 2011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인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1년 실질 GDP성장률은 2.5%가 될 것으로 예측
 - 실질 GDP성장률은 2012년 2.8%, 2013년 2.9%로 증가할 전망
 - 2010~2014년 평균 실질 GDP성장률은 2.8%로 미국의 실질 GDP성장률과 동일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

- (명목 GDP증가율) 2011년 명목 GDP증가율은 4.6%로 전년대비 1.3%p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이 수치는 2012~2013년에 다시 5%대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실업률) 2011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3%p 하락한 7.7%가 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실업률은 작년 3월에 발표된 “Budget 2010”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소폭 하락한 것임
 - 실업률은 향후 5년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부터는 6%대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

- (소비자물가) 물가는 2011년에 2.2%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10~2014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2.0%가 될 것으로 예상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0년 10월 현재)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2014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0	2.6	3.2	3.0	2.8	2.6	-	2.9
September 2010 survey	3.0	2.5	2.8	2.9	2.6	2.5	2.8
GDP inflation							
Budget 2010	2.2	2.1	2.2	2.1	2.0	-	2.1
September 2010 survey	2.8	2.0	2.3	2.0	2.0	1.9	2.2
명목 GDP 성장률							
Budget 2010	4.9	5.4	5.3	4.9	4.7	-	5.0
September 2010 survey	5.9	4.6	5.2	5.0	4.6	4.4	5.0
실업률							
Budget 2010	8.5	7.9	7.4	6.9	6.6	-	7.4
September 2010 survey	8.0	7.7	7.4	7.0	6.8	6.6	7.4
소비자물가지수 (CPI) inflation							
Budget 2010	1.7	2.2	2.1	2.1	2.1	-	2.0
September 2010 survey	1.7	2.2	2.1	2.1	2.0	2.0	2.0
U.S.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0	2.7	3.0	3.4	3.1	2.9	-	3.0
September 2010 survey	2.7	2.4	3.0	3.1	3.0	2.7	2.8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나. 재정전망

□ (재정전망) 정부의 경기부양책 Canada Economic Action Plan(CEAP)에 대한 지출로 캐나다의 재정수지는 2010~2011년 454억캐나다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CEAP 종결과 함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2016년 26억캐나다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재정적자 규모는 2010~2011년 GDP 대비 2.8%에서 2011~2012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1~2012년 재정적자는 298억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부채) 정부부채 규모는 2012-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5-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30.8% 수준 기대
- 캐나다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48.3%가 하락, 2008년에는 GDP 대비 22.4%를 기록했으며 향후 이 수치는 다른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0년 10월 현재)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총세입	2,186	2,325	2,463	2,612	2,777	2,932	3,059
프로그램 지출	2,448	2,466	2,427	2,461	2,517	2,572	2,654
이자지출	294	313	334	364	375	378	378
총지출	2,742	2,778	2,761	2,825	2,892	2,950	3,033
재정수지	-556	-454	-298	-212	-115	-17	26
부채	5,191	5,645	5,942	6,155	6,270	6,287	6,261
총세입	14.3	14.4	14.6	14.8	14.9	15.0	15.0
프로그램 지출	16.0	15.3	14.4	13.9	13.5	13.2	13.0
이자지출	1.9	1.9	2.0	2.1	2.0	1.9	1.9
재정수지	-3.6	-2.8	-1.8	-1.2	-0.6	-0.1	0.1
부채	34.0	34.9	35.3	34.8	33.7	32.3	30.8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2. 예산기조(Budget 2010)

※ 2011년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대신 Budget 2010의 기조로 대체함

- 1) 고용을 창출하고 가계를 지원하는 등 2년차 캐나다 경기부양책(Canada Economic Action Plan: CEAP) 시행

- 개인소득세 감면을 위해 32억캐나다달러 지원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등 고용창출을 위해 40억캐나다달러
- 고용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에 77억캐나다달러
- 인재 양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미래경제를 위하여 19억 캐나다달러 투입
- 농림부문, 중소기업, 관광 및 문화 등의 취약 부문에 22억캐나다달러 지원

2) 캐나다 경기부양책에 이어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 일자리 유지 및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고급 인재 유치, 세계적 수준의 R&D를 위한 역량 강화, 연구의 상업화 추진
- 기업들을 위한 투자 및 무역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노력
- 녹색성장 및 고용을 통한 에너지사업 투자 및 환경보호
- 교통시설 등의 노후한 인프라 재건
- 캐나다 기업 자금조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경영 고지 등의 금융부문 강화

3) 취약계층, 캐나다 원주민, 군인, 국가 유공자, 노인 등을 지원

4) 해외 원조 등을 통한 캐나다의 국가적 의무 이행

5) 재정수지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계획에 주목

- 점진적인 출구전략의 실행
- 정부지출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향후 5년 동안 총 176억캐나다달러 절약 계획
- 정부 행정기능 및 간접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진행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0년 10월 발표된 캐나다 재무부의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에 따르면 2010-11년 세입은 전년대비 6.3% 늘어난 2,325억캐나다달러(GDP대비 14.4%)로 예측하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연평균 5.6%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개인소득세) 2010-11년 개인소득세는 소득증가 및 주택수리세금환급프로그램(Home Renovation Tax Credit)의 종결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1,131억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법인세) 2009-10년에 단기적인 세수증가를 목표로 한 일회성 정책들이 종료되면서 법인세는 전년대비 7.6% 하락한 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증가, 기업 이윤증대와 함께 향후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
- (비거주자 소득세) 2015-16년까지 평균 약 6.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제5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Fifth Protocol to the Canada-U.S. Tax Treaty)의 일부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세를 폐지함으로써 2010-11년에 비거주자 소득세 수입은 57억캐나다달러로 일시적으로 감소할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재화 및 용역세는 2010-11년에 285억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과세 대상 소비의 증가로 인해 전망시기 동안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관세) 제조업 관련 장비의 관세 일시경감 및 특정 수입 선박의 세금 감면혜택이 적용되면서 2010-11년 관세수입은 일시적으로 2.8% 줄어든 후 수입의 증가와 함께 전망시기 동안 평균 6%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
- (고용보험) 2010-11년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수입은 개인 소득 증가 및 2010년 가을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료를 인상조치⁵⁾로 전년대비

5) Jim Flaherty 연방재무부 장관은 2010년 9월 30일, 2011년 직장인 보험료 인상폭을 소득 100캐나다달러 당 5센트로 제한하고 그 다음해부터 100달러당 10센트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소득 100달러 당 1.73센트로 유지해 고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나 고용보험

4.6% 증가한 175억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11-12년부터 2015-16년까지
 평균 8.2% 상승할 전망

<표 II-3>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039	1,131	1,199	1,281	1,370	1,454	1,517
법인세	304	281	311	314	337	359	375
기타소득세	53	57	61	66	71	75	78
총소득세(A)	1,396	1,468	1,571	1,662	1,778	1,888	1,971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69	285	296	313	331	349	367
관세	35	34	36	38	40	43	46
기타소비세	101	105	107	108	107	104	104
총소비세(B)	406	424	439	459	478	496	517
총조세수입(C=A+B)	1,802	1,892	2,010	2,121	2,256	2,383	2,487
고용보험(D)	168	175	188	206	226	246	259
기타세입(E)	217	257	265	286	295	303	312
총세입(F=C+D+E)	2,186	2,325	2,463	2,612	2,777	2,932	3,059
개인소득세	6.8	7.0	7.1	7.2	7.4	7.5	7.5
법인세	2.0	1.7	1.8	1.8	1.8	1.8	1.8
재화 및 용역세	1.8	1.8	1.8	1.8	1.8	1.8	1.8
총조세수입	11.8	11.7	11.9	12.0	12.1	12.2	12.2
고용보험	1.1	1.1	1.1	1.2	1.2	1.3	1.3
기타세입	1.4	1.6	1.6	1.6	1.6	1.6	1.5
총세입	14.3	14.4	14.6	14.8	14.9	15.0	15.0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수혜자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은 보험료 인상을 낮출 수 없다는 방침

나. 세출

- 2010년 10월 발표된 프로그램지출 전망에 따르면 2010-11년 총지출은 2,466억캐나다달러 (GDP대비 15.3%)이며 경기부양책을 위한 지원금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정부 지출규모는 2009-10년 GDP대비 16.0%에서 2015-16년 13.0%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노후혜택)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및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이 늘어나 2015-16년까지 GDP대비 연평균 5%가량 증가
 - (고용보험) 2009-10년 고용보험 혜택은 216억캐나다달러에서 2010-11년 211억캐나다달러로 하락, 이후 점차적 감소세가 예상됨
 - (아동보조금) 2010-11년 아동보조금은 7억캐나다달러 상승한 130억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캐나다 자녀세금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보조금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 이전지출) 정부 간 이전지출 규모는 보건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지출의 증가 및 지역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에 의한 정부간 지출 이전으로 2010-11년 533억캐나다달러 지출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망됨
 - (직접프로그램비용) 캐나다 국방부 및 기타 부처의 운영경비, 농가 지원, 주정부에 천연자원 로열티 지불, 학자금 보조, 공기업(Crown corporation) 운영비 지불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프로그램비용은 2011-12년 1,173억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56억캐나다달러 감소
 - 경기부양책 종료시점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차츰 감소하고 기계·장비 구입으로 동 기간 자본 상각비용은 소폭 증가
 - 기타 직접 프로그램지출로 근로자연금 및 혜택, 캐나다 국방부의 임금 외 지출, 약성부채 공제액 등이 포함됨

<표 II-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347	363	381	401	423	445	467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216	211	194	188	185	186	189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23	130	134	137	138	139	139
소계(A)	686	703	709	726	747	770	795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57	372	387	407	427	447	470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62	164	169	177	186	195	203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27	-29	-31	-33	-35	-37	-39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9	20	20	20	20	20	20
기타	60	5	0	0	0	0	0
소계(B)	570	533	545	571	598	624	654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99	401	357	331	318	303	305
감가상각(Capital amortization)	43	45	48	50	52	54	55
기타발생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s)	217	219	232	243	253	258	267
운영비 동결(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534	564	536	539	550	563	578
소계(C)	1,192	1,229	1,173	1,163	1,172	1,177	1,205
총프로그램지출(A+B+C)	2,448	2,466	2,427	2,461	2,517	2,572	2,654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4	4.2	4.2	4.0	4.0	3.9
정부부문간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7	3.3	3.2	3.2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7.8	7.6	7.0	6.6	6.3	6.0	5.9
총프로그램지출	16.0	15.3	14.4	13.9	13.5	13.2	13.0

자료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 재무부, 2010년 10월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캐나다의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 Economic Action Plan: CEAP)의 6차보고서가 2010년 가을 발표, 캐나다국민 세금부담 경감조치, 실업자 혜택증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미래경제 구축,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세목별 지원금 수록, 2년간 지원금은 총 621억캐나다달러
 - 정부는 CEAP를 통해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2만 3천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 2010년 10월 현재 97%의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
 - 캐나다 국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조치로 2010-11년 31.8억캐나다달러 투입
 - 세금감면 혜택 : 개인소득세 감면, 보육보조금 및 자녀양육보조금, 근로소득세금 혜택 등
 - 주택지원 및 법인세 혜택 : 주택수리세금환급(Home Renovation Tax Credit), 첫 주택구입자 세급환급(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컴퓨터 구입에 대해 일시적으로 100% 자본비 세금공제 등
 - 실업자에게 2010-11년 총 53.5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세목별로는 캐나다 근로자 혜택 15.5억캐나다달러, 교육기회 확대 9.9억캐나다달러, 고용보험료율(Employment Insurance Premium Rates) 동결에 28억캐나다달러 지원
 - 고용보험 수혜기간 5주 연장, 일자리나누기 확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2010년 고용보험료율 동결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으로 2010-11년에 88.7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 중 기반시설 투자로 57.7억캐나다달러, 주택분야에 31억캐나다달러 지원
 - 주·지방정부: 정무간 이전지출, 인프라건설촉진펀드(Infrastructure Stimulus Fund)를 통한 사업지원, 커뮤니티 지원 프로젝트 등
 - 캐나다원주민(First Nations) 인프라 지원 : 학교건물 공사, 상·하수도, 보건기관

지원 등

- 연방 기반시설 : 철도개선 작업, 연방건물 복원, 항만·교량 시설 개선 등
- 사회 주거시설 : 주·지방 사회 주거시설 개조, 원주민 주거시설 확대, 저소득노인 주택시설 마련, 지방정부에 주택관련 대출 등
- 미래경제 구축에 23.2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며 이 중 고등교육 및 연구에 11.5억캐나다달러, 과학기술 개발에 11.7억캐나다달러 투입
 - 고등교육 및 연구 : 대학교 인프라 개선, 대학원 장학금지원 프로그램, 북극지역 연구 인프라 지원 등
 - 과학기술 지원 : 연방 실험실 개선, 클린에너지 펀드, 우주산업 지원, 캐나다국민 의료정보 전자화 추진, 지역 광대역 확대보급 등
- 산업 및 커뮤니티(Industries and Communities)에 22.7억캐나다달러 투입, 이 중 산업분야에 12.5억캐나다달러, 커뮤니티에 10.1억캐나다달러 지원
 - 산업지원: 농림분야 지원, 광물탐험 세금환급, 중소기업 지원, 관광·문화관련 정책지원 등
 - 커뮤니티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원주민 보건 및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 등

<표 II-5>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단위: 억캐나다달러)

	2009-10	2010-11	합계
•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30.2	31.8	62.0
• 실업자에게 혜택	37.3	53.5	90.8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68.0	88.7	156.7
• 미래 경제 구축	15.5	23.2	38.7
• 산업 및 커뮤니티 지원	109.8	22.7	132.5
총 연방정부 경기부양지출	260.8	219.9	480.7
지방정부 경기부양 (Assumed provincial and territorial actions)	70.6	69.7	140.3
총 경기부양지출(Total Economic Action Plan stimulus)	331.9	289.6	621.0

자료 :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Year 2, 6th Report,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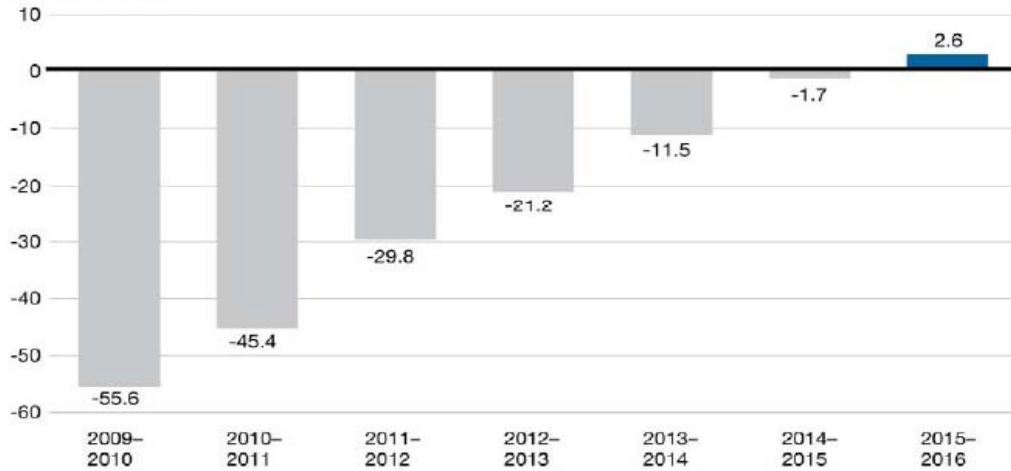
- 캐나다 정부는 현재 경기부양책의 출구전략에 초점을 두고 향후 중기재정을 다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 예산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 경기부양책(Economic Action Plan)의 단기적인 정책들을 점차적으로 종료하는 출구전략 실행
 - 정부는 직접프로그램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중기재정건전화에 주력
 - 정부 행정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

나. 재정건전화

- 캐나다 정부의 2011-12년 재정적자는 298억캐나다달러로 예측되며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2015-16년에 재정수지의 흑자 전환을 기대

[그림 II-1] 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 10억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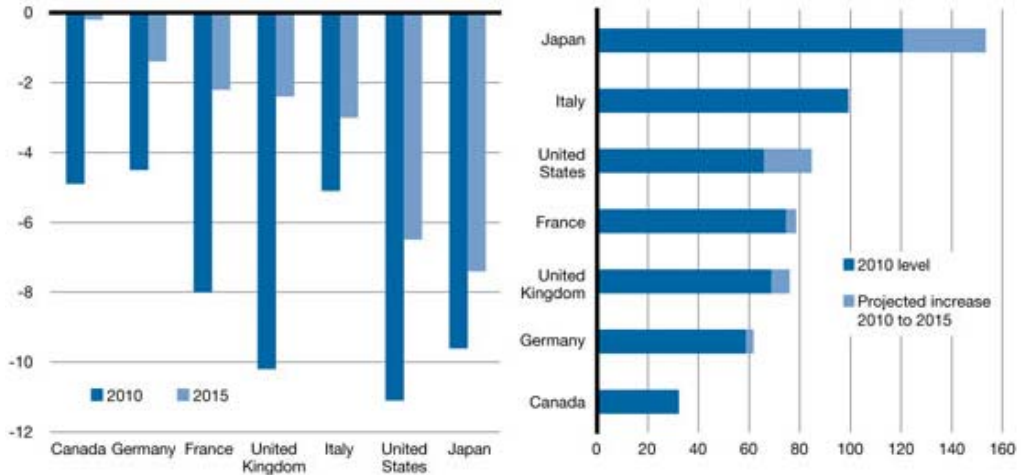
Source: Department of Finance.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 IMF는 캐나다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은 2015년에 수지가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5년 캐나다의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32.2% 수준으로 G7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

[그림 II-2] 캐나다 전체정부¹⁾ 재정수지 및 GDP 대비 부채비율

(GDP 대비 %)



주: 1) 캐나다 전체정부(total government)는 중앙정부, 주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까지 포함

자료: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캐나다재무부, 2010년 10월

<표 II-6> 캐나다 재정건전화 주요내용 정리(2009~2010년)

내용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09-10부터 6년간 총 175.8억캐나다달러 절감할 계획으로 다음 3가지 내용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2010-11에 2개년 계획인 CEAP의 2차년도분 실행, 2011년 3월부터 경기부양책 출구전략 실행 -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그램마다 정책 목표를 세움 - 행정부 기능 및 경상비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 검토 	재정동향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예산관실(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에서 장기 재정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은 2010년 2.1%에서 2020년 1.3%로 하락할 전망 - 프로그램지출은 FY2013-14 GDP대비 13.8%에서 FY2050-51에는 15.4%로 증가 예상 -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세입은 감소, 노후혜택 및 건강보험급여 지출은 증가하여 장기적인 정부부채 증가 예상 	재정동향 제3호 (20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Global Economic Leadership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G7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재정동향 제3호 (20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dget 2010에는 재정수지를 FY2009-10에 -55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5-16에는 흑자로 전환되도록 균형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 	재정동향 제4호 (2010. 10)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 연금 관련 정책⁶⁾

□ 캐나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CPP)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기부양법(Economic Recovery Act)은 2009년 12월 국왕의 승인(royal assent)을 받은 상황임⁷⁾

○ 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증가

변경 전	2011~2013년
- 65세부터 연금 수령액이 매월 0.5%씩 증가	- 2011년부터 연금수령액을 매월 0.5%에서 2013년까지 0.7%가 되도록 점차적으로 늘려나감

○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수령액이 감소

변경 전	2012~2016년
-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경우 연금수령 시기부터 65세가 되기까지 매월 0.5%씩 깎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점차적으로 이 비율(0.5%)을 0.6%로 늘릴 계획

○ 현재 65세 이하이고 일을 하면서 연금을 수령중인 경우 고용인 및 고용주는 CPP 분담금을 납입해야 함

6)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웹사이트 및 서비스부(Service Canada) 웹사이트의 발표자료 참조

7) 캐나다 연방, 주, 준주의 각 재무부처 장관들은 3년에 한 차례씩 캐나다 연금계획(CPP)의 내용을 검토하며 혜택 또는 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함. CPP는 2009년 5월에 논의되었으며 내용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음. 개정된 CPP의 내용은 경기부양법(Economic Recovery Act)에 포함되어 2009년 12월 15일자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과되었음

변경 전	2012년부터
- 근로자가 CPP를 수령중인 경우 CPP분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었음	- 2012년부터 65세 이하 근로자가 CPP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및 고용주는 CPP분담금을 납입해야 함. 이 분담금은 퇴직 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에 더해져 향후 퇴직수당이 증가하게 됨.

- 65~70세인 고용인이 CPP를 수령중인 경우 CPP분담금 납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짐

변경 전	2012년부터
- 근로자가 CPP를 수령중인 경우 CPP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음	- 2012년부터 65~70세 근로자가 CPP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CPP 분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근로자가 납입을 선택할 경우 고용주도 납입해야 함.

- 개인의 CPP 금액 산정시 전체 소득 중 포함시키지 않는 최하위 소득 년 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

변경 전	2012년부터
- CPP 산정시 최하위 소득 15% 또는 최하위 7년 동안의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았음	- 2012년부터 최하위 소득을 16% 또는 7.5년으로 늘리고 2014년에는 17% 또는 8년으로 다시 한 차례 늘릴 계획

- 일을 중단하지 않고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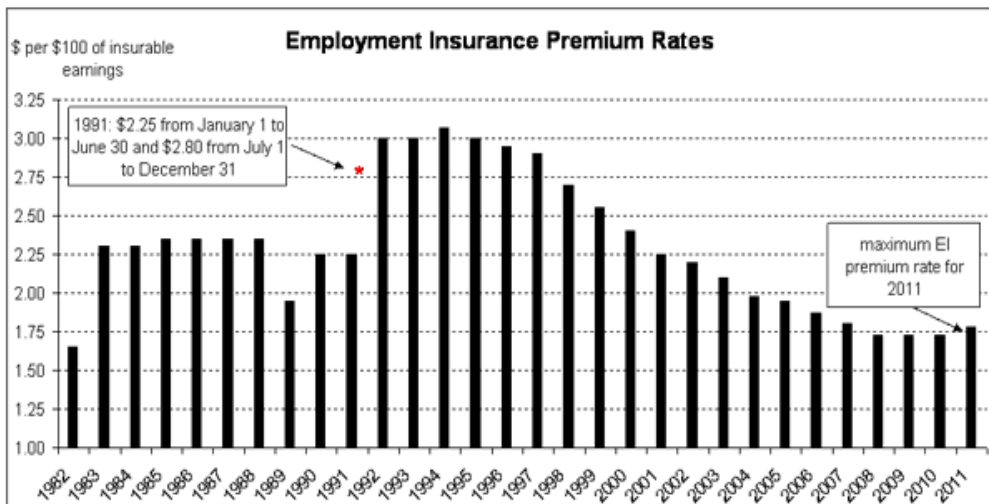
변경 전	2012년부터
-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경우 일을 중단하거나 2개월 이상 수입을 감소시켜야 했음('work cessation test'). 2개월 후에 다시 일자리로 돌아감	- 2012년부터 60세 이상이면 일을 계속 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2) 기타 복지정책⁸⁾

□ 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를 소득 100달러 당 1.73달러로 동결시켰으나 2011년에는 소득 100달러 당 5센트, 2012부터는 연간 10센트씩 인상하겠다고 밝힘

○ 금융위기 대응조치로 2009~2010년 2년간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동결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인상폭을 서서히 증가시켜 적자를 좁혀나갈 계획

[그림 II-3] 캐나다 고용보험료율 추이



자료 : 캐나다 재무부, 2010년 9월

8)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에서 발표

Ⅲ. 일본 (FY2011: 2011. 4~2012. 3)

□ FY 2011: 2011. 4 ~ 2012. 3

□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10. 7. 27 FY2011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 2010. 9. 1 FY2011 각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 2010. 9. 2 FY2011 각부처의 예산요구서 및 정책평가 조서 공개
- 2010. 12. 24 FY2011예산 정부안 결정
- 2011. 1. 24 FY2011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2011. 1. 24 FY2011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 개시

□ 출처:

- 概算要求組替え基準閣議決定(2010. 7. 27)
- 平成23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等(2010. 9. 1)
- 各府省の概算要求書・要望及び政策評価調書公開ページへのリンク先一覽(2010. 9. 2)
-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2010. 12. 22)
-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2010. 12. 24)
- 平成 23年度厚生労働省予算案の主要事項(2010. 12. 24)
- OECD Economic Outlook 88(2010. 11)

□ 환율: 100엔 = 약 1,320.56원(2010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09년 경상GDP 5조 681억달러(우리나라 6.1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09년 기준 22.3%(우리나라 107.0%)

□ 인구: 1억 2,700만명(2010년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왔던 일본 경제는 2011년도에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재정 악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 불안요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1%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계속되는 위기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2011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1%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2011년 예산은 2010년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구성의 기준 및 틀을 발표

◇ 예산안 내용

- FY2011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40조 9,270억엔으로 예상
- FY2011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약 71조엔은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 조치
 - 1단계: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2010. 9. 9)
 - 2단계: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2010. 10. 8)
 - 3단계: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2010. 12. 16)
- 재정건전화
 - 재원확보 원칙(PAYGO 원칙), 재정적자 감축 원칙 등 5가지 기본원칙을 따르는 「중기재정운영전략」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음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복지감축 정책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위기 후에도 일본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 관련 비용 중 특히, 자녀수당 확대를 중점으로 복지부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6,693억엔(13.2%) 정도 크게 증가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1. 16	「경제재정의 중장기 방침과 10년 전망」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4. 27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09 1차 추경안 발표	재정동향 1호,2호
2009. 6. 23	「경제 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9」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7. 31	FY2008 결산 발표	
2009. 8. 30	민주당의 54년만의 정권교체 성공	
2009. 12. 15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09 2차 추경안 발표	
2009. 12. 25	FY2010 예산안 발표	
2009. 12. 25	공정·투명·설득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2010년 세계개편안 발표	재정동향 2호
2009. 12. 30	「신성장전략」 기본방침 발표	
2010. 1. 15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주택에코포인트제 실시	재정동향 3호
2010. 6. 3	「산업구조비전 2010」 발표	
2010. 6. 18	「신성장전략」 발표	
2010. 6. 22	「재정운영전략」 발표	
2010. 6. 29	FY2010 결산 발표	
2010. 7. 27	FY2011 개산요구의 기준 및 틀 발표	재정동향 4호
2010. 9. 9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	
2010. 10. 8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	
2010. 10. 8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발표	
2010. 10. 26	FY2010 1차 추경안 발표	재정동향 5호
2010. 12. 16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안」 발표	
2010. 12. 24	FY2011 예산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왔던 일본 경제는 2011년도에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재정 악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 불안요소들이 존재
 - 2010년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수출 및 내수가 모두 부진을 보이고 이로 인한 투자 감소 및 고용지표 악화, 재고증가 등의 이유로 일본 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둔화세로 돌아섬

-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도 2011년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2011. 1)
 -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추세를 고려하여 2011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0%에서 소폭 하락한 1.8%대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로 전망
 - 민간회사 중 도쿄미쓰비시은행 1.0%, 미즈호은행 1.3%, 노무라증권 1.2%로 대부분 1% 초반대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

- 일본 노무라증권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화강세와 함께 중국의 긴축정책이 계속된다면 일본 수출·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기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엔고로 인한 환율 변동은 보통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둔화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 하지만,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일본경제는 완만하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

- 일본 재계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2011년도 상반기는 경제가 다소 어려울 전망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
- 일본상공회의소도 이르면 4월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언급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조엔)

구 분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474.0	479.2	483.8	△ 3.7	1.1	1.0
민간최종소비지출	280.7	281.7	282.2	△ 2.3	0.4	0.2
민간주택투자	12.9	13.0	13.8	△ 21.3	0.7	5.8
민간설비투자	63.7	66.4	69.2	△ 16.6	4.2	4.2
재화·서비스 수출	△ 3.6	△ 3.2	△ 2.5	△ 0.9	0.1	0.1
재화·서비스 수입	64.2	73.4	77.3	△ 18.0	14.3	5.2
(공제)재화서비스 수입	60.2	68.3	71.4	△ 25.0	13.5	4.6
내수기여도				△ 4.9	0.8	0.8
민간				△ 5.5	0.9	1.0
공공				0.6	0.0	△ 0.2
외수기여도				1.2	0.2	0.2
노동 및 고용						
취업자수	만명			%		
고용자수	6,608	6,588	6,593	△ 0.6	△ 0.3	0.1
실업률	6265	6,258	6,285	△ 1.7	△ 0.1	0.4
생산	5457	5,466	5,503	△ 1.1	0.2	0.7
광공업생산지수	%					
△ 8.9	8.6	2.5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 5.2	0.3	0.4			
소비자물가지수	△ 1.7	△ 0.6	0.0			
GDP 디플레이터	△ 1.3	△ 2	△ 0.5			
국제수지				조엔		
수출	55.6	64.3	68.3	△ 17.9	15.8	6.2
수입	49.0	56.5	59.9	△ 26.4	15.4	6.1
경상수지(조엔)	15.8	16.4	17.6	3.3	3.4	3.6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10. 12. 22

나. 재정전망

- 2011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계속되는 위기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약 7.1%를 기록할 전망
 - 2010년도 재정적자는 8.1%에 비해 추정되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지만 위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
 -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 비율은 7.1%에서 8.2%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11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204.2%로 예상
 - 2011년도 채권잔액은 2010년 대비 약 26조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비율은 138%로 예측됨
 -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는 지난해보다 약 23조엔 증가한 184조엔(GDP 대비 184%)으로 예측됨
 - 국채 의존도는 2010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47.9%로 전망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2.8	△3.4	△8.3	△8.1	△7.1
재정수지 ²⁾	△3.0	△3.8	△8.9	△8.8	△8.2
국채 비율	167.1	173.9	192.8	198.4	204.2
채권잔액 비율	-	110(546조)	125(594조)	134(642조)	138(668조)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 비율	-	156(770조)	173(819조)	181(868조)	184(891조)
국채의존도 ³⁾	31.0	39.2	37.6	48.0	47.9

주: 1) OECD Economic Outlook 88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88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국채의존도 = 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0. 12. 24

2. 예산기조

- 2011년 ‘건강한 일본 부활’을 위한 개산요구의 4가지 기준 및 틀을 발표 (2010. 9. 2)
 - 2011년도 예산은 정권 교체 후 최초의 본격적인 편성이며 지난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구성
 - i) 각 부처는 디플레이션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고용확대에 이바지하는 사업, 인재육성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해야 함
 - ii) 낭비를 근절하도록 총예산 편성
 -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업구분 및 행정사업 평가의 결과 반영, 20년 이상 경과한 사업의 경우, 폐지를 전제로 검증, 독립행정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부처 시설비용 삭감 등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iii) 2010. 6. 22 발표한 「재정운영전략」에 따라 세출대상 경비가 약 71조엔임을 인식하고 국채발행액도 2010년도 당초 예산의 발행액(약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
 - iv) 각 부처 간의 예산 조정 및 배분에 관련된 자료 및 예산요구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예산편성 전반에 투명성 강화 추진

- 2011년 예산은 ‘성장과 고용’을 가장 큰 목표로 하여, 향후 수요확대 분야를 중점으로 고용을 늘리고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편성
 - 2011년 예산은 중기 재정운영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당초예산 수준인 기초 재정수지 경비 71조엔, 신규채권발행액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함

3. 예산안 내용

<표 III-3> FY201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0 추정(A)	FY2011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율(%)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373,960	409,270	35,310	9.4
기타 수입	106,002	71,866	△ 34,136	△ 32.2
국채발행	443,030	442,980	△ 50	△ 0.0
계	922,992	924,116	1,124	0.1
세 출				
국채비	206,491	215,491	9,000	4.4
기초재정수지 경비	709,319	708,625	△ 694	△ 0.1
결산 적자보전	7,182	-	△ 7,182	-
계	922,992	924,116	1,124	0.1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0. 12. 24

가. 세입

□ FY2011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124억엔(0.1%) 증가한 92조 4,116억엔 수준으로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동일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9.4% 증가하여 40조 9,270억엔으로 예상
 - 전년대비 6.9% 증가한 소득세와 30.9% 증가한 법인세가 세입증가분의 76.7%, 대부분을 차지
 - 항공기연료세와 톨세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다른 세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함
- 반면 기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조 4,136억엔(32.2%)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채 발행액은 44조 2,980억엔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거의 변동 없음

<표 III-4> FY2010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0		FY2011	전년대비			
	예산(당초)	추경	예산안	예산(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01,540	104,910	111,720	10,180	10.0	6,810	6.5
신고소득세	24,600	23,170	23,180	△1420	△5.8	10	0.0
(소득세 계)	(126,140)	(128,020)	(134,900)	(8,760)	(6.9)	(6,820)	(5.4)
법인세	59,530	74,890	77,920	18,390	30.9	3,030	4.0
상속세	12,710	12,710	14,230	1,520	12.0	1,520	12.0
소비세	96,380	101,550	101,990	5,610	5.8	440	0.4
주 세	13,830	13,830	13,480	△350	△2.5	△350	△2.5
담배세	8,270	8,270	8,160	△110	△1.3	△110	△1.3
취발유세	25,760	25,760	26,340	580	2.3	580	2.3
석유가스세	120	120	12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770	770	460	△310	△40.3	△310	△40.3
석유석탄세	4,800	4,800	5,120	320	6.7	320	6.7
전원개발촉진세	3,300	3,300	3,460	160	4.8	160	4.8
자동차중량세	4,470	4,470	4,280	△190	△4.3	△190	△4.3
관 세	7,560	7,560	8,150	590	7.8	590	7.8
톤 세 ¹⁾	50	80	30	10	△40.0	10	△62.5
인지수입	10,240	10,240	10,570	330	3.2	330	3.2
합계	373,960	396,430	409,270	35,310	9.4	12,840	3.2

주: 1) 외국의 무역선이 입항할 때 배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자료: 재무성, 「平成 23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10. 12. 24

나. 세출

- FY2011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약 71조엔을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
 - 분야별로는 사회보장관계비가 2010년 대비 1조 4,393억엔(5.3%) 증가한 28조 7,709억엔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지 관련 비용을 감축하려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부분 분야의 FY2011 세출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

<표 III-5> FY2011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0 당초(A)	FY2011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률 (%)
사회보장관계비	272,686	287,079	14,393	5.3
문교 및 과학진흥비	55,872	55,100	△ 772	△1.4
국채비	206,491	215,491	9,000	4.4
연금관계비	7,144	6,434	△ 710	△9.9
지방교부세금교부금	174,777	167,845	△ 6,932	△4.0
방위관계비	47,903	47,752	△ 151	△0.3
공공사업관계비	57,731	49,743	△ 7,987	△13.8
경제협력비	5,822	5,298	△ 524	△9.0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911	1,969	58	3.0
에너지대책비	8,420	8,559	139	1.7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1,612	11,587	△25	△0.2
기타경비	51,943	55,660	3,717	7.2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10,000	8,100	△ 1,900	△19.0
예비비	3,500	3,500	-	-
계	915,810	924,116	8,306	0.9
결산부족분	7,182	-	△ 7,182	-
합계	922,992	924,116	1,124	0.1

자료: 재무성, 「平成 23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10. 12. 24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 1단계: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2010. 9. 9)

- 급속한 엔고 및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고용 대책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 경제위기 대응 지역활성화 예비비(9,179억엔)를 활용한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저탄소형 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신입사원 지원대책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 가전 및 주택 에코 포인트 제도 연장을 통한 소비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2단계: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2010. 10. 8)

- 1단계에 이어 경기 및 고용동향을 근거로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 기동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방안인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은 급속한 엔고의 진행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기의 자율적인 회복을 위한 2011년의 정책방향을 포함
 - 2011년도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 경제”를 위한 시책사업을 1) 인재육성 및 고용, 2) 신성장 전략의 추진 가속, 3) 육아·의료·개호·복지 강화, 4) 지역활성화·사회자본 정비·중소기업 대책, 5)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5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추진
 - (고용)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취업지원,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 등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을 도모함
 - (성장) 환경에너지, 생명혁신 등 성장분야의 기반을 정비하여 성장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 (복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그 잠재수요의 실현을 고용확대로 연결
-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규제) 재원을 절감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3) 3단계: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2010. 12. 16)

- 법인세율의 국제적인 수준 실현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 5%p 인하
 - 현행 40.7%에서 35.6%로 개정
 -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수준의 투자 사업 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걸음
 - 이는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경감세율 3%p 할인
 - 연간 800만엔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8%(원칙적으로는 22%)에서 15%로 세율 인하
 -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촉진 기대

나. 재정건전화

<참고> 2009~2010년 일본 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출처
2009.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6」에 의한 5개년 세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최대한의 지출삭감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 있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후평가제도 강화 - 세입개혁을 위한 「중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구축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 세제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 세입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국가채무비율 안정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목표 	재정동향 1호
2009.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실에 ‘중기재정 운영에 관한 검토회’ 신설: 향후 3년간 국가 재정의 기본구조 마련(‘중기재정구조’)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향(‘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재정동향 2호
2009.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9」 및 「중기 프로그램」의 일부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9에서는 FY2010 예산과 관련하여 「기본방침 2006」을 바탕으로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 「중기 프로그램」에 사회보장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 내용과 함께 검토 내용 추가 	재정동향 1호
2010.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 제시되었으나 인준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비세는 기초연금, 노인 의료, 노인 요양 등 3개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 제기 • IMF도 일본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타개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소비세 인상 촉구 	재정동향 3호
2010.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 목표 및 방안을 담은 ‘중기 재정운영전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 목표: 2011년부터 3년 동안 세출 및 국채발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2015년도까지 GDP 대비 적자폭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함 • 재정건전화 방안: PAYGO, 국채 발행액 억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원칙, 세출 재검토의 원칙,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 일본은 매년 「중기재정운영전략」(2010. 6)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중기재정운영 전략은 다음의 5가지 기본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재원확보 원칙(「PAYGO 원칙」)
- 재정적자 감축 원칙(국채발행액 감축)
-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원칙
- 세출 재검토의 원칙
-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 중기재정전략의 발표

○ 2011년 하반기 무렵, 당면한 경제전망이나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재정전략 개정을 실시하여 2012~2014년(헤세이24~26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중기재정전략을 설정할 예정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2011년도 후생노동성 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98.5%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11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2010년 대비 1조 4,360억엔(5.3%) 증가한 28조 5,153억엔 수준
-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31.9% 증가하여 위기 이후 복지감축 정책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위기 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III-6> 연도별 후생노동성 예산

(단위: 억엔, %)

	2008	2009	2010	2011	2011 증가분
일반회계	221,223 (3.0%)	251,568 (13.7%)	275,561 (9.5%)	289,638 (5.1%)	14,077
-사회보장관련비용	216,136 (3.1%)	246,522 (14.1%)	270,793 (9.8%)	285,153 (5.3%)	14,360
-과학기술진흥비용	1,135 (1.5%)	1,145 (0.9%)	1,125 (△1.7%)	1,090 (△3.1%)	△35
-기타비용	3,951 (△1.0%)	3,901 (△1.3%)	3,643 (△6.6%)	3,396 (△6.8%)	△247

주: 2008, 2009, 2010년 예산은 당초 예산
 자료: 후생노동성, 각년도 「厚生労働省所管予算案關係」

- ① (의료) 사회보장 예산 중 의료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에는 9조 9,250 억엔이 편성됨
- 의사 등 인력 확보 대책, 의료 체제 정비, 혁신적인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개발 촉진 등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산편성
 - 의료비의 국고부담, 지역의료 확보책, 응급의료 체제 구축 지원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음
- ② (연금) 연금관련 201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493억엔(2.5%) 증가한 10조 3,847억엔 수준임
- 2008년에서 2009년에 크게 증가(32.7%)한 후로 2%내외로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 국고부담을 1/2 유지하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진행
 - 연금 국고부담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0조 3,755억엔 수준

<표 III-7> 연도별 사회보장비 관련 예산

(단위: 억엔, %)

	2008	2009	2010	2011	2011 증가분
사회보장 관련 비용	216,136 (3.1%)	246,522 (14.1%)	270,793 (9.8%)	285,153 (5.3%)	14,360
-연금	74,382 (5.8%)	98,702 (32.7%)	101,354 (2.7%)	103,847 (2.5%)	2,493
-의료	85,644 (1.6%)	90,252 (5.4%)	94,594 (4.8%)	99,250 (4.9%)	4,655
-간호	19,062 (△2.2%)	19,699 (3.3%)	20,803 (5.6%)	22,037 (5.9%)	1,233
-복지	35,092 (5.2%)	35,937 (2.4%)	50,780 (41.3%)	57,473 (13.2%)	6,693
-고용	1,957 (△11.6%)	1,931 (△1.3%)	3,262 (68.9%)	2,547 (△21.9%)	△715

주: 2008, 2009, 2010년 예산은 당초 예산
 자료: 후생노동성, 각년도 「厚生労働省所管予算案關係」

③ (기타) 기타 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하였고, 고용관련 예산은 감소

- (복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신설된 자녀수당 확대를 중점으로 하여 양육지원 금액 인상
 - 2010년 1조 4,722억엔이었던 자녀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에 크게 증가 (36.4%)하여 2조 77억엔 수준
 - 이외에도 방과 후 아동 지원대책, 한부모 자녀 관련 지원대책 등 보육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 (고용) 고용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던 2010년에 비해 2011년 고용예산은 24.7% 감소한 2,547억엔 편성
 -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해고·신입사원의 입사 취소 등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시장 확대를 위해 '긴급고용대책' 등을 시행, 노동자의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 지역 고용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10년도 고용 관련 예산이 급증

-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개호 복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지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돕기 위한 작업카드제도 등에서 예산을 줄임

□ 한편, 연초 니혼게이지신문은 올해 정부가 노인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9조 9천억엔 부족하다고 보도 (2011. 1. 4)

- 일본은 노인 복지 예산을 현재 소비세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어 해마다 자연 증가 비용이 커지는 상황
- 이같은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전면적인 세금 개혁을 연기해온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2%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민주당이 2009년 선거 때 제시한 복지 관련 공약 중 선거 이후, 자녀수당은 2010년에 시행되고 있고 이외 몇몇 정책들도 관련 예산을 편성 받음

- 자녀수당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2만 6천엔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복지 관련 예산 중 큰 부분을 차지
-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정책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급대상이 아닌 단 부자 가정에도 자녀 부양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공약은 시행되어 2010년에 50억엔 예산이 편성
- 연금개혁 공약을 살펴보면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록문제의 집중 대응기간을 2011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연금기록을 인터넷 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연금제도 개혁 검토 팀을 창설하는데 예산을 편성
-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표 III-8> 민주당의 복지 관련 정책 시행 여부

(단위: 억엔)

정책		내용	시행 여부 및 관련 예산 ¹⁾	
			2010	2011
2010년 부터 실시	자녀 수당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월 26,000엔(2010년은 반액) 지급, 전액 지급에 맞추어 배우자 공제, 부양공제는 폐지	1조 4,722 (시행)	2조 77
	고교 수업료	공립고교는 무상, 사립고교도 상당액 지급	-	-
4 년 후 까 지 실 시	소비세 ²⁾	세율 인상은 4년간 동결	간 총리는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연금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에 가입. 전직을 해도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짐	연금기록을 인터넷 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0	27
			연금제도 개혁 검토 팀을 창설	
			2.8	1.1
		월 7만엔의 최저보장 연금 창설	-	-
	의료· 돌봄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폐지하고, 현역세대와 같은 제도에 가입	-	-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월 4만엔 인상		-	-	
고용 대책	제조현장에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전문직 제도를 도입	-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최저임금(시급 800엔)을 설정. 전국 평균 시급을 1,000엔을 목표로 함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검토: 1억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50억엔	

주: 1) 신규로 시행되는 정책의 예산만 정리

2) 일본은 노인 복지 예산을 현재 소비세에서 충당하고 있음

자료: 재정포럼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혁」, 원중학, (2009. 11월호) 참고
平成 2 2 年度厚生労働省所管予算案關係, 후생노동성

IV. 프랑스

□ FY2011 : 2011. 1~2011. 12

- 2011년 예산법안(LF 2011: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1)은 2010년 9월 2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8일 예산법(LF 2011: Loi de finance)으로 통과

□ 출처

- 2011년 예산법안 (LF 2011: Loi n° 2010-1657 de finances pour 2011)
- 2011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 (프랑스 정부 발표)
 - Les grandes lignes, Les chiffres clés 등
- 2011-2014 중장기 예산법안 (LPFP 2011 a 2014: Loi n° 2010-1645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1 a 2014)
-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1: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Les chiffres clés 등

□ 환율 : 1유로 = 약 1,532.94원 (201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2조 1,733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48.0%(우리나라 95.9%)

□ 인구 : 6,449만명(2009년 기준)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0년과 2011년 프랑스 경제는 각각 1.5%와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할 전망
- 프랑스 중기재정 예산법안 2011-2014에 따르면,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 2010년 7.7%이던 재정적자는 2011년 4.3%로 크게 감소하고, 2014년 1.8%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2010년 82.9%에서 2011년 86.2%로 상승할 전망

◇ 예산기조

- 2011년 예산법안은 2% 성장률과 1.5% 물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지출 안정화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GDP 대비 6%(916억유로)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1년 순세입은 201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으로 인해 5.6%의 순세입 증가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17억유로 세입 증가 예측
- (세출) 지출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여유재원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채무와 연금 관련 비용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로 연평균 0.6%의 지출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실행되는 100억유로에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통제(의료 비지출 통제, 연금개혁법) 정책으로 재정적자의 대대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였음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8. 12. 4	제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안	재정동향 1호
2009. 3. 4	제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안	
2009. 5. 13	정부정책개혁보고서(RGPP) 제출	
2009. 9. 30 제출 12. 18 의회통과	FY2010 예산법안(LF 2010)	
2009. 10. 1 제출	FY2010 사회보장예산안(PLFSS 2010)	
2009. 12. 14일	미래투자전략특별위원회의 미래성장계획안 최종안 제시	
2010. 1. 29 제출 2. 25 의회통과	FY2010 1차 수정예산(LFR 2010)	
2010. 3. 4	국가총사업전략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4. 21 제출 5. 8	FY2010 2차 수정예산(LFR 2010)	
2010. 6. 3 의회통과	FY2010 3차 수정예산(LFR 2010)	재정동향 4호
2010. 6. 30	4차 정부정책개혁보고서 발표	
2010. 7. 28	사업소세 감세 보고서 발표	
2010. 9. 28 제출 12. 28 의회통과	2011년 예산법안(LF 2011) 및 2011-2014 중장기 예산법안(LPFP 2011 a 2014)	
2010. 9. 28 제출 12. 21 의회통과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1)	
2010. 10. 27	연금개혁법안 통과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0년 2사분기부터 0.7%의 성장률 (1사분기의 성장률 0.2%)을 보이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
 - 2008년 이래 처음으로 투자가 증가했고,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며 2분기 연속으로 실업률이 감소하였음
 - 활발한 무역활동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지속된 유로의 평가절하가 프랑스 경기회복에 기여하였음

- 2010년과 2011년에 프랑스는 각각 1.5%와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프랑스 GDP	-2.6	1.5	2
민간소비	0.6	1.4	1.7
기업투자	-8	-0.9	5.5
수출	-12.4	8.9	7.6
수입	-10.7	7.1	6.7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0.1	1.5	1.5

자료: PLF 2011, Ministè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취합 (Agence France Trésor)

- (소비) 소비는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복지 급여지급으로 인해 경제위기 기간 동안 감소하지 않았음

- 2009년 0.6%, 2010년 1.4%에 이어 2011년에는 1.7%의 상승률로 전망
- (기업투자환경) 재고가 감소하고(destocking), 투자 회복으로 기업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생산성 회복과 기업세(business tax) 철폐로 인해 기업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무역) 수출은 2010년 약 9% 증가하였으며 2011년 수출증가율은 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유로 평가절하 효과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었고 2011년에는 추세보다 세 계무역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무역 상승률은 2010년 0.3%, 2011년 0.1%로 전망
- (물가상승) 물가상승률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5%정도로 전망
- (고용 및 실업) 2010년 2사분기 동안 5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무역활성화와 유로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0년 4,242억유로, 2011년에는 이보다 15%정도 감소한 3,598억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
 - 이어 2012년 3,662억유로, 2014년에는 3,791억유로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입) 순세입은 2010년 2,547억유로,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2,544억유로로 전망하고, 비세입은 2010년 186억유로, 2011년은 이보다 낮은 169억유로로 전망
 - 2014년까지 순세입은 증가추세 보이며 2011년 대비 18% 정도 증가한 3,104억유로로 전망
 - 2011년에 감소세를 보이던 비세입은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36억유로 (2011년 대비 28%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IV-2> 프랑스 2009-2010년 재정 전망

(단위: 백만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출	4,242	3,598	3,662	3,726	3,791
수입					
세입	2,547	2,544	2,737	2,950	3,104
비세입	186	169	194	225	236

자료: LPFP 2011~2014

2) 재정수지

- 프랑스 중기재정 예산법안 2011-2014에 따르면,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 2010년 7.7%이던 재정적자가 2011년 4.3%로 크게 감소하고, 2014년 1.8%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

<표 IV-3> 프랑스 2009-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유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대비 세출	21.4	24.6	20.4	19.8	19.4	18.9
GDP 대비 세입	15.1	16.9	16.1	16.5	17	17.1
GDP 대비 재정수지	-6.2	-7.7	-4.3	-3.4	-2.4	-1.8
재정수지	-117.6	-150	-86.4	-70.7	-52.3	-42.3

자료: LPFP 2011~2014

3) 부채비율

- 프랑스의 국가채무 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2012년까지 증가할 전망

- 2011년에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GDP 대비 실질 재정수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
(2010년 7.7% → 2011년 6%)
-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2010년 82.9%에서 2011년 86.2%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87.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IV-4> 프랑스 2009-2014년 부채비율 전망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¹⁾	78.1	82.9	86.2	87.4	86.8	85.3
실질재정수지	-7.5	-7.7	-6	-4.6	-3	-2

주: 1)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자료: LPFP 2011-2014

2. 예산기조

- 2011년 예산법안은 2% 성장률과 1.5% 물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며,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는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GDP 대비 6%(916억유로)까지 재정적자 감소를 목표
 - 지출증가추세 안정화: 정부 채무와 연금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정부지출 삭감 (공공운영과 정부 개입 관련 지출을 5% 감소, 2007년부터 실시된 100,000개 일자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1,638개 일자리 감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의료비 증가률을 각각 2011년 2.9%, 2012년 2.8%로 제한 등
 - 세입확충 : 소득세 구간 한도를 1.5% 인상하였고, 연금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최대부가율을 40%에서 41%로 인상

3. 예산안 내용 (LF 2011)

가. 세입내역

- 2011년 순세입은 2,544억유로로 2010년 수준을 유지
 - 경기회복으로 인해 5.6%의 순세입 증가
 - 2011년 예산법안에서 추진된 세제개편 정책으로 17억유로 증가
 - i)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철폐 (+11억유로)
 - ii) 개발세 관련된 공제를 수정 (+2억유로)
 - iii) 은행과세 실시 (+5억유로)
 - iv) 배당금 소득공제 철폐 (+2억유로)
 - v) 위와 같이 증가한 세입은 중소기업 리서치에 대한 세금공제 지원으로 부분적으로 차감 (-5억유로)
 - 2011년 예산법안은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감채기금(CADES: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⁹⁾)의 지속 조치에 초점

나. 세출내역

-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목표로하여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지급 재정 여유분을 타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여유재원에도 적용됨
 -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
 - 국가정책방향(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 전년대비 약

9) 프랑스 사회보장의 재정건전화에 대해 채무상환을 목표로 함.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까운 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제공하는 과산이 불가능한 공공기금

2배 증가 (11억유로)

- 체육 및 건강. 청소년 지원: 전년대비 약 1/2 감소 (4억유로)

<표 IV-5> 2010-2011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10억유로)

미션	2010 본(수정)예산	2011 예산법안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63	2.97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60	2.45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45	3.67
공공보조 - 저소득층 지원, 외국인 이민자 지원 등(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52	3.33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43	3.32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7	0.59
문화(Culture)	2.92	2.68
국방(Défense)	37.15	37.41
국가정책방향 - 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 (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55	1.11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10.15	9.51
Economie(산업 및 기업 지원)	1.94	2.06
Enseignement scolaire(교육)	60.85	61.79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11.58	11.75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56	0.56
법무부(Justice)	6.86	7.14
언론(Médias)	1.15	1.45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1.99	1.98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38	0.32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4.81	25.18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5.73	6.02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51	2.64
건강 복지(Santé)	1.20	1.22
치안(Sécurité)	16.40	16.51
시민안정 - 자연재해 및 화재 등(Sécurité civile)	0.43	0.43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2.37	12.37
체육 및 건강, 청소년 지원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85	0.43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1.41	11.57
건설 및 주택(Ville et logement)	7.81	7.63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 국제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44.19	46.93
예비비(Provisions)	0.12	0.34
경제위기대응정책(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4.10	-
의회, 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2	1.02
합계	285.23	368.54

자료: LPFP 2011-2014, LF 2011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참고> 2008~2010년 프랑스 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출처
2008. 12. 4	- 1차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2009~2010년에 한시적으로 집행하여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재정동향 1호
2009. 9. 10	- 탄소세 도입안 발표 • 2010년 1월부터 석유, 석탄, 가스 사용에 대해 CO ₂ 1톤당 17유로의 탄소세 부과 예정, 이후 점진적으로 세율을 늘릴 계획 • 감세 및 세금환급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	
2009. 10. 20	- FY2010 예산안에서 지출통제정책(1.2%) 시행 • 행정부 인력 감축(2010년 34,000명 인력 감축 계획) • 공무원 임금인상 동결 • 정부 운영비용 절감 • 지방정부 보조금 통제	
2010. 2. 2	- FY2010-FY2013 재정안정화계획 발표 • 세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입) 구조 개편, 탈세 방지 노력 강화 • 세출: 중앙 및 지방정부 지출증가율 통제, 중앙정부 산하기관 비용절감 노력 강화, 사회보장 부문 개혁(의료비 지출증가율 통제)	재정동향 2호
2010. 3. 10	- 금융기관 종사자 보너스에 대한 과세	재정동향 4호
2010. 10. 26	- 연금개혁법안 통과: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상향조정	
2010. 12. 28	- FY2011 예산안 및 FY2011-2014 프로그램예산법안에서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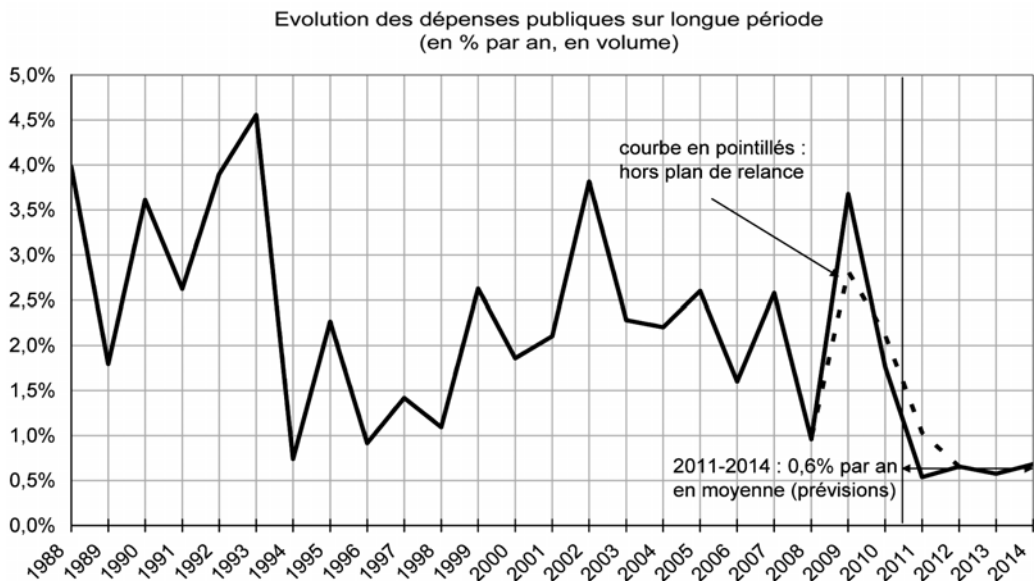
□ 프랑스 중기재정 2011-2014 예산법안은 전례없는 강한 지출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면서 연평균 0.6%의 지출증가율 전망

○ 채무와 연금 관련 비용을 제외한 공공지출 안정화, 2011년부터 실행되는 100억유로

-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 재정적자와 연금을 제외한 정부지출 삭감 (공공운영과 정부 개입 관련 지출 5% 삭감, 2007년부터 실시된 100,000개 일자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1,638개 일자리 감소)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을 2011년 2.9%, 2012년 2.8%로 제한

[그림 IV-1] 재정 지출 추이



자료: LPFP 2011-2014

- 세제지원 철폐 및 조세감면 축소 정책을 2011년부터 시행하여 100억유로 세입증대를 피함
 - 2007년부터 실시된 ‘트리플 플레이’(인터넷, IP전화, 텔레비전)에 적용되는 인하 세율이 텔레비전 서비스만 이용시엔 적용되지 않음
 - 환경포럼에서 2020년까지 1%의 전기에너지 사용을 포토볼타릭(전지)로 사용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 산업분야에 따른 투기 버블이 나타남에 따라 포토볼타

릭(전지) 에너지분야의 세금공제 혜택을 철폐하기로 함

- 누진과세의 형평성과 신고요건을 간편화하기 위해 이혼과 결혼, 동거 등 결혼 상태변화에 따른 가정의 과세조건을 개정하기로 함
- 중소기업 관련 소득 및 투자에 대한 감세제도 개혁(제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현 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세와 세금공제
- 이와 같은 조치로 징수된 재원의 1/3은 연금기금 재정지원, 1/3 사회보장 채무보전, 1/3은 재정적자 감소에 배분될 것임

□ IMF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2011년 GDP 대비 6.1%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전망(6%)과 견해를 같이 함(2010년 7월 30일)

- 이와 같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IMF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소세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나. 복지지출 관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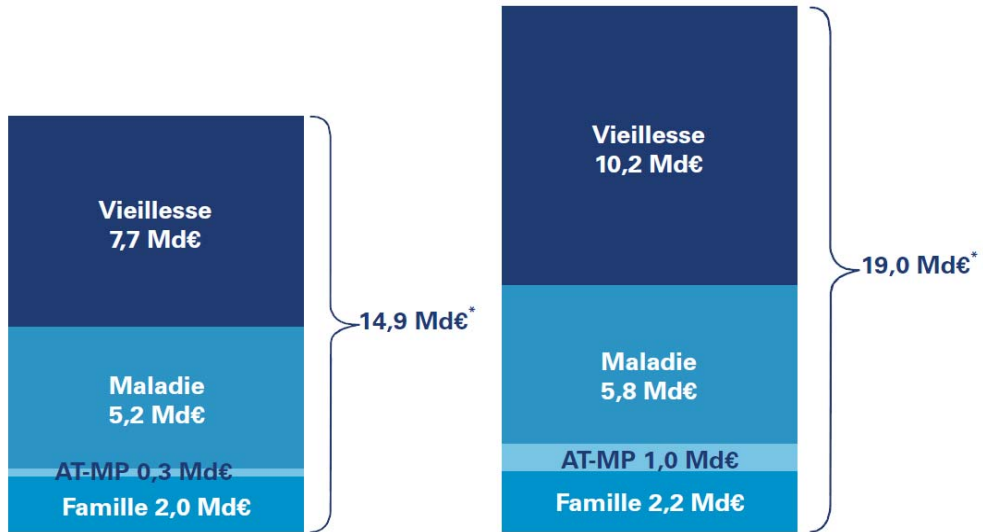
□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추이

-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복지 관련 지출은 149억유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이보다 22% 많은 190억유로 증가
 - 노령관련(vieillesse) 재정 지출은 77억유로, 수입은 102억유로 증가
 - 의료관련(maladie) 재정 지출은 52억유로, 수입은 58억유로 증가
 - 산재보험(AT-MP) 관련 재정 지출은 3억유로, 수입은 10억유로 증가
 - 가족관련(Famille) 재정 지출은 20억유로, 수입은 22억유로 증가

[그림 IV-2] 2010-2011 복지 재정 지출과 수입 추이

Évolution des dépenses entre 2010 et 2011

Évolution des recettes entre 2010 et 2011



(*) Le consolidé toutes branches des recettes ou des dépenses est inférieur à la somme des recettes ou des dépenses de chacune des branches

자료: PLFSS 2011

- 사회보장부문 예산 (2010년 9월 28일에 제출, 12월 21일에 채택)
 -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통제정책을 통해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를 2011년 214억유로까지 감소 목표
 - 세제혜택 축소, 연금개혁, 사회보장 채무를 사회보장 감채기금(CADES: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으로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

<표 IV-6> 2011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단위: 10억유로)

	2010 결산	2011 예산
의료보험 (CNAM)	-11.4	-11.6
산재보험 (CNAM AT/MP)	-0.5	0.1
법정연금기금 (CNAV)	-8.6	-6.9
가족지원금(CNAF) ¹⁾	-2.6	-3
일반 제도 수지(Regime General) ²⁾	-23.1	-21.4
노후연대기금(FSV) ³⁾	-4.3	-3.8
총액	-27.4	-25.2

주: 1) 가족지원금(CNAF)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2)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 특별제도, 자영업자 제도,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박찬영,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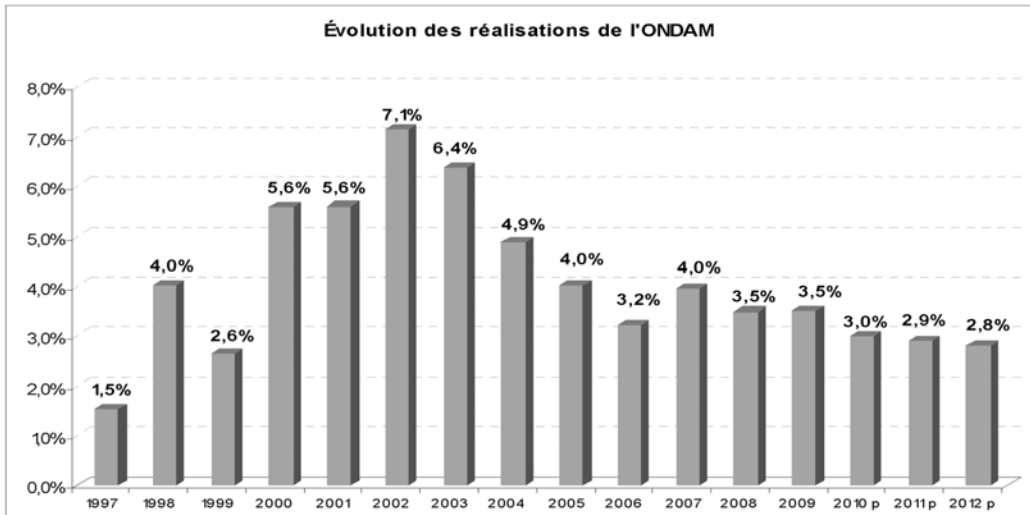
3) 노후연대기금(FSV)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임춘식 외 6인, 2005)

자료: http://www.budget.gouv.fr/presse/dossiers_de_presse/091001plfss2011/plfss2010.pdf

□ 의료 관련 지출 통제 정책

- 의료비 지출의 통제 강화: 의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을 통해 2011년 의료비 지출증가율(ONDAM) 3% 목표를
- 고령인구 관련 정책 강화: 장애인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ONDAM은 2011년 3.8%를 목표, 2008-2012 알츠하이머 플랜을 통해 2011년 75개의 관련 의료시설과 35개의 관련요양원(MAIA: Maisons pour l'autonomie et l'intégration des malades d'Alzheimer)을 마련
- 석면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확대
-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림 IV-3]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와 전망



주: 2010년~2012년(2010p, 2011p, 2012p)은 전망치 수치
 자료: LPFP 2011-2014

□ 연금 개혁

- 연금개혁법안은 2010년 10월 26일 상원의회를 통과하고(226대 233), 이어 10월 27일 하원을 통과하였음
- 2010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10일 공포, 시행되었음
- 연금개혁법은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최저 67살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일 연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

<표 IV-7> 연금개혁법안 주요내용

이슈	주요내용
정년	최저 정년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4개월에 1년씩 올려서 1956년생부터 62세에 정년퇴직이 가능
연금수령 기간	연금 100%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전문직종	14~16세 사이에 사업을 시작한 이는 60세나 그 이전에 퇴직할 수 있음. 정년퇴직 연령은 1년에 4개월씩 증가하지만 60세를 넘지 않음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퇴직연령은 연금수령 기간에 관계 없이 65세로 유지
장애아를 가진 여성	장애아를 가진 여성의 100% 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 65세로 유지
15년-3자녀	‘15년-3자녀’는 15년동안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 지급정지.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55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계속 지급
임산부	산전후 휴가는 정년퇴직 연금 수령시 보전함
남녀 평등 임금	기업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함
노령자 취업	55세 이상의 노령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년치 임금의 14%에 해당되는 재정 지원
장애 근로자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조기정년퇴직을 인정
공공서비스 직종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최저 근무년수를 15년에서 2년으로 낮춤
석면피해자의 조기 정년퇴직	석면피해로 인한 조기 퇴직자들은 변동없이 60세의 조기 퇴직 적용
연금보조금	정년에 근접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은 변동 없이 지급

출처: <http://www.retraites2010.fr/>

V. 독일

FY2011 : 2011. 1~2011. 12

2011년도 독일 예산안:

- 2010년 7월 정부 2011년 예산안 및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0년 9월 14일 의회 심의 시작
- 2010년 11월 26일 의회 심의 통과

출처 :

- Bundeshaushalt 2011, Finanzplan des Bundes 2010 bis 2014 (2011. 7)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ww.bmas.de)
-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10. 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10)
- OECD, Economic Outlook (2010. 11)
- Kiel Institute (www.ifw-kiel.de)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ww.cesifo-group.de/)

환율 : 1유로 = 약 1,533.09원(2010년도 평균)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2조 9,753억달러(우리나라 2.3배 수준)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76.7%(우리나라 95.9%)

인구 : 8,187만명(2009년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2.2%, 실업률은 6.7%로 전년대비 0.6%p 하락, 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11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3,058억유로로 추정되며,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574억유로,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39.7%나 감소

◇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긴축예산과 재정건전화계획 실시하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차입규모를 줄여 2016년까지 재정목표(GDP의 0.35%이하)를 달성할 계획
-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

◇ 예산안 내용

- 2011년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
- 총 재정지출은 3,058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규모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절감분이 가장 큼(8.3%)

◇ 주요정책

-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 2010년도 독일경제는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2011년도부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정책을 실시
- (재정건전화)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Zukunftspaket)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를 통해 연방 및 주 정부의 현 재정상황과 재정운영계획을 파악하고, 예산 모니터링 실시
- (복지관리정책) 독일정부의 2011년 긴축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복지관리정책 실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1. 27	FY2009 1차 추경 결정	재정동향 1호
2009. 1. 30	FY2009 예산 발표	
2009. 5. 27	FY2009 2차 추경 결정	
2009. 6. 24	FY2010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09-13) 정부 발표	
2009. 7. 2	FY2009 예산안 하원 통과	
2009. 7. 10	FY2009 예산안 상원 통과	
2009. 12. 16	FY2010 수정예산안 발표	
2010. 1. 19	FY2010 예산안 제1독회	재정동향 2호
2010. 1. 19	FY2009 결산 잠정완료	
2010. 3. 5	FY2010 예산 하원 통과	
2010. 3. 26	FY2010 예산 상원 통과	재정동향 3호
2010. 7. 7	FY2011 간축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10-14) 정부 발표	
2010. 9. 14	FY2011 간축예산 하원 심의 시작	재정동향 4호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2%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낮으며, 소폭의 물가상승과 실업률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2011년도 독일은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0년도의 3.6%보다 1.6%p 하락한 수준
 - (수출) 2010년 경제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은 2011년에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됐던 민간소비가 회복하며, 설비투자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 2010년 12월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 수는 301만 6천명이고 실업률은 7.7%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에는 0.4%p 하락한 7.3% 전망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IMF		독일중앙은행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GDP 성장률	3.7	2.2	3.3	2.0	3.6	2.0
CPI ¹⁾	1.1	1.8	1.3	1.4	1.1	1.7
실업률	7.3	6.7	7.1	7.1	7.7	7.3
수출 ²⁾	14.7	6.6	-	-	14.7	7.6
수입 ²⁾	13.4	7.2	-	-	14.1	7.6

주: 1)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수입: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0. 11

IMF: Economic Outlook, 2010. 10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0. 12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2010년 7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에 비해 16억유로 삭감된 3,058억유로로 확정
- (재정수입) 2011년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574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규모
 - 이 중 조세수입은 약 2,295억유로로, 전년 대비 176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11년 재정지출은 3,058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3% 감소한 규모
 - (신규차입) 2011년도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2010년의 802억유로는 물론, 당초 정부안 575억유로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1년부터 신규차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2014년까지 약 241억유로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10~2014년)

(단위: 10억유로, %)

	2009	2010 (추정치)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I. 재정지출	292.3	319.5	307.4	305.8	301.1	301.5	301.1
전년대비 증가율(%)	3.5	9.3	-3.8	-4.3	-2.1	0.2	-0.1
II. 재정수입	292.3	319.5	307.4	305.8	301.0	301.5	301.1
조세 수입	227.8	211.9	221.8	229.5	232.8	241.8	250.3
세의 수입	30.2	27.4	28.1	27.9	28.1	28.1	26.7
신규 차입	34.1	80.2	57.5	48.4	40.1	31.6	24.1
III. 투자지출	27.1	28.3	33.8	32.3	29.0	26.4	26.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0 bis 2014, 2010년 8월

2) 독일정부 재정수지

-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독일 연방정부의 2011년 재정수지는 2010년에 비해 개선된 GDP 대비 -2.3~-2.9%로 예상
 - IMF와 OECD는 물론, 자국 내 경제연구소(IFO, KIEL) 모두 당분간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09년에 이어 2010년까지 3%대로 악화되던 재정수지는 2011년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1년까지 최고 GDP 대비 5%대의 재정적자를 전망했던 작년 전망치보다 대폭 개선된 상황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IFO	0.1	-3.0	-3.5	-2.3	-
KIEL	0.0	-3.0	-3.3	-2.9	-2.4
EU 집행위원회	0.1	-3.0	-3.7	-2.7	-1.8

자료: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0. 11

3) 독일정부의 부채비율

- 독일정부가 예상한 2010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75.7%였으며, 2011년에는 75.9%로 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IMF의 2010년 가을 전망에 따를 경우에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75.3%로 독일정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며, 2015년에는 75.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3년까지 부채비율이 GDP 대비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던 2009년도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수치

<표 V-4>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IMF/EU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IMF	64.9	66.3	73.5	75.3	76.5	-	75.6
EU집행위	64.9	66.3	73.4	75.7	75.9	75.2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년 10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0년 10월

2.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긴축예산과 재정건전화계획 실시

- Schäuble 재무부 장관은 2011년도 예산안 연방하원 심의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경제성장에 관한 긍정적 신호가 독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11년이 정부지출과 신규 부채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차입규모를 줄여 2016년까지(독일 기본법 상의)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계획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지출 감소와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게 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재정 긴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1년 112억유로 감축을 시작으로 2011~2014년까지 총 817억유로를 절감할 계획(2010년 GDP의 약 3.4%)
 - 실업보험금 축소, 연금 감축 등 복지분야 지출을 가장 크게 감축(2014년까지 전체 지출감축금액 531억유로의 57.2%인 303억유로 절감)

<표 V-5> 독일정부의 향후 적자감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계		112	192	237	276	817		100.0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531	37.1	64.9
	일반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환경세 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자료: 독일 재무부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2011년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신규차입은 대폭 감소하여 총재정수입은 3,058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감소
 -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574억유로로 전년 대비 7.6% 증가
 - 조세수입은 총2,295억유로로 전년 대비 176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79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5억유로 증가
 - 에너지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항공여행시 부과하는 항공세와 원자력 발전 건설시 부과하는 환경세, 금융거래세 등을 신설하여 세수 확충 계획

<표 V-6> 연방정부 2011년도 예산

(단위: 10억유로)

	2009	2010	2011(정부안)	2011(확정)
I. 재정지출	292.3	319.5	307.4	305.8
전년대비 증가율(%)	3.5	9.3	-3.8	-4.3
II. 재정수입	292.3	319.5	307.4	305.8
조세 수입	227.8	211.9	221.8	229.5
세외 수입	30.2	27.4	28.1	27.9
신규 차입	34.1	80.2	57.5	48.4
III. 투자지출	27.1	28.3	33.8	32.3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12월

나. 세출내역

- (노동 및 사회복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 및 사회분야의 2011년도 예산은 1,313억 유로로서 2010년에 비해 약 8.3%(119억유로) 감소함
 - 생활보호대상 수급자에게 지불되던 연금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삭감
 - 2011년 연금보험 관련 예산은 2010년보다 6억유로(0.8%) 감소한 801억유로
 - 연금 수혜자 중 월 1,240~1,800유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축소

<표 V-7> 2011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10억유로, %)

부처	2010	2011	증감률(%)
총리실	1.8	1.8	-0.1
외교부	3.2	3.1	-2.8
내무부	5.5	5.4	-1.6
법무부	0.5	0.5	0.8
재무부	4.9	4.5	-8.2
경제기술부	6.1	6.1	-0.1
농업/소비자보호부	5.8	5.5	-5.9
노동/복지부	143.2	131.3	-8.3
교통건설부	26.3	25.2	-4.1
국방부	31.1	31.5	1.4
보건부	16.1	15.8	-2.2
환경부	1.6	1.6	2.9
가족부	6.5	6.5	-1.1
후진국지원부	6.1	6.2	2.5
교육부	10.9	11.6	7.2
연방부채	38.9	37.2	-1.7
기타	10.9	11.9	0.1
합계	319.5	305.8	-4.3

자료: 독일재무부, 2010. 12(확정예산)

-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하는 등 장기 실업급여 혜택 축소 및 실업급여를 법정(의무)지출에서 재량지출로 전환
- (연방 채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방채무는 연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채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에는 372억유로가 책정되어 전년에 비해 4.3%(17억유로) 감소
- (국방) 국방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2011년에는 우선 2010년에 비해 1.4%(4억유로) 증액된 315억유로 책정

- 40,000 여명의 군 인력 감축 등을 통해 2012년부터 국방분야의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

- (건설 및 교통, 도시개발) 2011년도 책정된 예산은 252억유로로 2010년도에 비해 약 4.1%(11억유로) 감소
- (보건) 주로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사용되는 보건분야의 예산도 2010년에 비해 2.2%(3억유로) 줄어든 158억유로로 책정

- (교육 및 연구) 전반적인 긴축예산의 기초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예산항목으로, 2011년에는 2010년보다 7.2%(7억유로) 증가한 116억유로로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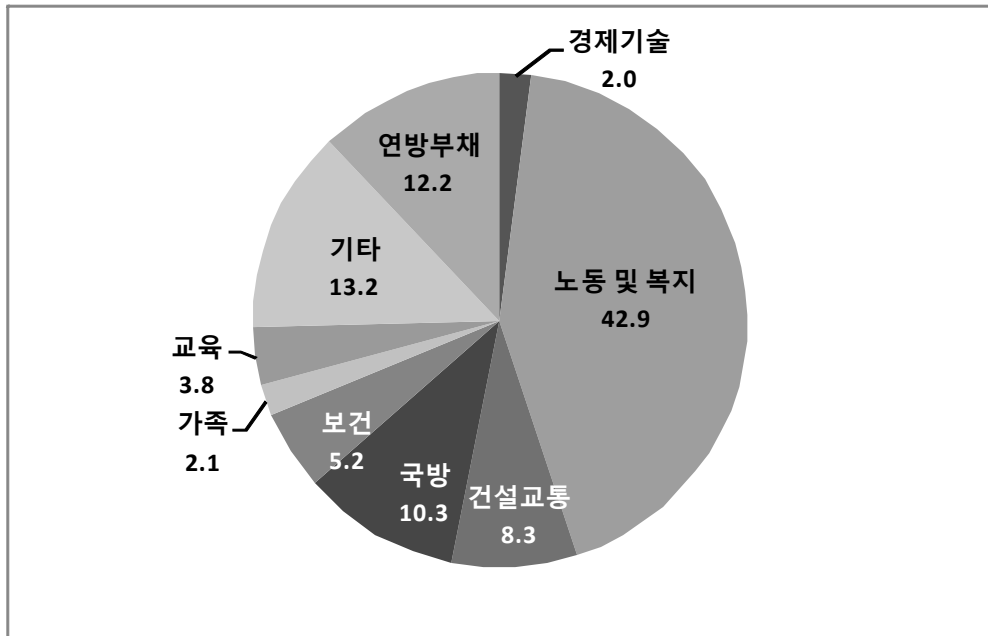
- (가족지원) 가족지원 분야의 2011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65억유로
 - 육아수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폐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

- (내무부) 2011년도 내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54억유로로 확정
 - 공무원 1만 5000명 정원감축 및 임금 삭감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감축하여 예산 절감

- (재무부) 2011년도 재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2%(4억유로) 감소한 45억유로로 확정

[그림 V-1] 독일 연방정부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자료: 2011년 예산안, 독일 재무부, 2010. 11. 23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경제성장 정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부는 위기 이전의 상태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건전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성장 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을 절감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자들에게 구직 인센티브를 늘리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밝힘
- 또한 긴축재정은 자국 내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나. 재정건전화

<독일의 재정건전화정책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2. 13	부채비율 감소 위한 2011년 이후 재정건전화정책 제시	재정동향 1호
2009. 7	재정건전화 달성 위한 헌법(독일기본법) 개정	재정동향 2호
2010. 2. 9	재정안정화프로그램 발표	
2010. 4. 28	안정화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7	긴축재정안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 9. 5	재정건전화계획 채택	재정동향 4호
2010. 10. 15	안정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연방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Zukunftspaket)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2010. 9)

- 예산을 수반한 법률의 형태로 마련된 재정건전화계획의 실시로, 2011년 이후 헌법상의 부채-억제 규율을 충실히 지켜, 중앙정부의 구조적 적자를 500억유로 이하로, 나아가 2016년까지 100억유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가장 중심이 되는 예산지원법(Haushaltsbegleitgesetz 2011)안은 신설될 항공세의 근거법률인 항공교통통제법 제정 및 에너지세법 등 20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시 2011년에는 35억 6백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됨
- 기타 핵연료세와 금융시장거래세 등 법안이 예산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 총 112억 6백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표 V-8> 재정건전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11	2012	2013	2014
예산지원법	3,506	5,390	5,680	4,810
항공교통통제법 제정	1,000	1,000	1,000	1,000
에너지세-전력법 개정	1,340	1,160	1,500	1,500
파산법 개정	191	215	215	215
양육수당 개정	605	605	595	575
기타	370	2,410	2,370	1,520
핵연료세	2,300	2,300	2,300	2,300
금융시장거래세	-	2,000	2,000	2,000
행정경비 절감 등	5,400	8,900	13,600	17,400
총계	11,206	18,580	23,580	26,510

주: 연방정부만을 포함한 내역

자료: 독일 재무부, Übersicht Umsetzung Zukunftspaket(2010. 9)을 재구성

- 연방재무장관 및 각 주 경제장관 등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2010년 10월 15일 베를린에서 예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동 위원회는 연방 및 주 정부의 현 재정상태와 재정운용계획을 파악하고, 헌법상의 차입 제약이나 중기 전망치를 비교하여 평가함
 - 위원회의 보고서는 베를린 등 4개 주의 예산 지표와 중기 전망치 등이 재정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의 경우 재정위기 발생의 우려는 없다고 발표함
 -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Berlin, Bremen, Saarland, Schleswig-Holstein 주에는 ‘안정성위원회법’(Stabilitätsratsgesetz) 제4조 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독일정부의 2011년 예산안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예산 감축안은 2014년까지 4년간 총 303억유로로 전체 지출감축 금액 531억유로의 57.2%를 차지함
 - 독일정부는 지출 감소와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계획

- (의료 관련) 보건분야의 예산도 2010년에 비해 2.2%(3억유로) 줄어든 158억유로로 책정

- (연금 관련)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연금보험의 국가지원 삭감
 - 2011년 연금보험 관련 예산은 2010년보다 6억유로(0.8%) 감소한 801억유로
 - 연금 수혜자 중 월 1,240~1,800유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축소(소득대체율 67 → 65%)

- (기타 복지 관련) 육아수당의 단계적 감축과 장기 실업 수당 혜택의 축소
 - 최대 14개월간 월300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을 폐지하고, 출산을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
 -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하는 등 장기 실업 수당 혜택 축소
 - 실업급여를 법정(의무)지출에서 재량지출로 전환
 - 실업급여 수혜자 중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 폐지
 - 독일의 실업보험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사회보험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보조로 구성되며, 이 중 사회보조 수혜자의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를 폐지

VI. 영 국

FY2010-11 : 2010. 4~2011. 3

출처 :

- HM Treasury, *The Budget 2010*, 2010. 6. 22
- _____, *Spending Review 2010*, 2010. 10. 20
- The 2010 Autumn Statement¹⁰⁾: Briefing papers, 2010. 11. 29
- <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0/11/autumn-statement/>
- OBR¹¹⁾,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9
- <http://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econ-fiscal-outlook.html>

환율 : 1파운드 = 약 1,993.8원 (2009년도 평균)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2조 1,689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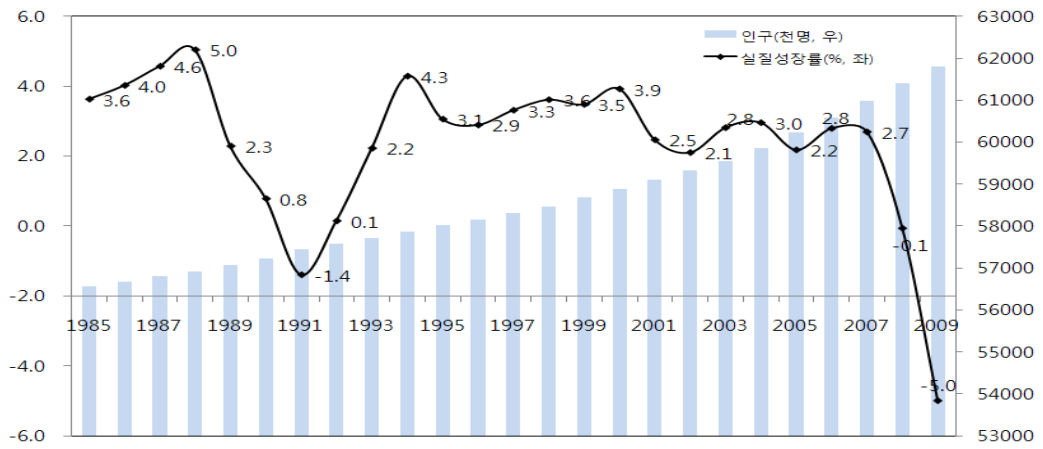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57.8%(우리나라 95.9%)

인구 : 6,179만명(2009년 기준)

10) 영국의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임. 2009년까지는 예산안 발표 3개월 전에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을 발표하였으나 현 정부는 사전예산안을 폐지하고 재무장관의 가을성명(Autumn Statement)으로 대체함

11)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1년 GDP성장률은 2010년 6월 전망치보다 0.2%p 감소한 2.1%로 전망
- 전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FY2009-10 공공부문순차입 GDP대비 비중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GDP대비 비중은 FY2011-12에 60.8%로 예측하고 FY2013-14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은 책임, 자유, 공정성을 기조로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
- 2010년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2010)에서는 정책기조를 성장, 공정성, 개혁, 국방 및 안보로 설정

◇ 세입 및 지출

- 예산책임청(OBR)은 가을 경제·재정전망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2010년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증가한 5,497억파운드(GDP의 37.1%)로 전망
-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FY2011-12부터 4년간 지출계획을 6월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상향조정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정책) 총 2,000억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수립, 법인세 기본세율 인하 등
- (재정건전화) 약 62억파운드의 FY2010-11 지출삭감(saving package) 계획 발표 및 복지예산 연간 70억파운드 추가 삭감
- (복지지출 관리 정책) 국가의료서비스(NHS) 효율화 프로그램 및 의료제도개혁으로 지출 감축 노력,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복지급여 상한(Benefit Cap) 설정 등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12. 09	2009 Pre-budget	재정동향 1호
2010. 03. 24	FY2010-11 예산안	재정동향 2호
2010. 05. 11	연정협약서	재정동향 3호
2010. 05. 24	FY2010-11 saving package	
2010. 06. 17	사업평가 예산삭감	
2010. 06. 22	FY2010-11 예산안(긴급)	
2010. 09. 06	NICs 감면	
2010. 09. 20	Tax Increment Financing	재정동향 4호
2010. 10. 04	사회보장급여 상한설정	
2010. 10. 20	Spending Review 2010	
2010. 10. 20	복지예산 삭감	
2010. 10. 20	복지급여 간소화(Universal Credit)	
2010. 10. 25	국가인프라구축 계획	
2010. 11. 26	공공서비스연금 개혁 추진	재정동향 5호
2010. 11. 29	OBR 11월 경제재정전망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1970~1990년대 경기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

- (성장) 2010년 GDP 성장률은 2010년 6월 예산책임청(OBR) 전망치보다 0.6%p 높은 1.8%로 전망하고, 2011년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0.2%p 감소한 2.1%로 전망
 - 더블딥(double dip)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OBR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으로 판단함
 - 2011년 중 성장률이 가장 둔화되는 시기는 1사분기로 약 0.3%p 증가하고 4사분기에는 0.7%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2년 이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보다 높게 전망됨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의 이유로 2010년 3.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1.9%로 감소
 - 2014년까지 중앙은행(Bank of England) 목표치(2.0%)를 충족할 전망
- (실업) 경기회복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어 실업률이 2011년 8%에서 2015년 6%로 하락할 전망
 - 일반정부 공공서비스 인력 감축 규모는 2010년 6월에 전망한 490,000명보다 축소된 330,000명으로 전망함

<표 VI-1> 영국 경제전망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 성장률(%)	-5.0	1.8	2.1	2.6	2.9	2.8	2.7
- 민간소비	-3.3	1.1	1.3	1.5	1.9	2.1	2.2
- 민간투자	-18.8	1.3	8.6	8.4	10.2	9.8	7.6
- 정부소비	1.0	1.8	-0.4	-1.3	-1.8	-2.4	-1.7
- 정부투자	14.2	1.0	-15.3	-9.7	-5.9	-1.5	2.6
- 순무역	0.7	-0.9	0.7	0.9	0.7	0.6	0.5
소비자물가(CPI, Q4)	2.1	3.0	2.8	1.9	2.0	2.0	2.0
실업률(ILO)	7.6	7.9	8.0	7.7	7.2	6.7	6.1
생산갭(Output Gap)	-4.2	-3.3	-3.4	-3.0	-2.3	-1.6	-0.9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3.1에서 발췌

나. 재정전망

□ (세입, 세출) 세입 증가와 공공서비스·사회보장 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감축 전망

- Spending Review 2010에서 발표된 복지지출 삭감으로 FY2014-15에 약 15억파운드
의 재정적자 감축 예상
- 세입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단기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가격, 이자율, 유가 하락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
으로 전망
 - FY2015-16 세입규모는 6월 전망보다 24억파운드 감소한 7,346억파운드(GDP 대
비 38.3%)로 전망
- 총관리지출은 국채이자비용과 공공부문 연금 순지출 하향 전망으로 지난 6월 전망
치보다도 GDP 대비 0.1%p~0.6%p 감소할 것으로 예측
 - FY2011-12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중을 45.4%로 예측하고, FY2015-16에는
39.3%까지 감소할 전망

□ (재정적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비중은 FY2010-11 10.0%에서 FY2011-12에 7.6%로 감소하고, FY2015-1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FY2009-10 공공부문 순차입의 GDP 비중은 11.1%(1,560억파운드)이며 FY2015-16에 GDP 대비 1.0%(18억파운드)까지 감소
- FY2010-11 공공부문 순차입은 지난 6월 전망치보다 약 10억파운드 줄어든 총 1,485억파운드 규모

□ (국가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는 FY2013-14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 FY2011-12의 공공부문 순부채 비중은 60.8%로 예측
- FY2013-14에 69.7%까지 증가한 후 FY2015-16에는 67.2%로 감소
- 일반정부(마스트리히트) 기준의 국가채무는 FY2012-13에 GDP의 84.7%까지 증가한 후 FY2015-16에 79.8%로 감소

<표 VI-2>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 GDP 대비 %)

	실적	전망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경상세입	36.6	37.1	37.8	38.1	38.3	38.4	38.3
총관리지출(TME)	47.7	47.1	45.4	43.7	41.8	40.4	39.3
경상수지	-7.6	-7.2	-5.6	-3.9	-2.1	-0.6	0.3
(10억 £)	-106.6	-106.2	-87.0	-64.0	-37.0	-11.0	6.0
경기조정 경상수지	-5.3	-4.7	-3.3	-1.8	-0.5	0.5	0.9
순투자 (10억 £)	49.4	42.3	31.0	27.0	23.0	24.0	24.0
공공부문 순차입	11.1	10.0	7.6	5.6	3.5	1.9	1.0
(10억 £)	156.0	148.5	117.0	91.0	60.0	35.0	18.0
경기조정 순차입	8.8	7.6	5.3	3.5	1.9	0.8	0.3
중앙정부 순현금소요	14.2	9.7	7.7	5.6	4.1	2.1	1.4
(10억 £)	198.8	144.2	120.0	91.0	70.0	39.0	27.0
공공부문 순현금소요	9.6	9.2	7.8	5.7	4.5	2.6	1.6
공공부문 순부채 ¹⁾	53.5	60.8	66.3	69.1	69.7	68.8	67.2
(10억 £)	772.0	922.9	1052.0	1157.0	1232.0	1284.0	1320.0
순자산(net worth) ²⁾	13.8	7.9	3.2	-0.3	-2.0	-1.7	-0.4
재정적자 ³⁾	11.4	9.9	7.5	5.6	3.5	2.0	1.0
경기조정 재정적자	9.1	7.5	5.2	3.5	1.9	0.8	0.4
국가채무 ⁴⁾	71.3	77.9	82.6	84.7	84.2	82.3	79.8

Note: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한시적 금융시장 개입효과를 제외

주: 1) 3월 말 기준

2) 12월 말 기준

3)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4)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23

2. 예산기조¹²⁾

1) FY2010-11 예산안 (2010. 6)

- 2010년 예산안은 책임, 자유, 공정성을 기조로 향후 5년간의 포괄적인 재정계획 수립
- (책임)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
 - FY2011-12에 지출삭감 150억파운드, 세금인상 62억파운드 목표
 - FY2014-15에 지출삭감 320억파운드, 세금인상 80억파운드 확보 계획
 - 지출감축 일환으로 11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개혁 시행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
 - 2011년부터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공공서비스연금의 급여인상 물가연동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전환
 - 연소득 21,000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 2년간 임금 동결
- (자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 현행 28%의 법인세율을 FY2011-12부터 4년간 매년 1%씩 인하
 - 소규모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FY2011-12부터 20%로 인하(현행 21%)
 - 기업금융보증 규모 확대와 새로운 성장자본기금 창출
 - 2011. 3. 31까지 소규모기업 대출 7억파운드 추가지원
 - FY2011-12부터 1%p 인상되는 국민보험기여금(NICs)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주의 NICs 부담 면제 기준 소득 인상
 - 기준 주(weekly) 소득의 물가연동 부분을 초과하여 주 21파운드 상향조정

12)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은 2011년 3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므로 가장 최근(2010. 6)에 발표된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의 내용 및 2010년 10월 발표된 Spending Review를 정리하였음

□ (공정성) 취약계층 보호 등 공정성 확보

- 2011년 4월부터 기본세율 납세자들의 개인인적공제 한도(65세미만)를 1,000파운드 인상
- 고세율 납세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28%로 인상(10%p)하고, 기업가공제 총한도를 현행 200만파운드에서 500만파운드로 확대
- 은행의 저위험투자 자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2011. 1. 1부터 은행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과세하는 은행세(Bank levy) 도입
- 자녀세액공제 인상의 재원확충을 위해 3년간 자녀수당(Child Benefit) 동결
- 2011년 4월부터 국가기초연금은 소득, 가격, 2.5% 중 최대치에 연동

2) Spending Review 2010 (2010. 10)

□ 정책기조를 성장, 공정성, 개혁, 국방 및 안보로 설정

□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수출, 투자, 기업 지원

- 교통부문 투자 및 유지보수
 - FY2011-12~FY2014-15까지 도로건설과 지방교통제도에 총 100억파운드 투입
 - Network Rail(철도기반시설 관리회사)에 140억파운드 투자
- 과학연구분야 경상지출 예산에 FY2014-15까지 총 46억파운드 배정
- 성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 재원 2억 5천만파운드 증액(FY2014-15 기준) 등

□ (공정성) 학교에 대한 지출 유지와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새로운 교육지원제도(fairness premium) 재원으로 FY2011-12~FY2014-15까지 총 72억파운드 배정
- 600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재건축,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지원을 위해 FY2014-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원 배정 등
- (개혁) 자유 증진과 책임 분담의 연정 원칙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개혁
 -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 자율성 강화, 양형제도(sentencing framework) 개혁
 - 공공서비스연금의 가입자 기여율 인상을 통해 FY2014-15 기준 연간 18억파운드 절감
 - 중앙정부 행정예산 34% 삭감으로 FY2014-15 기준 연간 59억파운드 절감 등
- (국방 및 안보) 전략적 국방 및 안보 검토서 결과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출에 대한 검토와 사이버 국방 및 예상 위협 대응에 대한 투자 설정
 - 해외원조 지출 중 국제적 갈등 및 불안 완화를 위한 지출비중을 30%로 확대(현재 약 20%, 19억파운드 규모),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중점적으로 원조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FY2011-12 ~ FY2014-15까지 총 6억 5천만파운드 신규 배정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0년 예산안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약 5,477억파운드(GDP의 37.2%)로 예측
 - 총선 전 보수당 정부의 3월 예산안 예측보다 약 70억파운드 증가
 - 세입 증대는 대부분 VAT 인상 효과로 FY2010-11 28억파운드, FY2011-12이후는 120억파운드 이상 확보 전망
 - 예산책임청(OBR)은 가을 경제·재정전망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2010년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증가한 5,497억파운드(GDP의 37.1%)로 전망

- VAT의 경우 2010년 예산안에 비해 FY2010-11에 15억파운드, FY2015-16에 57억파운드 상향 전망

□ OBR이 발표한 11월 경제·재정전망에서는 FY2012-13에서 FY2015-16까지 경상세입이 2010년 예산안 예측치보다 감소할 전망

- VAT 증가보다 법인세와 인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
- GDP 대비 경상세입 비중 역시 2010년 예산안에 비해 0.1~0.4% 하향 전망

<표 VI-3> 경상세입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47.2	151.0	156.5	168.4	182.0	196.5	209.9
pay as you earn	122.9	131.0	133.1	139.5	149.5	160.2	171.2
self assessment	21.7	20.2	23.6	28.4	31.6	34.9	36.9
소득세 세액공제	-5.6	-5.5	-4.7	-4.3	-4.3	-4.3	-4.4
NICs	96.9	98.5	102.8	108.4	114.1	120.7	127.4
VAT	73.5	84.9	100.1	103.6	107.8	112.5	117.6
법인세	36.5	43.5	45.5	47.8	50.2	52.5	54.4
onshore	31.0	35.8	37.3	40.2	43.1	45.4	48.0
offshore	5.6	7.7	8.1	7.6	7.1	7.1	6.4
법인세 세액공제	-0.7	-0.9	-0.9	-0.9	-0.9	-0.9	-0.9
석유세	0.9	1.5	1.6	1.7	1.6	1.5	1.3
연료세	26.2	27.7	29.3	30.7	32.1	33.8	35.0
비거주재산세	23.4	23.8	25.6	26.8	27.9	28.9	29.3
카운슬세	25.3	25.7	26.1	27.2	28.9	30.0	31.2
VAT 환급(refunds)	11.2	13.6	15.1	14.9	14.7	14.7	15.0
자본취득세	2.5	2.8	3.2	2.7	3.4	4.0	4.5
상속세	2.4	2.7	2.7	2.8	3.0	3.2	3.5
인지세	4.9	6.0	6.3	7.9	9.2	10.5	11.5
인지세(on shares)	3.0	3.1	3.4	3.7	4.1	4.4	4.7
담배세	8.8	9.4	9.4	9.5	9.7	9.9	10.1
산업용주정(spirits)세	2.7	2.6	2.5	2.6	2.7	2.8	2.9
와인세	3.0	3.2	3.3	3.5	3.8	4.0	4.4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5	3.7	3.8	3.9	4.1	4.2	4.4
항공여객세	1.9	2.2	2.6	2.8	3.0	3.3	3.6
보험료세	2.3	2.5	2.8	2.8	2.9	2.9	3.0
기타 국세(HMRC taxes)	6.0	6.7	7.0	7.2	7.4	7.6	7.7
자동차세	5.6	5.9	5.9	6.0	6.1	6.2	6.2
은행원천세 (bank payroll tax)	0.0	3.5	0.0	0.0	0.0	0.0	0.0

<표 VI-3> 의 계속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은행세(bank levy)	0.0	0.0	1.2	2.3	2.5	2.4	2.3
Licence fee receipts	3.0	3.1	3.1	3.1	3.1	3.2	3.2
환경부담금	0.5	0.6	1.8	2.0	2.6	3.0	3.4
기타 조세	5.3	5.3	5.4	5.9	7.8	8.1	8.3
National Accounts taxes	490.3	526.7	561.5	593.1	629.4	665.6	699.3
예산(6월) 대비 증감	-0.7	3.5	3.9	0.7	-0.6	-0.5	-1.6
EU 부담금 공제	-3.8	-4.9	-4.9	-5.0	-5.2	-5.4	-5.5
이자 및 배당	3.5	3.8	4.7	6.2	7.8	9.6	11.5
총운영수지	23.6	23.8	24.9	26.0	27.1	28.3	29.5
기타수입	0.1	0.2	0.1	0.0	0.0	-0.1	-0.1
경상수입	513.8	549.7	586.2	620.3	659.1	698.0	734.6
예산(6월) 대비 증감	-0.9	2.0	2.0	-1.6	-2.7	-2.1	-2.4
GDP 대비 비중(%)	36.6	37.1	37.8	38.1	38.3	38.4	38.3
예산(6월) 대비 증감 (%p)	0.1	-0.1	-0.1	-0.3	-0.4	-0.4	-0.4
UK 석유가스 세입	6.5	9.1	9.8	9.4	8.6	8.6	7.7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6~4.7

나. 세출¹³⁾

□ (2010년 예산안) 62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긴축안(savings package)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삭감을 계획

- FY2010-11 총관리지출은 3월 예산안보다 약 72억파운드 감소한 6,968억파운드
 - 부처별지출한도는 약 134억파운드 감소, 연간관리지출은 약 62억파운드 증가
- FY2014-15 부처별지출한도는 FY2010-11에 비해 약 90억파운드 감소
- FY2014-15에 자원(resource) 연간관리지출 약 3,446억파운드, 자본 연간관리지출 약 69억파운드로 예측

13) 영국의 총관리지출(TME)은 연간관리지출(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L)의 합.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성격의 지출로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Spending Review 2010) 연간관리지출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부처별지출한도 증가와 연간관리지출 예비비 설정으로 FY2011-12이후 4년간의 총지출계획은 6월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상향조정

- 복지지출 삭감 등 연간관리지출 억제 정책으로 FY2015-16에는 연간관리지출이 6월 예산안보다 약 106억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부처별지출한도는 6월 예산안보다 다소 상향조정
 - FY2015-16에 자원(resource) 부처별지출한도는 약 73억파운드, 자본 부처별지출한도는 약 16억파운드 증가
- Spending Review에서 계획한 FY2014-15 부처별 지출한도는 FY2010-11에 비해 약 90억파운드 감소
 - FY2014-15 NHS 의료지출은 FY2010-11에 비해 약 106억파운드 증가
 - 특별 예비비(Special Reserve)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OBR Autumn Forecast) FY2011-12의 총관리지출을 약 7,037억파운드로 전망

- 이 중 부처별지출한도가 약 3,718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은 약 3,319억파운드임
- 연간관리지출 전망의 차이로 총관리지출은 2010년 10월 Spending Review보다 FY2010-11에 약 14억파운드, FY2011-12에 약 18억파운드 증가
 - FY2012-13에 약 17억파운드, FY2014-15에는 약 68억파운드 감소한 전망 제시
- 2010년 예산안(6월)과 비교하면 총관리지출은 FY2011-12에 약 38억파운드 상향 전망하고 FY2015-16에 약 46억파운드 하향 전망
 - 특히 FY2013-14 이후에는 사회보장급여 지출과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비용, 순공공서비스연금 지출이 2010년 예산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중도 6월 예산안에 비해 0.1~0.6%p 줄어든 전망

<표 VI-4> June Budget, Spending Review, OBR Autumn forecast 지출전망 차이

(단위 : 십억파운드)

	Forecast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TME in June forecast	696.8	699.8	711.0	722.0	737.5	757.5
TME in November forecast	698.2	703.7	711.3	719.3	733.0	752.9
of which: Total DEL	379.2	371.8	371.9	373.8	373.9	381.2
Total AME	319.0	331.9	339.4	345.6	359.1	371.7
Total change in TME since June forecast	1.4	3.8	0.3	-2.6	-4.5	-4.6
Change in TME in Spending Review2010	-	2.0	2.0	2.3	2.3	-
Increase in resource DEL1	-	-0.4	1.6	5.8	7.3	-
Increase in capital DEL	-	2.0	2.3	2.2	1.6	-
AME measures	-	-0.7	-3.8	-8.8	-10.6	-
Inclusion of AME margin2	-	1.0	2.0	3.0	4.0	-
Changes in OBR forecast compared to Spending Review	1.4	1.8	-1.7	-4.9	-6.8	-4.6
Change in resource DEL1	-0.8	-	-	-	-	9.4
Change in capital DEL	-	-	-	-	-	1.9
Recosting of Spending Review AME measures	-	0.0	0.1	0.8	0.9	-9.9
Removal of AME margin	-	-1.0	-2.0	-3.0	-4.0	-
Adjustment to remove Green Investment Bank transactions	-	-	-	-1.0	-	-
Forecasting changes to AME	2.2	2.9	0.2	-1.6	-3.7	-6.0

주 1. 자원(resource) DEL은 감가상각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보조 비용을 제외

2. OBR Forecast에서는 Spending Review에서 설정한 연간관리지출 예비비(margin)를 제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12

<표 VI-5> 총관리지출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2009-10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경상지출							
자원 DEL	334.9	342.2	342.7	344.4	348.9	348.0	352.8
자원 AME	266.0	293.2	308.3	317.0	323.3	336.5	350.2
사회보장급여 ¹⁾	163.5	169.3	174.5	177.0	176.5	181.2	188.1
세액공제 ¹⁾	22.9	24.1	25.6	26.5	26.3	26.4	26.9
순공공서비스연금 ²⁾	3.2	4.3	5.1	5.3	5.2	5.9	7.0
국가복권	1.0	0.9	1.1	0.9	0.8	0.8	0.8
BBC 내국 서비스	3.5	3.4	3.6	3.5	3.7	3.5	3.6
기타부처지출	0.0	-0.6	1.5	2.3	2.6	2.6	2.7
순 EU분담금	6.4	8.4	8.8	8.4	9.2	10.1	8.3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25.7	26.7	27.2	28.7	30.2	31.5	32.4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30.9	42.7	44.0	48.6	53.5	58.9	63.1
회계 조정	8.9	13.9	16.9	15.6	15.2	15.6	17.3
공공부문 경상지출	600.9	635.4	651.0	661.3	672.2	684.5	703.0
자본지출							
자본 DEL	57.0	51.4	43.5	41.8	39.2	40.2	42.7
자본 AME	12.0	11.4	9.2	8.1	7.9	8.3	7.1
국가복권	0.8	1.0	0.6	0.6	0.6	0.6	0.6
지방재정 지출	6.8	6.5	5.4	5.0	4.6	4.1	3.3
공기업 자체(own-financed) 지출	7.9	7.7	7.5	7.4	7.4	7.7	7.3
중앙정부 보조금 (공공부문 은행)	7.3	0.0	0.0	0.0	0.0	0.0	0.0
기타 자본지출	-1.4	2.0	1.4	1.2	1.5	1.5	1.5
회계 조정	-9.3	-5.8	-5.8	-6.1	-6.2	-5.6	-5.7
공공부문 총투자	69.0	62.8	52.7	49.9	47.1	48.5	49.8
감가상각 공제	-19.5	-20.5	-21.8	-22.8	-23.8	-24.7	-25.7
공공부문 순투자	49.4	42.3	30.9	27.1	23.4	23.8	24.1
총관리지출 ³⁾	669.8	698.2	703.7	711.3	719.3	733.0	752.9
DEL	291.1	319.0	331.9	339.4	345.6	359.1	371.7
AME	378.8	379.2	371.8	371.9	373.8	373.9	381.2
자원 DEL 감가상각	-13.1	-14.3	-14.3	-14.3	-14.3	-14.3	-14.3
총관리지출 GDP 비중(%)	47.7	47.1	45.4	43.7	41.8	40.4	39.3
6월 예산안과의 차이(%p)	0.2	-0.2	-0.1	-0.2	-0.4	-0.6	-0.5

주 1) FY2009-10~FY2011-12까지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은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에 포함

2) 순공공서비스연금(Net public service pensions) 지출은 국민계정 기준으로 작성

3)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한시적 금융시장개입 효과 제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14~15

<표 VI-6> 부처별지출한도(DEL)¹⁾

(단위 : 십억파운드)

	baseline ²⁾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Education	58.4	56.1	56.3	56.2	57.2
NHS (Health)	103.8	105.9	108.4	111.4	114.4
Transport	12.8	13.0	13.1	12.5	12.0
CLG Communities	9.0	5.3	4.0	3.4	3.2
CLG Local Government	28.5	26.1	24.4	24.2	22.9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18.6	17.6	16.7	15.5	14.6
Home Office	10.1	9.4	9.0	8.4	8.3
Justice	8.9	8.6	8.0	7.6	7.3
law Officers' Departments	0.7	0.7	0.6	0.6	0.6
Defence	32.9	33.8	34.4	34.1	33.5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6	1.6	1.6	1.5	1.3
International development	7.8	8.1	8.8	11.3	11.5
Energy and Climate change	2.9	3.0	3.4	3.5	3.7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9	2.6	2.5	2.3	2.2
Culture, Media and Sport	1.5	1.6	1.5	1.3	1.3
Olympics ³⁾	1.0	1.1	0.2	0.0	-0.1
Work and Pensions	7.0	7.8	7.7	7.8	7.8
Scotland	28.2	27.3	27.6	27.5	27.7
Wales	15.0	14.5	14.5	14.5	14.6
Northern Ireland	10.5	10.3	10.3	10.3	10.3
HM Revenue and Customs	3.7	3.8	3.6	3.5	3.4
HM Treasury	0.2	0.2	0.2	0.2	0.2
Cabinet Office	0.4	0.5	0.4	0.3	0.5
Single Intelligence Account	2.0	2.1	2.1	2.1	2.1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1.9	1.8	1.6	1.6	1.5
Reserve	4.1	3.3	3.4	3.5	3.6
Special Reserve	4.1	4.0	3.8	3.8	3.5
Green Investment Bank	-	-	-	1.0	-
Total DEL	378.2	370.1	368.8	370.1	369.1

주: 1)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합계. 단, 감가상각 제외

2) 일회성 지출 및 한시적(time-limited) 지출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3) 올림픽 지출은 문화·미디어·스포츠(Culture, Media & Sport) 부처의 부처별지출한도에 포함됨

출처: Spending Review 2010, Table A.9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 영국 최초의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계 총 2,000억파운드 규모 투자 (2010. 10. 25 발표)
- Spending Review 2010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0억파운드 이상을 배분
 - 고속철도 등 교통분야에 300억파운드 규모 투자 등

□ 지방정부 차입 권한 확대 및 인프라구축 등 지역성장 지원

- 향후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창업한 고용주의 부담 경감과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보협기여금(NICs) 감면
 - 해당 지역 : outside London, South East of England, East England
 - 창업 후 1년 동안 최대 10명의 근로자에 대해 NICs 고용주부담 중 1인당 5,000파운드 면제
- 지역투자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정부에 새로운 차입 권한 부여(Tax Increment Financing, 2010. 9. 20. 발표)
 - 각 지역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전망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지역 인프라구축 및 기타 자본지출 사업에 차입 허용
- 지역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억파운드 규모의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함바 있으며, Spending Review 2010에서는 14억파운드로 상향조정함

□ 이전 노동당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유지와 법인세 개혁 등 기업지원

- 200만~1,000만파운드 규모의 성장자본기금(Growth Capital Fund)으로 중소기업 지원 (2009 Pre-budget 발표)

- 예산안 2011에서 FY2014-15까지 법인세 기본세율을 현행 28%에서 24%로 인하 방침을 확정할 계획
 -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특허 수익에 대해 FY2013-14부터 법인세 저세율(10%) 적용

나. 재정건전화

- ‘연정협약서’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내용 (2010. 5. 11)
 - 의회 절차를 거쳐 구조적 적자에 대한 감축 가속화, 세금인상보다 지출삭감을 통한 적자감축 합의
 - 50일 이내 긴급예산안 마련(6. 22 발표)하고 예산관련 전망은 독립적인 예산책임청(OBR)을 설립하여 수행
 - FY2010-11 비일선 서비스 예산 60억파운드 삭감
 - 아동신탁기금(CTF)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

- FY2010-11 지출삭감(saving package) 발표 (2010. 5. 24)
 - 약 62억파운드의 지출을 삭감하되, 핵심 공공서비스는 보장
 - 학교, Sure Start, 16~19세 대상 교육지출은 지출삭감에서 제외
 - 정부조달사업 계획 조정 등 계약의 연기 및 중단(17억파운드), 정부 컨설팅 및 홍보 비용(11억 5천만파운드), 독립 공공기관 비용(6억파운드), 부동산 비용 삭감(1억 7천만파운드) 등
 - 62억파운드 중 5억파운드는 직업기술교육, 공공주택 등에 재투자 가능

- 저효율 사업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2010. 6. 17)
 - VfM(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
 - 약 20억파운드의 12개 사업 예산삭감, 약 85억파운드 규모의 12개 사업 보류

- 20억파운드 중 약 3억 7천만파운드는 5월 발표한 62억파운드 긴축안에 포함
-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FY2010-11 지출 중 최소 10억파운드 삭감 계획
 - 각 부처와 총 15억 4천만파운드 삭감 합의 (2010. 7. 5)

□ 6월 예산안에서 FY2015-16 경상수지 균형달성 목표 설정 (2010. 6. 22)

- 3월 예산안 이후 6월 예산안의 정책결정으로 FY2010-11에 약 8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 추가 확보
- FY2014-15에 지출삭감 320억파운드, 세금인상 80억파운드 확보 계획
 - 11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개혁 시행
-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15-16에 1.1%까지 감소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는 FY2013-14에 GDP의 70.3%까지 증가하였다가 FY2015-16에 67.4%로 감소 전망

□ 조세회피 방지 계획에 대한 재원 투입 발표 (2010. 9. 20)

- Spending Review 기간(2011. 4~2015. 3) 동안 국세청에 9억파운드 추가 배정
 - 회피 및 탈루 방지, 세금 채무(tax debt) 축소, 조직적 범죄 방지 등 조세회피 방지 대책에 투입
- FY2014-15까지 연간 70억파운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복지예산 삭감 및 공공인력 감축 (Spending Review 2010. 10)

- 복지예산 삭감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FY2014-15에 70억파운드 규모 추가 삭감
 - 6월 긴급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삭감규모는 FY2014-15에 110억파운드 규모
- 근로연령(working-age) 인구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와 세액공제 등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일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Universal Credit 제도로 전환할 계획
 - 제도전환을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향후 4년 동안 20억파운드 배정

- 공공인력 49만명 감축 전망
 - 11월 OBR 경제재정전망에서 33만명으로 축소 전망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의료) 국가의료서비스(NHS) 지출의 실질인상을 보장하고 효율화 프로그램 및 의료제도 개혁으로 지출 감축 노력 (Spending Review 2010)
 - NHS 재원(funding)에 대해 매년 실질 인상을 보장하고, FY2011-12 ~FY2014-15 기간에 총의료지출의 실질증가율은 0.4%까지로 설정
 - NHS를 통해 사회적보호(social care)에 연간 1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하여 FY2014-15까지 연간 총 20억파운드의 사회적보호 지원
 - 암치료 신약 자금을 연간 2억파운드 인상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자본(투자) 지출은 44억~46억파운드로 일정수준 유지
 - NHS 효율화 프로그램(Quality, Innovation, Productivity & Prevention: QIPP)을 통해 FY2011-12~FY2014-15까지 연간 200억파운드의 지출절감 목표 설정
 -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발표한 암환자 1:1 간호 등 일부정책은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연기
 - 2013년까지 1차 진료기관(Primary Care Trusts)과 전략 의료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을 폐지
 - NHS 관리구조의 단일화, 비용절감 및 일선 의료인력 역량강화 도모
 -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위해 18개의 정부 산하 의료기관(Arms Length Bodies)을 2013년까지 10개로 축소

□ (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 기준 변경

- 기초국가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20년 기준 66세로 상향 조정
 - 2015~2025년까지 약 300억파운드의 지출 절감 기대
- 2011년 4월부터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 인상기준 변경을 적용하여 연금수급자 소득 지원
 - 물가, 임금, 2.5% 중 높은 기준에 연동한 급여인상으로 약 1,10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공공서비스연금 개혁을 위해 독립위원회(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에서 검토를 진행 중 (2010. 11. 26)
 - 급여수준, 기여율 등 단기적 요소와 중장기 제도개혁에 대한 위원회 검토 내용은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
 - 대표적으로 지방정부, NHS, 교사, 공무원, 군인 연금이 공공서비스연금에 해당되며, FY2008-09 기준 지출은 320억파운드로 기초국가연금 비용의 약 2/3에 해당

□ (기타 복지) 고용지원수당 축소, 근로세액공제 동결 등 재정긴축 강화를 위한 복지급여 축소

- (아동) 고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급여(Child Benefit) 동결, 저소득 가구에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 강화
 - 연간 21,600파운드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제도변화로 소득지원 효과 강화
 - 2013년부터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의 고세율 납세자는 자녀급여(Child Benefit)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복지급여 상한) 가구 기준으로 총 사회보장급여의 상한(Benefit Cap) 설정
 - 비근로가구의 복지급여가 평균가구소득을 상회하지 않도록 근로가구의 세후(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 설정
 - 2013년에 부부 혹은 한부모 가구의 평균소득은 주당 506파운드, 독신가구는 주당

350파운드 정도로 예상됨(현재 근로가구의 세후 중위소득은 주당 479파운드)

- (복지급여 간소화) 2012년까지 다양한 자산조사 복지급여와 세액공제 제도를 Universal Credit 제도로 전환할 계획

<표 VI-7> Spending Review 2010의 복지급여 삭감 내용

개혁안	세부내용	재정긴축 규모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AG(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포함되는 경우 ESA를 1년간으로 제한 약 1백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ESA는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주 91~97파운드 지급 	FY2014-15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전쟁미망인연금(War Widow Pension), 일회성 급여는 제외 	FY2014-15기준 연간 2억 7천만파운드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부터,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 	FY2014-15 기준 연간 25억파운드
근로세액공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기본 요소(basic elements)와 30시간 요소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분만 적용 현재 기본요소는 연간 1,920파운드, 30시간 요소는 연간 790파운드임 	FY2014-15기준 연간 6억 2,500만파운드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4월부터 2자녀 이상의 부부의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부부합계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추가 현행: 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FY2014-15기준 연간 3억 9천만파운드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는 비용의 80%에서 70%로 삭감 	FY2014-15기준 연간 3억 8,500만파운드
지역주거수당에서 Shared Room Rate 연령제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Shared Room Rate는 지역주거수당 규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25세 미만의 독신에 대해 적용 연령제한을 3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비율을 적용 중증장애 요건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되며, 연령제한 확대 조치는 총 8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기준 연간 2억 1,500만파운드
장애생활수당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2-13부터 요양시설 수급자의 장애생활수당 중 이동편의서비스 요소 부분 지급중지 자가거주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5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기준 연간 1억 3,500만파운드
지방세보조급여 삭감 및 지방부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3-14부터 지방세보조급여(Council Tax Benefit)를 최대 10% 삭감하고 지방정부 및 권한이양행정부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FY2014-15부터 연간 4억 9천만파운드
연금공제에서 연령가산부분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금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연령가산(Saving Credit) 한도를 2015년까지 동결 최대한도는 독신 20.52파운드, 부부 27.09파운드로 약 180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기준 연간 3억 3천만파운드

VII. 호주

□ FY2010-11 : 2010. 7~2011. 6

□ 출처 :

- Budget overview 2010-11, 2010. 5
- Budget Paper No.1~No. 2 2010-11, 2010. 5
-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2010. 7
- Final Budget Outcome 2009-10, 2010. 9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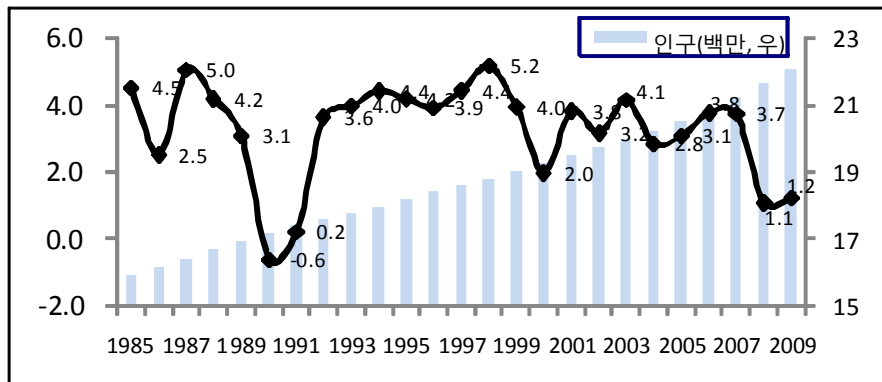
□ 환율 : 1호주달러 = 약 1,063.5원(201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8,765억달러(우리나라 0.7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39.9%(우리나라 95.9%)

□ 인구 : 2,210.1명(2009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추세를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재정규율 강화로 예상보다 빠른 FY2012-13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예산 흑자로의 빠른 전환(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이라는 기조 아래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 자원세(Resource Tax) 도입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경제성장 가속화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 개혁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 호주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자원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 재정건전화
 -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연금 관련)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2009년 5월에 발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2. 3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 경기부양책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5. 12	FY2009-10 예산안 발표	
2009. 5. 1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개혁안 발표	
2009. 5. 12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경기부양책 발표	
2009. 5. 12	추가세입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및 지출절감을 통한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	
2009. 9. 29	FY2008-09 결산 발표	
2009. 11. 2	FY2009-10 반기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0. 2. 1	장기 재정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5. 11	FY2010-11 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 5. 11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 개혁 발표	
2010. 5. 11	실질지출증가율을 제한하는 재정규율 강화 정책 유지	
2010. 7. 14	총선을 대비한 수정예산안(Economic Statements) 발표	
2010. 7. 26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0. 8. 21	호주 총선 실시 결과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	재정동향 4호
2010. 9. 24	FY2009-10 결산 발표	
2010. 11. 9	FY2010-11 반기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성장) 적시의 통화 및 재정정책 수행의 성공적인 결과로 향후 2년간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기업투자와 수출, 민간부문의 회복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FY2010-11 및 FY2011-12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75%와 4%로 전망
- (고용) 지난해 경기부양조치로 약 3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도 점차 하락하여 FY2011-12에 4.5%를 기록할 전망
- (물가) 예산안 전망시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5~3%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VII-1>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경제성장률	2.0	3.25	3.0	3.25	4.0	3.75	3.75	3.0	3.0	3.0	3.0	3.0	3.0
고용증가율	2.5	2.25	2.25	2.5	2.0	2.0	2.0	1.5	1.5	1.5	1.75	1.5	1.5
실업률	5.25	5.0	5.0	4.75	4.75	4.75	4.5	5.0	5.0	5.0	5.0	5.0	5.0
CPI	3.25	2.5	2.75	2.75	2.5	2.75	3.0	2.5	2.5	2.5	2.5	2.5	2.5
경상성장률	2.75	8.25	9.25	9.0	5.75	5.25	5.0	5.5	5.25	5.25	5.5	5.25	5.25

자료: Budget 2010-11, 2010. 5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나. 재정전망

- 추세를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실질지출증가율 제한 조치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FY2012-13에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예산수지) FY2010-11의 예산수지는 415억호주달러(GDP대비 3%)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여 FY2012-13에 예산흑자로 전환
 - FY2010-11의 경우 예산안 및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전망보다 예산 적자폭이 확대된 주된 이유는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세수가 감소한 데 기인
 - (순채무) FY2010-11의 순채무는 796억호주달러(GDP대비 5.7%)로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FY2011-12에 예산안 전망보다 채무수준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Future Fund의 장단기 투자전략의 변경되는 것에 주로 기인
 - 순채무를 감소시키는 채권투자(fixed income investments)에서 순채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투자(equity investments)로 변경

- 재정여건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 예산수지는 FY2016-17에 GDP대비 1%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순채무는 FY2011-12에 GDP대비 6.4% 수준으로 상승한 후 점차 하락하여 FY2019-20에 -2%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09-10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재정수입 ¹⁾ (Revenue)	292.8	321.8	321.8	319.7	356.4	358.1	355.4	381.9	383.0	380.3	407.2	404.9	400.5
GDP대비 비율	22.5	22.9	22.7	22.8	24.0	24.0	24.2	24.3	24.4	24.5	24.6	24.4	24.5
재정지출 ¹⁾ (Expenses)	339.2	354.6	354.1	354.3	364.6	362.7	362.0	381.0	378.8	376.8	398.0	395.7	392.5
GDP대비 비율	26.1	25.2	25.0	25.3	24.5	24.3	24.6	24.3	24.1	24.3	24.0	23.9	24.0
재정수지 ²⁾ (Fiscal balance)	-52.9	-39.6	-39.4	-41.9	-12.1	-8.7	-10.9	2.0	0.1	4.2	6.3	6.1	4.3
GDP대비 비율	-4.1	-2.8	-2.8	-3.0	-0.8	-0.6	-0.7	0.1	0.3	0.3	0.4	0.4	0.3
예산수지 ³⁾ (Underlying cash balance)	-54.8	-40.8	-40.7	-41.5	-13.0	-10.4	-12.3	1.0	3.5	3.1	5.4	4.5	3.3
GDP대비 비율	-4.2	-2.9	-2.9	-3.0	-0.9	-0.7	-0.8	0.1	0.2	0.2	0.3	0.3	0.2
순채무 (Net debt)	42.3	78.5	80.6	79.6	90.5	89.4	94.4	93.7	89.5	93.6	90.8	87.1	92.5
GDP대비 비율	3.3	5.6	5.7	5.7	6.1	6.0	6.4	6.0	5.7	6.0	5.5	5.2	5.7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기준.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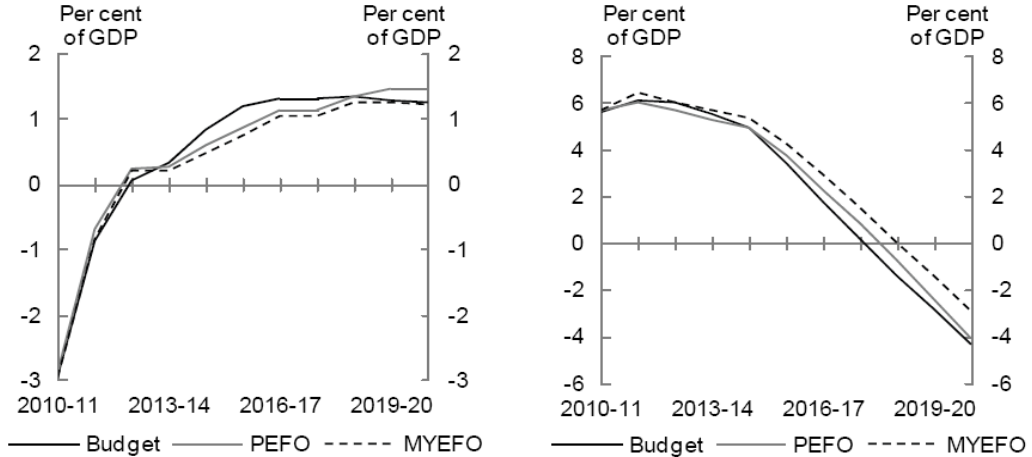
자료: Budget 2010-11, 2010. 5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7

Final Budget Outcome 2009-10, 2010. 9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그림 VII-1] FY2019-20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호주 정부는 FY2008-09부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안된 중기 재정전략을 계속해서 유지
 - (중기 재정전략) ① 경제 순환기 전반에 걸친 예산 흑자 달성, ② FY2007-08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 유지, ③ 중기적(medium term)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증가 임

- 2009년 2월, 중기 재정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침체기와 경제 회복기로 나눈 2단계 재정전략을 수행
 - (1단계 재정전략)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기간에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산적자를 주도하는 세입과 지출의 변동을 감안
 - 기존의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과 예산 우선성 목표에 부합하는 지출로 경기진작을 도모
 - (2단계 재정전략) 경제가 정상화되고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정부는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
 -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입여력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FY2007-08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유지

- 최소 GDP대비 1%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

- 지난해 예산안을 통해 1단계 재정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호주 정부는 금년 예산안에서 가능한 빨리 예산 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2단계 재정전략을 수행
 - FY2010-11의 조세부담률은 FY2007-08의 조세부담률 수준인 23.6%보다 2.6%p 감소한 21%로 전망
 - FY2010-11~FY2013-14까지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계획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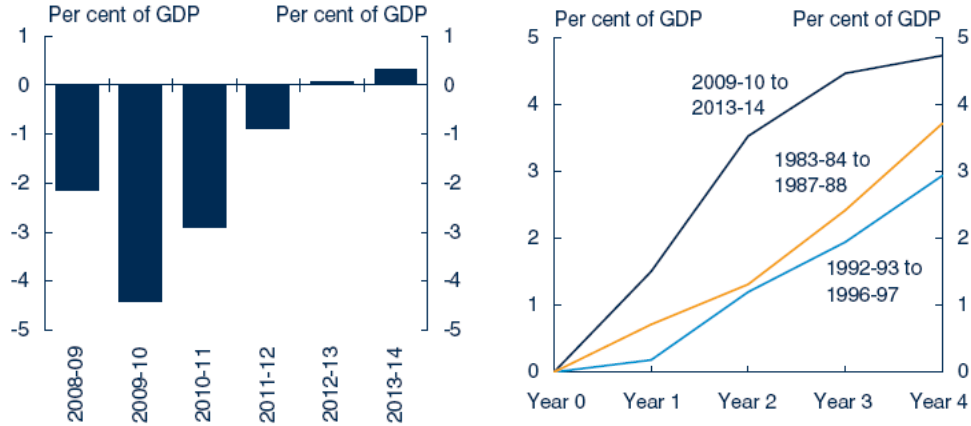
<표 VII-3> 향후 4년간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1.5	-1.1	1.0	1.6

주: 실질지출증가율은 현금주의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긴축재정기조의 수행으로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비하여 예산수지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그림 VII-2] 예산수지 전망(좌) 및 재정건전화 조치로 인한 예산수지 개선효과(우)



자료: Budget 2010-11, 2010. 5

2. 예산기준

□ FY2010-11 예산안은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예산 흑자로의 빠른 전환(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이라는 예산기준 아래 다음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둬

○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

- FY2008-09에 추진된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세 번째 단계로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하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상향 조정(35,001호주달러 → 37,001호주달러)
- 38%의 소득세율을 37%로 1%p 인하
- 저소득층의 세액공제금액 확대(1,350호주달러 → 1,500호주달러)로 효과적인 면세구간은 16,000호주달러로 인상¹⁴⁾

14) 연소득이 16,000호주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6,000호주달러는 세율이 '0'이고, 10,000호주달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은 1,500호주달러가 되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로 세액이 감면되므로 소득세를 면제 받게 됨

- 고령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폭 확대
 - 독신일 경우 연간소득이 30,685호주달러(현행 29,867호주달러), 부부일 경우 1인당 26,680호주달러(현행 25,680)까지 세금을 면제

<표 VII-4> FY2008-09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인소득세 변화 추이

현행 세율 기준 소득구간(A\$)	세율 (%)	2008.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09.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10.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LITO(A\$)	750		1,200		1,350		1,500
효과적인 면세구간(A\$)	11,000		14,000		15,000		16,000

자료: Budget 2008-09, 2008. 5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
 - 자국 노동력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 6,120만호주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훈련(Skills for Sustainable Growth)’ 전략을 수행
 - 2억호주달러 규모의 핵심기술투자펀드(Critical Skills Investment Fund)를 조성하고 견습프로그램(Kickstart Apprenticeship)을 시행하여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
 -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훈련제도에 2억 4,300만호주달러를 투자
 - 식자능력 및 수리능력(literacy, language and numeracy) 향상 등 기초학습능력 개선을 위해 약 1억 1,000호주달러를 투자
 -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 56억호주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펀드¹⁵⁾를 조성하여 향후 10년간 도로, 항만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사업을 지원
 - 호주의 물류운송능력 강화를 위하여 호주철도회사(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의 철도네트워크사업에 10억호주달러를 투자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 저오염 경제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6억 5,250만호주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기금을 조성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원
 - 동 기금의 조성으로 기존 청정에너지계획은 51억호주달러 규모로 확대
- 자원세(Resource Tax) 도입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경제성장 가속화
-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세를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참조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FY2013-14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1%p 낮은 29%의 법인세율을 적용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¹⁶⁾ 개혁
- 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분담률(Superannuation Guarantee)을 현행 9%에서 2019년 7월 1일까지 12%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근로자의 나이를 현행 18~70세에서 18~75세로 확대하여 적용
 - 2012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연소득 37,000호주달러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매년 일정액(최대 500호주달러)을 적립하고,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적립액이 50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추가적립을 허용

15) 동 기금의 재원은 자원세제 개혁에 따른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임

16) 동 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노인수당(Age pension)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용주는 월 450호주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18~70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9%를 의무적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 연금펀드에 적립해야 하는 제도임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
 - 일반의 진료시설(GP Super Clinics) 확충 및 개선을 위해 3억 5,500만호주달러 지출 계획
 - 언제라도 이용가능한 응급진료센터 서비스 제고를 위해 4억 1,700만호주달러 배정
 - 간호사 교육훈련 지원 등 간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5억 2,300만호주달러 투자
 - 개인 의료정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6,670만호주달러를 투자

<참고 1> 자원세제 도입

- 호주정부는 FY2010-11 예산안을 통해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 Super Profit Tax) 도입을 발표
 - FY2003-04 이후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세부담액에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 부과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
 -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가 적용되는 해상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모든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수익에 40%의 세율로 세금 부과
 - 연방정부의 자원 관련 세금(crude oil excise tax)은 자원초과이익세로 통합되나,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지속
 - 자원초과이익세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은 자원분야에의 환원 및 금번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
- 그러나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후 광산업계의 반발이 심하여 협상 타결이 어려워 지자 2010년 7월 기존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해 기업들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

- 세금의 명칭을 자원초과이윤세에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로 변경
- 광물자원임대세는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으로 국한시켜 적용하여 기존 적용대상기업 2500개에서 320개로 대폭 축소
 - 석유자원임대세를 확장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석유·가스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세율도 기존 40%에서 30%로 10%p 세율 인하
 - 또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도 확대하여 수익률의 12.7%(기존보다 7% 추가 인정)까지 광물자원임대세를 과세면세함
- 수정된 자원세제개혁에 따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5억호주달러 정도 세입이 줄어들 전망으로 동 재원으로 추진될 기타 세제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 법인세율 인하폭 수정: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FY2012-13부터 2%p 인하한 28% 세율 적용이었으나 자원세제 수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1%p 인하된 세율 적용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인 3,218억호주달러(GDP 대비 22.9%)로 전망
 - 조세수입은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력이 회복되어 전년대비 12.2% 증가한 수준
 - 고용여건 개선과 임금상승률의 증가, 기업실적 개선,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호주중앙은행의 배당금 감소와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Scheme for Large Deposits)의 수수료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1.6% 감소

<표 VII-5> FY2010-11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08-09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20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 재정수입(Total Revenue)	298.9	294.2	321.8	356.4	381.9	407.2
전년대비 증가율	-1.6	-1.6	9.4	10.7	7.2	6.6
GDP대비 비율	23.7	22.7	22.9	24.0	24.3	24.6
- 조세수입	278.7	269.5	302.5	336.4	361.9	386.4
전년대비 증가율	-2.6	-3.3	12.2	11.2	7.6	6.8
GDP대비 비율	22.1	20.8	21.5	22.6	23.1	23.3
- 세외수입	20.3	24.7	19.4	20.0	20.0	20.8
전년대비 증가율	16.0	21.7	-21.6	3.2	0.1	4.0
GDP대비 비율	1.6	1.9	1.4	1.3	1.3	1.3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 1 2010-11, 2010. 5

□ 예산안 발표 이후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경제적 변수 변화 효과로 재정수입이 다소 감소

○ 5월 예산 책정시 호주달러대비 미국달러는 90센트 수준이었으나 최근 1.01달러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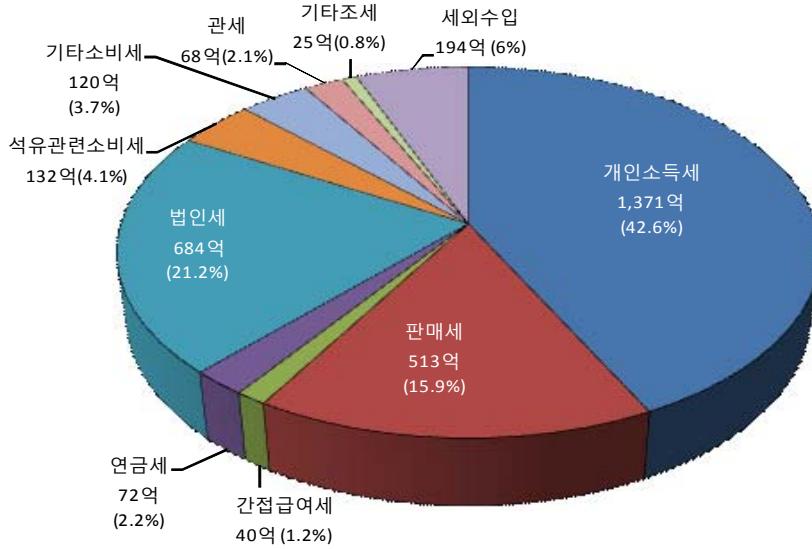
<표 VII-6>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09-2010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재정수입(Total Revenue)	292.8	319.7	355.4	380.3	400.5
전년대비 증가율	-2.0	9.2	11.2	7.0	5.3
GDP대비 비율	22.5	22.8	24.2	24.5	24.5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그림 VII-3]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 내역



나. 세출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준인 3,546억호주달러(GDP 대비 25.2%)로 전망
- FY2008-09 및 FY2009-10에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종료로 향후 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

<표 VII-7> FY2010-11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공공서비스	20.1	21.2	20.9	21.1	21.7	21.8	22.7	22.7
국방	21.0	21.1	20.5	19.9	21.3	20.7	22.9	22.1
공공질서 및 안전	3.9	3.9	3.9	3.9	3.9	3.9	4.0	4.0
교육	33.0	33.0	29.6	29.4	30.3	30.1	31.3	31.0
보건	56.9	57.4	72.0	72.1	75.8	76.0	80.1	80.3
사회보장 및 복지	115.0	115.7	119.8	120.5	125.2	126.2	130.5	131.1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4	5.8	4.2	4.5	4.2	4.4	4.2	4.2
문화	3.2	3.3	3.2	3.2	3.1	3.2	3.2	3.2
에너지·연료	7.6	7.2	7.3	7.4	7.1	7.1	6.8	6.8
농림수산	3.6	3.7	3.0	3.0	2.6	2.4	2.3	2.1
광업, 건설·제조	2.0	2.0	2.5	2.0	2.5	2.0	2.6	2.0
교통·통신	4.9	5.1	6.7	6.7	8.2	7.3	7.0	6.2
경제 (other economic affairs)	9.1	8.9	8.6	8.4	8.5	8.2	8.5	8.3
기타 지출	68.8	65.9	62.5	59.7	66.5	63.6	72.0	68.6
총지출	354.6	354.3	364.6	362.0	381.0	376.8	398.0	392.5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FY2010-11 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타 지출) 주 및 준주에 대한 일반세입보조 및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증가 등의 기타지출은 688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14.2% 증가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은 1,150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및 소득보조지급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
- (보건) FY2010-11 보건분야 지출은 569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 및 의료개혁을 수행함에 따른 지출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FY2010-11의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지출은 54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39.8% 감소

- 경기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단계적으로 삭감되는 데 주로 기인

○ (교통 및 통신) FY2010-11의 교통 및 통신분야 지출은 49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25.7% 감소

- 지난해 도로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편성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 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결정 및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감소

<표 VII-8>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총합계
▪ 2010-11예산안 재정지출	354,644	364,573	380,997	397,981	-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296	-2,572	-4,209	-5,469	-12,546
- 정책결정효과 ¹⁾	220	-103	-420	-173	-476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효과 ²⁾	-515	-2,468	-3,789	-5,298	-12,070
▪ 2010-11 MYEFO 재정지출	354,348	362,002	376,789	392,512	-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 (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2)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동(실업급여, 가격지수 및 임금, 이자 및 환율, 주정부에 대한 GST 지급 등) 및 공공채무 이자, 기타 변동분 등이 포함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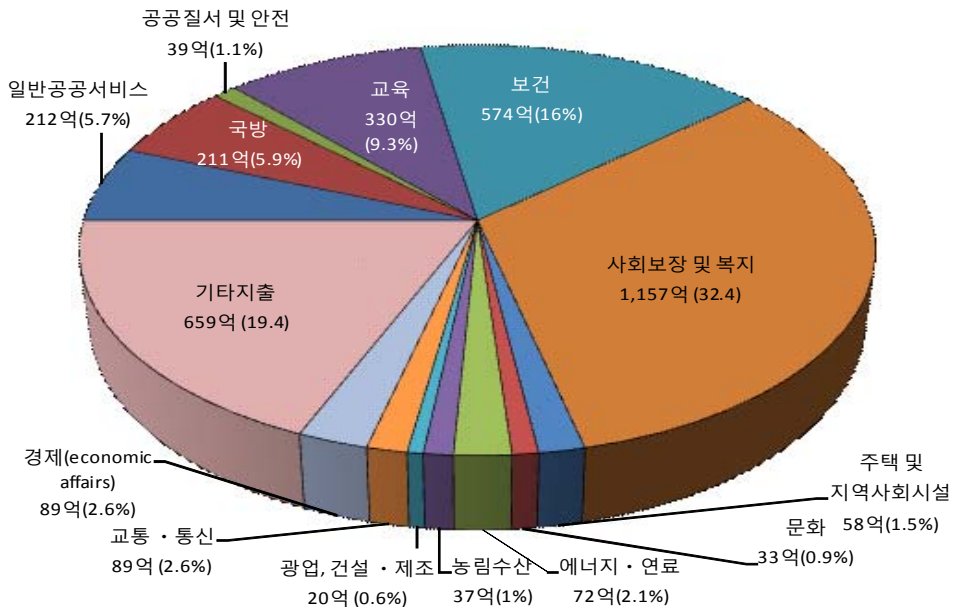
○ 정책결정효과로 인한 재정지출 변동 내역

- 최우선 지역인프라 프로그램(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도입으로 FY2011-12부터 약 3년간 지출 증가

-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의 자동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협의에 대한 비용으로 FY2010-11부터 약 4년간 지출 증가

- 지역사회 정신건강 개선 및 자살 방지를 위해 FY2010-11부터 약 4년간 지출 증가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에 따른 효과로 인한 재정지출 변동 내역(보수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약 34억호주달러 수준의 비용 삭감 포함)
 - 노동시장여건 개선으로 호주 고용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출 감소
 - FY2009-10에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서비스의 이용실적 저조를 반영하여 메디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지출 감소
 - 서호주 정부에 근해 석유 특허권(Offshore Petroleum Royalties) 지급으로 인한 지출 증가
 - 장애지원연금비용은 수급자 및 평균 지급률의 빠른 상승률로 지출 증가

[그림 VII-4] FY2010-11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자원 배분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 경기부양

- 호주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 FY2008-09에는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및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
 - 이에 더하여 FY2009-10에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를 발표하여 경제성장 제고에 주력

- FY2010-11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발표하지 않고 이전에 수행했던 정책의 일환으로 동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3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교육분야 - 교육혁신정책(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social housing)
 - 교통·통신분야 - 미래를 위한 국가건설계획(Nation Building Plan for the future)

2)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자원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 2000년대 들어 자원붐으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부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 자원세 도입으로 확보된 세수는 인프라 건설 및 자원관련 분야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사용될 것임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나. 재정건전화

□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 경제성장이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고 GDP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로 운영

□ 2009~2010년 동안 호주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음

날짜	주요 내용																	
2009. 5. 12 (FY2009-10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세계개편을 통해 추가 세입원 확보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19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 (FY2009-10 예산안을 통하여 FY2011-12~FY2012-13의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 ▪ 위와 같은 조치로 FY2015-16에 예산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2010. 5. 12 (FY2010-11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대비 1%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긴축재정기조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FY2009-10</th> <th>FY2010-11</th> <th>FY2011-12</th> <th>FY2012-13</th> <th>FY2013-14</th> </tr> </thead> <tbody> <tr> <td>실질지출증가율(%)</td> <td>4.9</td> <td>0.9</td> <td>-0.6</td> <td>1.7</td> <td>1.9</td> </tr> </tbody> </table>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0.9	-0.6	1.7	1.9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0.9	-0.6	1.7	1.9													
2010. 11. 9 (FY2010-11 반기경제·재 정전망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발표시보다 더 강한 재정지출 감축안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계기간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FY2009-10</th> <th>FY2010-11</th> <th>FY2011-12</th> <th>FY2012-13</th> <th>FY2013-14</th> </tr> </thead> <tbody> <tr> <td>실질지출증가율(%)</td> <td>4.9</td> <td>1.5</td> <td>-1.1</td> <td>1.0</td> <td>1.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FY2012-13에 예산흑자를 달성할 계획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1.5	-1.1	1.0	1.6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1.5	-1.1	1.0	1.6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연금 관련)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2009년 5월에 발표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하여 노령연금(Age pension)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 2017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65.5세로 상향 조정
 - 이후 2년마다 수령연령이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 1일에는 67세에 도달
- 연금 소득심사(income test)에 적용되는 누진율 변경
 - 2009년 9월 20일부터 소득심사에 적용되는 누진율을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
 - 소득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독신의 경우 초과 소득 1호주달러당 연금지급금이 50센트씩, 부부의 경우 각각 25센트씩 감소(단, 연금 전액 수혜자는 해당사항 없음)
- 330만명의 연금수혜자(노령연금, 장애인지원연금, 미망인연금 등)들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금 인상조치
 - 2009년 9월 20일부터 독신을 위한 최대 연금요율을 2주 기준 65호주달러로 인상
 - 이는 기준 기초연금 인상분 60호주달러에 새로운 연금보조금 5호주달러를 추가한 형태임
 - 부부를 위한 최대 연금요율은 2주 기준으로 20.3호주달러 인상
 - 부분요율 적용 대상 독신인 경우 2주 기준 최소 20.2호주달러의 부분적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
- 연금수혜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간소화
 - 2009년 9월 20일부터 현재 연금과 더불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allowance)과 새로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¹⁷⁾ 형태로 지급

17) 연금보충금이란 일상 가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령자로 소득지원지급금을 받고 있거나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간호인 지급금(Carer Payment), 미망인B연금(Widow B Pension), 아내연금(Wife Pension),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세 보충금(Good and Service Tax Supplement), 공공요금 수당(Utilities Allowance), 전화비 수당(Telephone Allowance), 의약품비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임